

I. 계획수립 배경 및 개요	1
1. 계획 수립 배경	3
2. 계획 수립 목적	4
3. 계획 수립 범위	4
4. 계획 수립 방법	5
5. 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6
II. 계획수립 여건 및 정책 환경	7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9
2. 인천광역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분석	41
3. 인천광역시 정책 환경 분석	8
III.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 이행평가	5 8
1. 1차 종합계획 개요 및 특징	8
2. 1차 종합계획 추진성과 및 종합평가	09
3. 1차 종합계획 영역별 평가	9
IV.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수요조사	18
1. 설문 조사	145
2. 면접 조사	209
V. 종합계획의 구조	23
1.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25
2.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29
3. 종합계획의 구조 및 정책과제	32

VI. 정책과제	239
1영역.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4
2영역.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8
3영역.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9
4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8
VII. 정책과제 목록	349
■ 참고 문헌	358
■ 부록	361

표 차례

<표 II-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0	1
<표 II-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2	1
<표 II-3>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예산 현황	7	1
<표 II-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체계	8	1
<표 II-5>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2020)	0	2
<표 II-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1	2
<표 II-7>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2022)	2	2
<표 II-8>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 (2021)	2	2
<표 II-9>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2021)	3	2
<표 II-10>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인구 및 세대 수	3	2
<표 II-11> 인천 군구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2022)	4	2
<표 II-12> 인천광역시 출생·사망·혼인·이혼 인구동향 (2017-2021)	4	2
<표 II-13> 인천광역시 합계출산율 전국, 특광역시 비교	5	2
<표 II-14>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 비율 2019-2022 비교	5	2
<표 II-15> 인천광역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 (2022)	6	2
<표 II-16> 인천광역시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2019년 기준)	7	2
<표 II-17>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생산연령인구) 인구 전망	8	2
<표 II-18>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고령인구) 인구 전망	8	2
<표 II-19>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학령인구 및 청소년) 인구 전망	9	2
<표 II-20> 인천광역시 성별에 따른 장래 인구 추계	9	2
<표 II-21> 인천광역시 다문화 가족 (2020)	0	3
<표 II-22> 인천광역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주민 현황	1	3
<표 II-23> 인천광역시 1인 가구	1	3
<표 II-24> 인천광역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변화	2	3
<표 II-25> 인천광역시 60세 이상 1인 가구 (2020)	2	3
<표 II-26> 인천광역시 한부모 가구 현황 (2016-2021)	4	3
<표 II-27>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세대구성별 한부모가구 수	4	3

<표 II-28>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 현황	5	3
<표 II-29> 인천광역시 청년 가구	5	3
<표 II-30> 인천광역시 청년 가구주 성별 현황	6	3
<표 II-31> 인천광역시 청소년 및 청년 인구 전망	6	3
<표 II-32>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7	3
<표 II-33>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성별	8	3
<표 II-34>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9-2020)	9	3
<표 II-35> 인천광역시 산업별 종사자 성별 현황(2020)	9	3
<표 II-36> 인천광역시 사업체 대표자 성별	0	4
<표 II-37> 인천광역시 산업 대표자/종사자/종사상 지위 (2017-2020)	1	4
<표 II-38>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규모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020)	2	4
<표 II-3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고용 현황 (2020)	3	4
<표 II-4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산업별 현황 (2020)	3	4
<표 II-41>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2019)	5	4
<표 II-42>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2020)	6	4
<표 II-43> 인천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 (2015-2020)	7	4
<표 II-44>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021)	8	4
<표 II-45> 최근 5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17~2022)	8	4
<표 II-46> 최근 2년 인천광역시 고용률 및 실업률 비율 변화 (2021~2022)	9	4
<표 II-47> 인천광역시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 (2017-2021)	0	5
<표 II-48> 최근 5년 맞벌이 가구 수 및 비율 추이 (2017-2021)	0	5
<표 II-49> 여성경영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2019)	0	5
<표 II-50> 인천광역시 산업별 여성경영인 종사자 수 (2019)	0	5
<표 II-51> 인천광역시 최근 3년 성별 임금격차	1	5
<표 II-52> 자녀 동거 취업 여성 (2017-2021)	2	5
<표 II-53> 인천광역시 여성 일 지원 기관 연도별 추이	2	5
<표 II-54> 인천광역시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기관 (2021)	3	5
<표 II-55> 인천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예방) 운영 현황 (2022)	3	5
<표 II-56>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주요 정책	4	5

<표 II-57> 최근 3년 영유아 인구 대비 공보육 시설 추이 (2019-2021)	5
<표 II-58> 영유아 공보육 시설 현황 (광역시도 비교)	5
<표 II-59>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시설 현황 (2019-2022)	5
<표 II-60>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5
<표 II-61>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현황 (2021-2022)	5
<표 II-62> 인천광역시 아빠육아천사단	5
<표 II-63> 인천광역시 육아휴직 성별 현황	5
<표 II-64>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맞벌이가구 (전국, 2017-2021)	6
<표 II-65>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시설	6
<표 II-66>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
<표 II-67> 인천광역시 여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시설	6
<표 II-68>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이	6
<표 II-69>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이 (2008-2021)	6
<표 II-70> 인천광역시 성별 시간사용 (2019)	6
<표 II-71>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표 -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	6
<표 II-72> 전국 17개 시도 일·생활 균형 영역별 비교	6
<표 II-73> 인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6
<표 II-74> 인천 지역안전지수	6
<표 II-75> 인천광역시 위해지표 추이	6
<표 II-76>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별 추이 (2017-2020)	6
<표 II-77> 인천 시민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별 현황	6
<표 II-78>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변화	6
<표 II-79>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 및 지원 (2021)	7
<표 II-80> 인천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상담, 보호, 자활) (2021)	7
<표 II-81> 인천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 현황 (2021)	7
<표 II-82> 인천 여성폭력피해 상담 현황(2021)	7
<표 II-8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상담 (2021)	7
<표 II-84> 인천광역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도별 추이	7
<표 II-85> 인천 관내 5대 범죄 (2021)	7

<표 II-86> 인천 가정폭력범죄 현황 (2020)	4	7
<표 II-87>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021)	5	7
<표 II-88> 인천광역시 위원회 여성참여 (2021)	6	7
<표 II-89> 인천광역시의회 여성의원비율	6	7
<표 II-90> 성평등 기금 활용 사업 예산	7	7
<표 II-91>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7	7
<표 II-92> 인천 성인지예산 반영 연도별 추이 (2014-2022)	8	7
<표 II-93> 인천 성인지예산 증감 비교 (2021-2022)	8	7
<표 II-94> 젠더 거버넌스	9	7
<표 II-95> 지역 성평등 변화 추이	0	8
<표 II-96> 지역성평등 지수	0	8
<표 III-1>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역사(1998~2027)	8	8
<표 III-2> 영역별 성과 및 향후과제	1	9
<표 III-3> [1영역] 과제 개요	3	9
<표 III-4>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3	9
<표 III-5> <1-2.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5	9
<표 III-6>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과제	6	9
<표 III-7> [2영역] 과제 개요	00	1
<표 III-8>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과제	0	1
<표 III-9>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과제	2	1
<표 III-10>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과제	4	1
<표 III-11> <2-4. 여성일자리 확대> 과제	6	1
<표 III-12> [3영역] 과제 개요	9	1
<표 III-13> <3-1.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	0	1
<표 III-14> <3-2.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	1	1
<표 III-15>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과제	2	1
<표 III-16>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과제	3	1
<표 III-17> [4영역] 과제 개요	7	1
<표 III-18>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과제	7	1

<표 III-19>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과제	8·1 1
<표 III-20> <4-3. 가족친화경영확산> 과제	0·2 1
<표 III-21>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 과제	1·2 1
<표 III-22> [5영역] 과제 개요	421
<표 III-23>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	5·2 1
<표 III-24>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과제	6·2 1
<표 III-25>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과제	8·2 1
<표 III-26>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9·2 1
<표 III-27>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과제	0·3 1
<표 III-28>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과제	1·3 1
<표 III-29> [6영역] 과제 개요	531
<표 III-30>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과제	6·3 1
<표 III-31>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과제	8·3 1
<표 III-32>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과제	9·3 1
<표 IV-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개요	541
<표 IV-2> 성인 응답자 특성	61
<표 IV-3> 청소년 응답자 특성	81
<표 IV-4>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내용	051
<표 IV-5> 인천시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251
<표 IV-6> 인천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비교(1차 2018년도 VS 2차 2020년도) 3·5 1	
<표 IV-7>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651
<표 IV-8>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비교(1차 2018년 VS 2차 2022년) 7·5 1	
<표 IV-9>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	9·51
<표 IV-10>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161
<표 IV-11>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비교	361
<표 IV-12>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여부	461
<표 IV-13>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편의성	561
<표 IV-14>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	861
<표 IV-15>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자녀돌봄 지원 정책	071

<표 IV-16>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271
<표 IV-17>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젠더 폭력 예방 및 해결 정책	371
<표 IV-18>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471
<표 IV-19> 외모 중요도 - 남성	671
<표 IV-20> 외모 중요도 - 여성	771
<표 IV-21>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181
<표 IV-22>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성별, 연령별 비교	481
<표 IV-23> 돌봄 및 일·생활 균형정책 중요도	881
<표 IV-24>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1순위)	0·9 1
<표 IV-25>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1+2순위)	0·9 1
<표 IV-26>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청소년)	291
<표 IV-27> 인천시민(청소년)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비교	3·9 1
<표 IV-28>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5·9 1
<표 IV-29>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6·9 1
<표 IV-30>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8·9 1
<표 IV-31>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주관적 성평등 수준 비교(청소년)	9·9 1
<표 IV-32>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102
<표 IV-33>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22
<표 IV-34> 양성평등 교육 여부 및 필요성 여부	402
<표 IV-35>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502
<표 IV-3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802
<표 IV-37>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면접참여자	9·0 2
<표 IV-38>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주요 질문내용	0·1 2
<표 IV-39>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의미 분석	1·1 2
<표 V-1>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민의 요구사항	722
<표 V-2>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2·3 2
<표 V-3>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핵심과제	832
<표 VI-1> 지방자치(의회, 위원회, 공청회 등) 참여 활동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	3·4 2
<표 VI-2> 인천 여성 공무원 및 시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442

<표 VI-3>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대표성(6~8회/인천, 전국 비교)	542
<표 VI-4>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6년~2020년)	662
<표 VI-5>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추이 (2016~2020)	172
<표 VI-6> 인천광역시 대학 진학률 추이(2016~2019)	272
<표 VI-7> 2020년 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수	92
<표 VI-8> 인천시 가족친화인증기업수 현황	192
<표 VI-9> 응답자 직장유형별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편의성	292
<표 VI-10> 육아휴직자 수 현황(전국, 인천시)	492
<표 VI-1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중요도	592
<표 VI-12> 돌보는 주체에 대한 의견	692
<표 VI-13> 인천시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충족률	892
<표 VI-14> 인천광역시 군구별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	892
<표 VI-15> 전국·인천의 여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	813
<표 VI-16>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913
<표 VI-17> 온라인 그루밍 피해경험 여부	913
<표 VI-18>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123

그림 차례

[그림 II-1]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	6 1
[그림 II-2] 인천 지역 내 총 생산	7 4
[그림 II-3] 전국 17개 시도 일·생활 균형 지수 비교 (2020)	4 6
[그림 II-4] 2019년 대비 2020년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 변화	5 6
[그림 II-5] 지역안전 관련 화재/범죄/생활안전 발생 현황 (2020)	9 6
[그림 III-1]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구조	9 9
[그림 IV-1] 인천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15
[그림 IV-2]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551
[그림 IV-3]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1차 VS 2차)	7·5 1
[그림 IV-4]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주관적 성평등 수준	851
[그림 IV-5]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8
[그림 IV-6] 제도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	761
[그림 IV-7]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11
[그림 IV-8]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81
[그림 IV-9]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481
[그림 IV-10]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981
[그림 IV-11] 인천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191
[그림 IV-12]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4·9 1
[그림 IV-13]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7·9 1
[그림 IV-14]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7·9 1
[그림 IV-15]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0·0 2
[그림 IV-16]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	32
[그림 IV-17] 양성평등 교육 여부 및 필요성 여부	32
[그림 IV-18]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중요도(청소년 응답)	502
[그림 IV-19]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72
[그림 V-1]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방향	622
[그림 V-2]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232

[그림 VI-1] 인천광역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0년~2021년)	762
[그림 VI-2] 인천광역시 성별 고용률 추이(2000~2021)	862
[그림 VI-3] 2020년 하반기 전국지자체 임금 성별비교	902
[그림 VI-4] 2020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현황	072
[그림 VI-5] 2020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172
[그림 VI-6]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	372
[그림 VI-7] 인천광역시 여성노동자 연령별 채용 시 경험한 차별적 질문	472
[그림 VI-8] 2019년 인천광역시 연령별 창업의사 있음 비율	572
[그림 VI-9]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	192
[그림 VI-10] 인천광역시 성별 시간사용(2019)*	392
[그림 VI-11]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부담의 변화	692
[그림 VI-12] 돌봄노동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관련 추진정책의 필요성(성별, 연령별)992	992
[그림 VI-13]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광역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1+2순위)003	003
[그림 VI-14] 여성폭력 대응 기관 인지도	003
[그림 VI-15] 연도별 인천시 스트레스 인지율	223

I. 계획수립 배경 및 개요

1. 계획 수립 배경
2. 계획 수립 목적
3. 계획 수립 범위
4. 계획 수립 방법
5. 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I

계획수립 배경 및 개요

1. 계획 수립 배경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시민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제2차 인천 양성평등 종합계획(2023~2027)」수립이 필요하다.
-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실행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평등 정책은 지역적 특성과 여성의 변화된 삶의 환경을 반영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인천의 지역성평등지수는 지난 몇 년간 중하위권(2015~2019)과 중상위권(2020)에 머물러 있다.
 - 2020년 현재, 인천은 상위 수준으로 평가된 교육·직업훈련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분야 모두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특히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피해자,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등의 지표에서는 성별 격차가 심각하여 우선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역 성평등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계획 수립 목적

- 성평등 정책의 기초 및 방향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방향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의 상황을 반영한 성평등의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성평등한 미래의 비전에 따라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행복한 시민, 평등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평등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3. 계획 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 2023~2027년 (5개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적 범위

- 인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 인천시민 양성평등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성과분석 및 평가
- 인천 양성평등정책의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 인천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및 사업 제시

4. 계획 수립 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정책 자료 분석
- 중앙 및 타 지자체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자료 분석
- 인천광역시 성평등 정책 환경 및 여건 전망 관련 자료 분석
- 정책 자료 및 통계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인천시민 양성평등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 15세 이상 인천시민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표 본 수: 약 2,500명 (지역, 연령, 성별 할당표집)
- 조사내용: 양성평등의식과 경험, 인천의 양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 정책 수요

○ 전문가 자문회의

- 종합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과제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추진
- 학계, 시민사회단체, 현장실무자 등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참여

○ 정책 간담회(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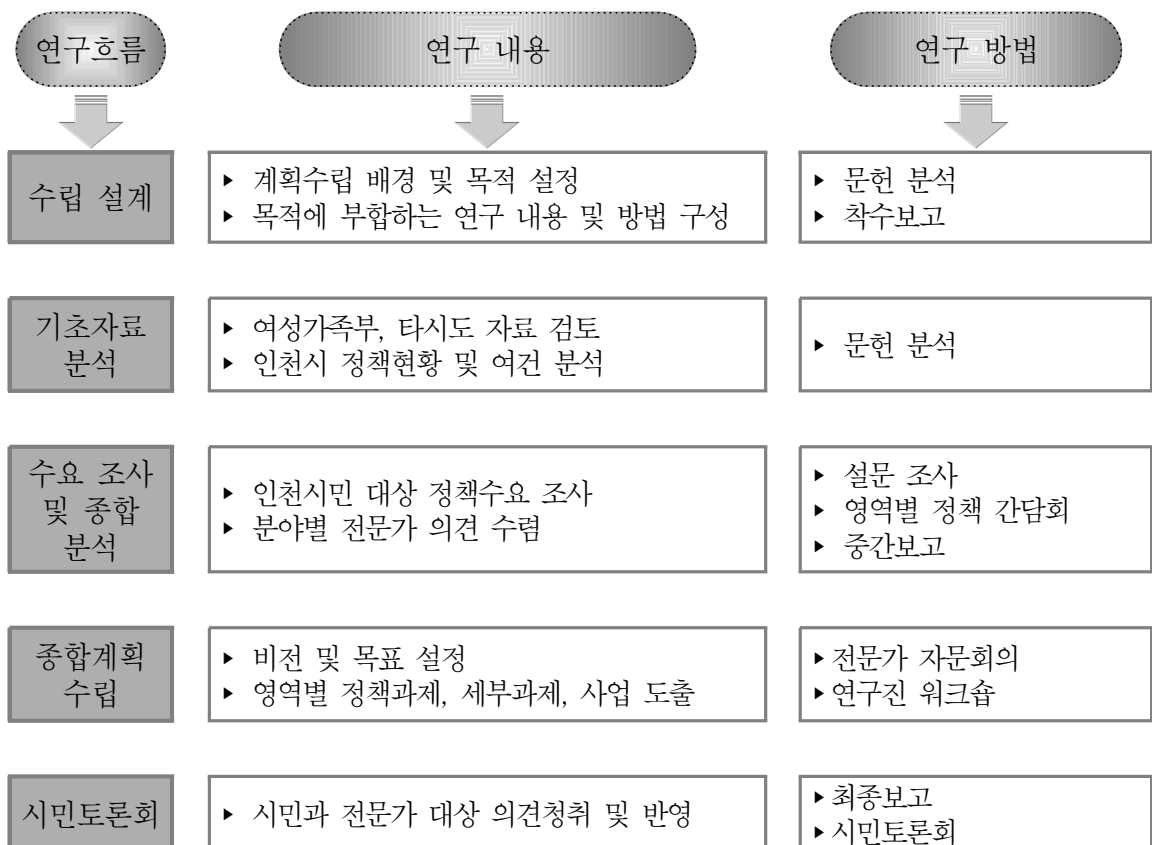
- 영역별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핵심정책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양성평등위원회, 인천시·군구 공무원, 교육청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 시민토론회

-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군구의 젠더 거버넌스 구성원을 포함한 시민의견 청취
-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진

5. 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 계획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Ⅱ. 계획수립 여건 및 정책 환경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2. 인천광역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분석
3. 인천광역시 정책 환경 분석



II

계획수립 여건 및 정책 환경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1. 추진배경 및 방향

-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법률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고 계획의 명칭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변화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다.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다음과 같은 정책수립의 방향을 가진다(여성가족부, 2022).
 - 첫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다. 고용기회 및 근로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균형감 있는 일자리 참여의 확대를 추진한다. 모·부성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일하는 사람의 돌봄 시간 확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돌봄 안전망 구축이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아동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공적돌봄 인프라를 강화하여 양질의 성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돌봄 정책 추진의 근거규정 마련, 돌봄 관련 통계생산,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이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 의료 등 건강이슈 등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하고 성·재생산 관련 건강권 강화를 추진한다.
- 넷째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이다.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기본계획의 구성 및 특징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② 안전과 건강권 증진, ③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대과제와 13개의 중과제, 그리고 44개의 소과제를 구성하였다. 정책추진기관은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다.

<표 II-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대과제(4개)	중과제(13개)	소과제(44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고용기회의 양성평등 제고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미래 일자리 참여 확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모·부성권 보장 강화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 지원
		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대과제(4개)	중과제(13개)	소과제(44개)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아동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공적 돌봄 인프라 강화
		성인 돌봄서비스의 성인지적 개선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
		지역 기반의 가족센터를 통한 돌봄 지원 확대
	돌봄노동 가치 인정 및 체계 구축	돌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노동 전문성 강화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 폭력 대응 강화	조직 및 공동체 역량 향상
		수사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
		생식 건강 증진
		안전한 피임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난임 치료·시술 안전성 강화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학교 성교육 실효성 강화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양성평등한 진로선택 지원
		교육환경 성차별 개선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체계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대중매체 내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콘텐츠 지원
		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구 기능 강화
		중앙-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강화
		시민사회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성인지 정책 분석 내실화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22). 우선,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21.9~10월)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22.6월)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과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이 꼽은 '양성평등 실현' 최우선 과제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또한 임신·출산 영역뿐 아니라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성인지적 건강증진정책 추진을 강화하였다. 건강증진 관련 성별지표를 확대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고, 성·재생산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관련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2).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가입 신규 대상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설계 ▶ 중소기업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근무를 희망하나 여력기반이 취약한 중소사업주 지원 ▶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 연계 강화(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여성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여성, 기업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멘토링 등 지원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p>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40%까지 확대(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기준 22.7% ▶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운영시간 단계적 연장 ▶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 강화(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 군어린이집 및 가족친화인증 부대 확대(국방부) ▶ 돌봄정책 추진 기반 마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정책 근거 규정 마련, 통계 생산,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
<p>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 방지 강화(여가부, 기재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발생 기관 대상 조직문화 및 조직 대응 역량 진단, 사건처리체계 개선 등 ▶ 임신중단 관련 법제도 정비(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단 시술·약물 관련 법제도 정비,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난임 치료·시술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치료·시술자에 대한 상담 강화, 공공 정보포털 통해 필요한 정보 체계적 제공
<p>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진로, 민주시민, 인권, 인성,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연계 강화 ▶ 학교 생활지도 등 교육과정 외에서의 성차별 개선(교육부)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통합적 운영 기반 강화(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통합운영 기반 마련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체제 구축(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예방 및 양성평등 조성을 위한 대학 내 협업체계 구축 점검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권고 기능 추가 등 검토

2 인천광역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분석

1. 법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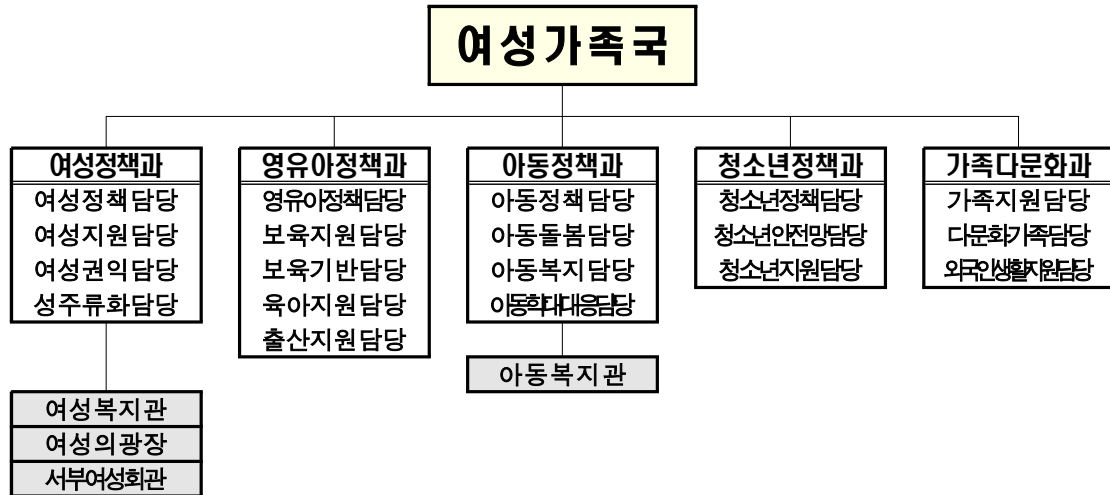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또한 2021년 4월에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 성평등 정책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2004년에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로 제정되었던 조례가 2016년 명칭 및 조항이 전부 개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약간씩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 일부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6장 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정의,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성인지 통계 등 성주류화 전략 추진 도구와 제도, 일·생활 균형제도, 모·부성 권리보장,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성차별 금지 및 젠더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양성평등위원회 구성과 기능, 양성평등기금,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성주류화 추진 전략으로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2021.4 제정·시행)」가 있다. 이 조례는 시의 재정사업에서 성평등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선정, 실적 분석·평가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원칙, 지침서 마련, 예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 지원센터,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 성과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타 시도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전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강원 등에서 시행 중이다.

2. 행정 추진 체계

- 인천시의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국이다(그림 II-1).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가족다문화과로 구성되어 있다. 주무과인 여성정책과에는 여성정책담당, 성주류화담당, 여성지원담당, 여성권익담당이 있다. 또한 시 산하에 사업소 4곳(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1]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



- 여성정책담당은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성주류화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결산·성인지통계·성인지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 추진, 양성평등기금 관리, 여성친화도시 사업,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여성지원담당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취업지원,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여성권익담당은 여성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자립지원,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여성폭력실태 조사 및 공공기관 4대폭력 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1조 606억 5천 7백만 원으로 2021년(9,727억 7백만 원) 대비 87,950백만 원 증가하였다(인천시 본예산 대비 9.0% 증가). 2022년 기준 시의 재정 규모는 총 14조 3,971억 원¹⁾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이 그 중 약 7% 비중을 차지한다.

1) 일반회계 9조 3,264억원, 특별회계 3조 8,178억원, 16개 기금 1조 2,529억원 (출처: 인천광역시 2022년 주요업무계획 p.22)

- 시의 여성정책과 예산은 사업소를 제외하고 여성가족국 내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여성가족국 내에서 기존의 보육정책과 육아지원이 영유아정책과로 편성되었고, 여성가족국 내에서 영유아 돌봄과 보육 지원 관련 예산이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증감
합계	972,707(100%)	1,060,657 (100%)	87,950
여성정책과	17,077(2%)	19,247(2%)	2,170
영유아정책과	602,953(62%) (보육정책과)	689,211(65%)	36,517
	49,741(5%) (육아지원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49,858 (26%) (아동청소년과)	254,720(24%)	-
		26,685(3%)	-
가족다문화과	41,271(4%)	59,160(6%)	17,889
사업소	11,807(1%)	11,634(1%)	△173

주1: 사업소('21): 여성복지관(3,249), 여성의광장(2,890), 서부여성회관(4,169), 아동복지관(1,499)

주2: 사업소('22): 여성복지관(3,243), 여성의광장(3,308), 서부여성회관(4,074), 아동복지관(1,009)

주3: 위 조직 구분은 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조직 편성의 변경으로 증감 대비 공란 있음

출처: 2020, 2021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인천광역시)

3 인천광역시 정책 환경 분석

1. 지리적 특성 및 산업구조

가. 지리적 특성

1) 지리적 환경

인천은 항만, 공업 도시의 특성과 함께 농수산물과 문화관광산업 특성을 갖는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심 지역은 상업 및 주거밀집 지역으로서 서구, 남동, 부평, 미추홀, 연수, 계양, 중구, 동구 등 8개구(인구 순)이며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7월 기준 총인구 3,028,579명(내국인 2,960,580, 외국인 67,999명)으로 광역자치체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도시 면적이 1,065.23km²에 달한다.

2) 행정 구역

인천의 행정구역은 2개 군, 8개 구, 1읍, 19면 135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구별 면적은 강화군이 인천 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높고, 동구의 면적 비중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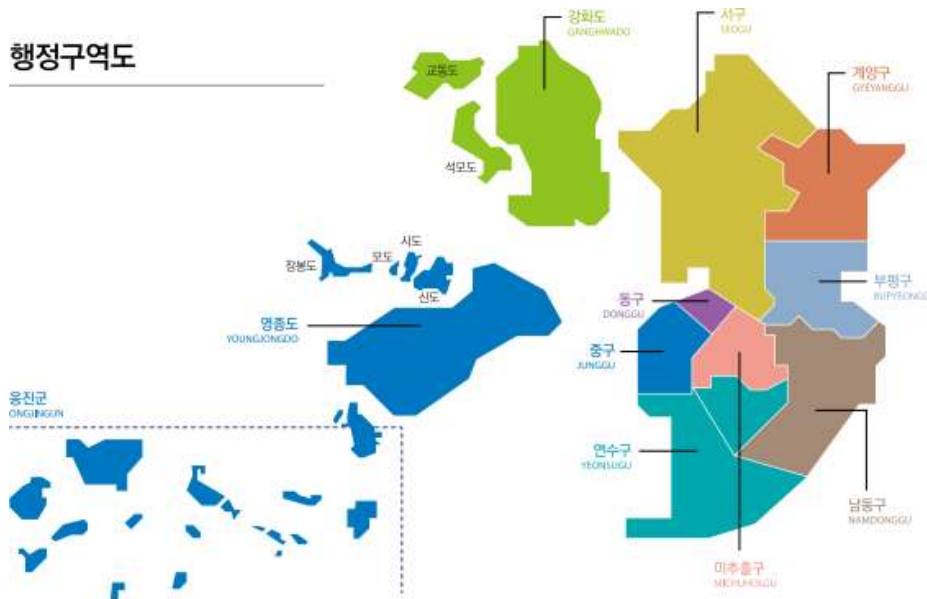
<표 II-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체계

단위 : 개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군구		읍면동				
			2	8	계	읍	면	동	
								행정	법정
전체	1065.23	100	2	8	155	1	19	135	136
중구	140.36	13.2		1	11			11	
동구	7.20	0.7		1	11			11	52
미추홀구	24.83	2.3		1	21			21	7
연수구	56.19	5.3		1	15			15	7
남동구	57.45	5.4		1	20			20	6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군구		읍면동				
			2	8	계	읍	면	동	
								행정	법정
부평구	32.00	3.0		1	22			22	11
계양구	45.57	4.3		1	12			12	9
서구	117.27	11.0		1	22			22	23
강화군	411.42	38.6	1		13	1	12		법정리 (96)
옹진군	172.93	16.2	1		7		7	—	법정리 (26)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21)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인천광역시, 2021)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명칭 변경과 같은 해 3월 1일 강화군(401.3km²), 옹진군(163.6km²), 김포군 김단면(42.2km²)의 통합으로 면적이 955km²이 되었다. 2000년 이후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2005년에는 면적이 994.12km²로 전 국토 면적의 1%로 확장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66.46km²이다. 인천에는 모두 168개의 섬이 있으며, 128개가 무인도이다.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 23.9%, 상업지역 19.6%, 녹지지역 13.4%, 공업지역 58.0%이다(인천광역시 용도지역현황 공공데이터, 2020.12).

나. 산업 구조

1) 산업 비중

인천의 산업 구조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이어서 도소매음식 숙박업(21.1%), 제조업(20.8%) 순이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취업자 수는 156만여 명이다. 2019년 대비 1.3%가 감소하였다. 인천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 수의 5.8% 비중을 차지한다²⁾.

<표 II-5>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2020)

단위 : 천 명, %

구분	전체 취업자수	농림 어업	광공업 전체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전체	건설업	도소매음 식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기타
			광공업	제조업					
전국	26,904	5.4	16.3	16.3	78.3	7.5	21.0	11.8	38.0
인천	1,560	0.9	20.8	20.8	78.3	7.6	21.1	13.9	35.6

출처: 인천의 사회지표 2021, 통계청 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로 인천의 취업자 수(위의 표)를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8.3%), 광공업(20.8%), 농림어업(0.9%) 순으로 취업자 수가 분포되어 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군의 종사자 비중이 인천에서 가장 높다(취업자 수 35.6%). 인천의 제조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는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난다.

2) 인천시 사회지표, 2021,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산업단지 현황

2020년 기준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11,753개 사이다. 인천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대비 590개사가 증가하였다(인천시 사회지표, 2021; 원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 인천 서구에 9곳으로 인천 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국가산단 중에서도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74.9%(6,970사)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부평산업단지, 주안산업단지 순이다.

<표 II-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구분	위치	비고
영종항공산업단지	중구	
인천지방산업단지	미추홀구, 서구	
인천기계산업단지	미추홀구, 서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연수구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남동구	국가산단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부평구	국가산단
한국수출산업주안국가산업단지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국가산단
서운산업단지	계양구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서구	
청라IHP도시첨단산업단지	서구	
1아이푸드파크	서구	
청라제1지구일반산업단지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뷰티폴파크)	서구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	
강화일반산업단지	강화군	
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	강화군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 e한눈에') (검색일: 2022.2.6.20)

2020년 기준 인천의 산업단지 종사자(종업원 수)는 총 169,330명이다. 이 중에서 국가산단 종사자가 80%를 차지한다. 2019년 대비 산업단지 종업원 수가 0.5%(916명) 증가하였다(인천의 사회지표 2021, 한국산업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

2. 인구 및 가구 특성

가. 인구 특성

1) 총인구

2022년 7월 기준 현재 인천의 총인구는 3,028,579명으로 남성 50.2%, 여성 49.8%의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대비 총인구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여성과 남성 수가 모두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 관내 외국인 중 여성의 비율은 44.6%로 외국인 남성의 비율이 높다.

<표 II-7>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2022)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계	3,028,579	1,519,847	1,508,732	49.8
내국인	2,960,580	1,482,177	1,478,403	49.9
외국인	67,999	37,670	30,329	44.6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7월 기준)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총인구는 3,014,739명(내국인 2,948,375명, 외국인 66,364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소폭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내국인의 경우 남성(50.1%) 인구와 여성(49.9%)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표 II-8>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 (2021)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남	여	여성 비율	한국인 (세대)	한국인_계	한국인_남 (비율)	한국인_여 (비율)
전국	52,739,009	26,360,035	26,378,974	50.0	23,472,895	51,638,809	25,746,684 (49.9)	25,892,125 (50.1)
인천	3,014,739	1,513,277	1,501,462	49.8	1,298,647	2,948,375	1,476,373 (50.1)	1,472,002 (49.9)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시도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표 II-9>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2021)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_계 (비율)	외국인_남 (비율)	외국인_여 (비율)
전국	52,739,009	1,100,200 (2.1)	613,351 (55.7)	486,849 (44.3)
인천	3,014,739	66,364 (2.2)	36,904 (55.6)	29,460 (44.4)

출처: 통계청

최근 5년 인천의 세대 수(2021년 약 129만 세대)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인천의 총인구는 감소하였고, 여자와 남자 모두 감소 추세이다(2017년 대비 2021년 3,264명(남), 6,943명(여) 감소). 반면 2021년 기준 외국인 수는 2017년 대비 증가하였다(6%p).

<표 II-10>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인구 및 세대 수

단위 : 명, 세대

구분	총 인구		세대 수		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인천	전국	남자인구	여자인구
2017	2,948,542	62,596	1,188,917	21,632,851	1,479,597	1,468,945
2018	2,954,642	67,869	1,213,201	22,042,947	1,481,844	1,472,798
2019	2,957,026	72,259	1,238,641	22,481,466	1,482,249	1,474,777
2020	2,942,828	67,648	1,267,956	23,093,108	1,473,943	1,468,885
2021	2,948,375	66,364	1,298,647	23,472,895	1,476,373	1,472,002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인천데이터포털 '통계로 보는 인천'

2) 군구별 및 성별 인구 현황

2021년 5월 기준 군구별 인구 현황은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인구가 많다. 세대 수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많다. 여성 인구의 비율은 부평구, 연수·남동구, 계양구 순으로 높다. 세대당 인구수는 연수구(2.47명)가 가장 많고 옹진군(1.68명)이 가장 적다.

<표 II-11> 인천 군구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2022)

단위 : 명, %

구분	인구 수				세대 수 (세대)	세대 당 인구
	합계	남	여	여성 비율		
중구	147,093	76,413	70,680	48.1	72,990	2.02
동구	59,322	29,892	29,430	49.6	27,783	2.14
미추홀구	407,253	205,062	202,191	49.6	194,998	2.09
연수구	387,789	192,562	195,227	50.3	156,685	2.47
남동구	513,965	255,275	258,690	50.3	228,517	2.25
부평구	486,216	239,886	246,330	50.7	215,100	2.26
계양구	293,506	146,230	147,276	50.2	128,214	2.29
서구	569,494	287,422	282,072	49.5	239,984	2.37
강화군	69,940	34,993	34,947	50.0	35,058	1.99
옹진군	20,589	11,693	8,896	43.2	12,259	1.68

주: 2022.5월말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인구 및 세대 현황'

3) 합계출산율

최근 5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년 혼인 건수는 2017년 대비 5천여 건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는데 2019년 이후 2년간 감소하였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기준 0.78명이다. 2018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인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생' 현상이 시작되었다.

<표 II-12> 인천광역시 출생·사망·혼인·이혼 인구동향 (2017-2021)

단위 : 명, 건

구분	출생아수	사망자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합계출산율(명)	
					인천	전국
2017	20,445	14,290	15,235	6,988	1.01	1.05
2018	20,087	15,316	14,850	7,011	1.01	0.98
2019	18,522	15,131	13,401	7,176	0.94	0.92
2020	16,040	15,689	11,574	6,931	0.83	0.84
2021	14,900	16,500	10,881	6,740	0.78	0.81

주: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 국내통계 > 인구동향조사

2021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2018년까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1명 이상이었으나, 2019년(0.94명)을 기점으로 1명 미만이며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2020년에 비해 부산, 대구, 대전 등 3개 시도는 증가, 서울(0.63명), 인천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통계청 인구증감통계 2022년 3월 기준).

<표 II-13> 인천광역시 합계출산율 전국, 특광역시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1.24	1.17	1.05	0.98	0.92	0.84	0.81
특광역시	1.12	1.07	0.95	0.96	0.97	0.86	0.86
인천(시도순위)	1.22(13)	1.14(15)	1.01(15)	1.01(11)	0.94(12)	0.83(12)	0.78(15)

주: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출처: 통계청 > 국내통계 > 인구동향조사(2021. 8월 확정), 통계청 인구증감통계 (2022.3월 기준)

4) 노인 인구(65+) 비율

2022년 5월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인구는 447,294명이고 여성 고령자(55.8%)가 남성 고령자(44.2%)에 비해 많다. 2019년 대비 2022년 60세 이상 인구수가 연령대별로 모두 증가하였다. 인천의 인구 형태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연령별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부터 여성의 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성 고령인구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14>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 비율 2019-2022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9	2022년 5월 기준
인천 전체 인구 (주민등록인구)	2,952,237	2,955,167
19세 이하	523,228	483,869
20~29세	404,715	385,629
30~39세	435,329	401,964
40~49세	486,860	481,428
50~59세	515,417	511,681
60세 이상	586,688	690,606

구분	2019	2022년 5월 기준
65~69세	126,286	163,507
70~74세	95,646	106,198
75~79세	73,266	78,095
80세 이상	83,132	99,494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

<표 II-15> 인천광역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 (2022)

단위 : 명

구분	총인구수 (명)	남	여	여성 비율(%)
계	2,955,167	1,479,428	1,475,739	49.9
0~4세	86,746	44,572	42,174	48.6
5~9세	126,406	64,674	61,732	48.8
10~14세	137,462	70,582	66,880	48.7
15~19세	133,255	68,543	64,712	48.6
20~24세	174,056	90,075	83,981	48.2
25~29세	211,563	110,852	100,711	47.6
30~34세	198,083	103,350	94,733	47.8
35~39세	203,881	105,188	98,693	48.4
40~44세	241,513	124,104	117,409	48.6
45~49세	239,915	122,496	117,419	48.9
50~54세	262,867	131,256	131,611	50.1
55~59세	248,814	124,378	124,436	50.0
60~64세	243,312	121,493	121,819	50.1
65~69세	163,507	79,712	83,795	51.2
70~74세	106,198	50,629	55,569	52.3
75~79세	78,095	34,286	43,809	56.1
80~84세	56,171	21,411	34,760	61.9
85~89세	29,653	8,961	20,692	69.8
90~94세	10,708	2,301	8,407	78.5
95~99세	2,536	480	2,056	81.1
100세 이상	426	85	341	80.0
65세 이상	447,294	197,865	249,429	55.8

출처: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군구별 세대 및 인구 월별’(2022.5 기준)

<https://www.incheon.go.kr/data/DATA010303>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천의 전체 노인 인구(인천광역시 노인 인구등록통계)는 378,330명이다. 인천의 전체 노인 인구 중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지만, 해당 구군의 인구수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 미추홀구, 중구 순이다. 또한 여성 노인 1백 명당 남성노인 인구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옹진군, 강화군, 연수구 순으로 높다. 강화와 옹진군이 인천 관내 타 지역 대비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6> 인천광역시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2019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남성 (명)	여성 (명)	성비 (여성 1백명당 남성인구)
전국	7,816,991	3,364,751	4,452,240	75.6
인천	378,330	164,368	213,962	76.8
중구	18,419	8,067	10,352	77.9
동구	13,232	5,594	7,638	73.2
미추홀구	64,280	27,848	36,432	76.4
연수구	33,678	14,775	18,903	78.2
남동구	66,215	28,504	37,711	75.6
부평구	69,072	29,675	39,397	75.3
계양구	34,917	15,113	19,804	76.3
서구	53,167	23,308	29,859	78.1
강화군	20,649	9,332	11,317	82.5
옹진군	4,701	2,152	2,549	84.4

출처: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2년주기)」, 인천광역시 (2019년 기준, 2020.12 공표) *2021년 기준값 예정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천의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3년 이후 매년 줄어들 전망이다. 15세~24세, 50세~64세 연령군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7년부터 20%를 초과하여 인천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 고령인구 중에서 70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점차 줄어듦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7>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생산연령인구)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50
생산연령인구계(15~64세)	2,145	2,126	2,102	2,079	2,061	2,001	1,466
생산연령인구 15~24세	293	286	278	274	272	269	177
생산연령인구 25~49세	1,093	1,080	1,070	1,062	1,051	1,003	664
생산연령인구 50~64세	759	761	754	743	738	728	626
- 구성비(%): 15~24세	9.9	9.7	9.4	9.2	9.2	9.1	6.3
- 구성비(%): 25~49세	36.9	36.5	36.2	35.9	35.5	33.8	23.6
- 구성비(%): 50~64세	25.6	25.7	25.5	25.1	24.9	24.6	22.2

주1: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주2: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시도”

<표 II-18>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고령인구)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50
고령인구: 65세+	482	514	551	590	621	714	1,105
고령인구: 65~69세	180	195	209	225	233	238	221
고령인구: 70세+	302	319	343	365	389	477	883
고령인구: 75세+	190	201	212	219	232	278	671
고령인구: 80세+	109	115	120	124	132	156	447
고령인구: 85세+	48	52	56	60	65	77	253
- 구성비(%): 65세+	16.3	17.4	18.6	19.9	21	24.1	39.3
- 구성비(%): 65~69세	6.1	6.6	7	7.6	7.9	8	7.9
- 구성비(%): 70세+	10.2	10.8	11.6	12.3	13.1	16.1	31.4
- 구성비(%): 75세+	6.4	6.8	7.2	7.4	7.8	9.4	23.9
- 구성비(%): 80세+	3.7	3.9	4.1	4.2	4.5	5.3	15.9
- 구성비(%): 85세+	1.6	1.8	1.9	2	2.2	2.6	9

주1: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주2: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시도”

인천의 아동청소년 비율은 22.1%이다. 인천광역시 총인구 2,960,580명 중 0세부터 24세 아동청소년 655,288명 중 남자 337,123명, 여자 318,165명이다(2022.7월 기준).

<표 II-19> 인천광역시 주요 연령계층별(학령인구 및 청소년)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50
학령인구: 계(6~21세)	421	412	403	392	382	344	278
학령인구:초등학교(6~11세)	152	144	136	128	117	92	98
학령인구:중학교(12~14세)	80	81	82	79	77	66	54
학령인구:고등학교(15~17세)	79	80	80	79	81	77	55
학령인구:대학교(18~21세)	110	107	106	107	108	109	71
청소년인구: 9~24세	452	444	435	425	416	386	280
- 구성비(%): 9~24세	15.3	15	14.7	14.3	14	13	10

주1: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주2: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시도”

2022년 7월 기준 인천의 아동인구(0세~17세) 비중은 14%(427,804명)이다. 10~14세 아동의 수(남아 70,730명, 여아 67,025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세~9세 아동(125,739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남자아동의 수가 여자아동의 수보다 많다.

한편 청소년(9세~24세)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7월 기준 인천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9%이다. 20~24세 청소년의 수(172,473명)가 10대 청소년의 수(10대 초반 137,755명, 10대 후반 133,128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중이 적은 것은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인천의 향후 5년 및 2030년까지 인구 수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40년부터 전체 인구 수 및 여성과 남성 인구수 모두 감소 추세로 나타난다. 2022년 5월 기준 인천의 남성 인구(1,479,428명) 비중이 여성(1,475,739명)보다 높지만,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0> 인천광역시 성별에 따른 장래 인구 추계

단위 :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40	2050
전국	계	51,558,034	51,500,029	51,447,504	51,397,309	51,348,388	51,199,019	50,193,281	47,358,532
	남자	25,749,708	25,714,669	25,682,920	25,652,688	25,623,449	25,534,271	24,967,438	23,495,017
	여자	25,808,326	25,785,360	25,764,584	25,744,621	25,724,939	25,664,748	25,225,843	23,863,515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40	2050
인천	계	2,959,571	2,959,097	2,959,375	2,960,111	2,961,141	2,964,832	2,947,288	2,813,782
	남자	1,482,623	1,481,977	1,481,737	1,481,714	1,481,831	1,482,252	1,466,466	1,393,879
	여자	1,476,948	1,477,120	1,477,638	1,478,397	1,479,310	1,482,580	1,480,822	1,419,903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나. 가구 특성

1) 다문화가구

인천의 다문화가족 비율(6.7%)은 경기(29.0%), 서울(17.1%)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시는 남동구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1개소(어울림이끼림 사회적협동조합 수탁)를 운영 중이다. 시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천 전역에 1곳만 운영되어 접근성 등 한계가 있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지역적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21> 인천광역시 다문화 가족 (2020)

단위 : 명

구분	전국대비(%)	합계(명)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귀화,외국국적자, 국내출생)	기타동거인 (내국인,외국인)
전국	-	1,093,228	159,244	359,129	263,379	311,476
인천	6.7%	73,298	10,493	26,592	16,785	19,428

주: 인천의 다문화가족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경기(317,206명/29.0%), 서울(187,239명/17.1%).

출처: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인천광역시, 2022) ‘다문화가족 현황’

원자료: 행정안전부(2020.11.1. 기준) *2021년 기준값 '22.11 예정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천 전체 인구 대비 5% 미만이다. 2018년 이후 인천 내 외국인 주민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순으로 높다. 인천의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의 수 또한 또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결혼이민자 2018년 10,875명 → 2020년 11,771명).

<표 Ⅱ-22> 인천광역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인구수 (명)	외국인 주민 비율 (%)	외국인						내국인	
			소 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 타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자녀 (국내출생)
2018 기준										
전국	51,629,512	2,054,621 (4.0%)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226,145
인천	2,936,117	115,720 (3.9%)	88,489	25,539	10,875	3,978	17,295	30,802	13,560	13,671
2019 기준										
전국	51,779,203	2,216,612 (4.3%)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인천	2,952,237	130,292 (4.4%)	100,174	25,209	11,545	6,068	18,942	38,410	14,666	15,452
2020 기준										
전국	51,829,136	2,146,748 (4.1%)	1,65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51,977
인천	2,945,454	130,845 (4.4%)	99,212	22,450	11,771	5,177	22,213	37,601	16,100	15,533

주: 2018년도 인천 내 다문화가족 (24,435명, 결혼이민자 10,875명, 국적취득 13,560명)

출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인천광역시, 각 연도)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현황'

원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11월 1일 기준)

2) 1인 가구

2020년 기준 인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8.3%이다.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 Ⅱ-23> 인천광역시 1인 가구

단위 : 가구, (%)

구분		2018	2019	2020 (비율)	2021
전국	일반가구	19,979,188	20,343,188	20,926,710	—
	1인가구	5,848,594	6,147,516	6,643,354 (31.7)	—

구분		2018	2019	2020 (비율)	2021
인천	일반 가구	1,094,749	1,120,576	1,147,200	—
	1인 가구	275,898 (25.2)	297,865 (26.6)	324,841 (28.3)	—

주: 일반가구는 (1인가구부터 5인 이상 가구 포함)

출처: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인천시 청년통계표 (2021), 21년 기준값 예정

최근 5년간 전체 가구 중에서 인천의 1인 가구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1인 가구수가 모두 약 3.5만여 가구 이상 증가하였다.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넘지만, 여성 1인 가구의 비율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전체 가구 대비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상승하였다(2016년 대비 0.6%p(35,572가구) 증가).

인천의 60세 이상 1인 가구(독거노인가구) 비율은 전국 대비 낮지만 서울과 비교하여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인천 고령가구의 여성 비중이 60대 이상부터 높아진다는 점에서 여성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24> 인천광역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여성 1인 가구	여성 비율(%)
2016	254,076	133,482	120,594	47.5
2017	266,434	140,100	126,334	47.4
2018	275,898	143,845	132,053	47.9
2019	297,865	155,137	142,728	47.9
2020	324,841	168,675	156,166	48.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II-25> 인천광역시 60세 이상 1인 가구 (2020)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구성	60세 이상 일반가구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전국	전체	11,623,264	19.3
	1인가구	2,241,412	

구분	세대구성	60세 이상 일반가구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인천	전체	2,124,510	16.7
	1인가구	354,567	
경기	전체	597,761	18.1
	1인가구	108,099	
서울	전체	2,529,512	16.6
	1인가구	418,994	

주: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일반가구 대상 (일반가구 내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60세 이상 성별 1인 가구 비율 미집계, 그러나 인천 고령인구 여성비중이 60대 이상부터 높아짐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세대구성, 연령 및 거주지 종류별 고령자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3) 한부모 가구

인천시 한부모 가구는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에 비해 훨씬 많다.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02,444가구, 2018년 103,605가구, 2020년 102,594가구로 증감을 반복한다.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지만 모자가구는 부자가구에 비해 3배가량 많다.

제1~2차 및 제3차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212)을 통해 저소득 모부자 가구 지원과 여성 한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이후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지원으로서 한부모 가구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연령(18세 이하, 19세 이상 등)에 따른 모자, 부자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³⁾.

3) 18세 기준 자녀연령별 모부자가구 시도별 통계 제공(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 II-26> 인천광역시 한부모 가구 현황 (2016-2021)

단위 : 세대

구분	인천			전국		
	계	모자가구 (비율)	부자가구	계	모자가구 (비율)	부자가구
2016	102,444	75,484	26,960	1,539,868	1,144,096	395,772
2017	102,828	75,939	26,889	1,533,166	1,140,714	392,452
2018	103,605	76,734	26,871	1,539,362	1,147,928	391,434
2019	102,839	76,483	26,356	1,529,151	1,144,881	384,270
2020	102,594	76,612	25,982	1,532,751	1,152,020	380,731
2021	101,665	76,101	25,564	1,509,958	1,136,222	373,736

주: 모자가구: (모+미혼자녀)+(모+미혼자녀+기타가구원), 부자가구도 이와 동일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인천광역시 202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2.1.1 기준), 2020 인천 성인지통계(2017-2019년기준)

인천의 한부모가구를 세대구성별로 살펴보면 모와 미혼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가 부자 가구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구(15,006세대, 총 36,840명 '21.12 기준) 중 모자 가구가 81.3%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80% 이상이 모자가구이다.

<표 II-27> 인천광역시 최근 5년 세대구성별 한부모가구 수

단위 : 가구

구분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미혼자녀 +기타가구원	모+미혼자녀 +기타가구원
2016	19,353	62,783	7,607	12,701
2017	19,425	63,206	7,464	12,733
2018	19,639	64,230	7,232	12,504
2019	19,375	64,373	6,981	12,110
2020	19,367	64,997	6,615	11,615

주1: 한부모가구=미혼모, 부, 이혼, 사별 포함

주2: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 구성별 한부모 가구’

<표 II-28>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비율)	인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세대 (비율)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합계	15,006	36,840	2,276	2,936	2,273	7,933	3	3	12,730	28,904
모자 가구	12,024 (81.3)	29,717	1,725	6,096	1,722	6,093	3	3	10,299 (80.9)	23,621
부자 가구	2,708	6,558	506	1,740	506	1,740	0	0	2,202	4,818
조손 가구	102	210	7	22	7	22	0	0	95	188
청소년모자	152	316	28	56	28	56	0	0	124	260
청소년부자	20	39	10	22	10	22	0	0	10	17

출처: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2022 인천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4) 청년가구

2020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가구주가 19~39세인 청년 가구는 2019년 대비 1.9%(4,730가구) 증가하여 2020년에 254,539가구로 인천 전체 일반가구의 22.2%를 차지한다(남성 가구주 65.2%, 여성 가구주 34.8%).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전체의 42.3%이다(2021 인천광역시 청년통계보고서(2022)). 일반가구 대비 청년가구의 가구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년 가구주의 비율이 남자 청년 가구주의 비중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I-29> 인천광역시 청년 가구

단위 : 가구, %

구분	청년가구(일반가구)	일반가구 대비 청년가구 비율
2018	244,576(1,094,749)	22.3
2019	249,809(1,120,576)	22.3
2020	254,539(1,147,200)	22.2

출처: 2021 인천광역시 청년통계보고서(2022.2) p23 '청년가구추이'

<표 II-30> 인천광역시 청년 가구주 성별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남자 청년가구 (일반가구 대비)	여자 청년가구 (일반가구 대비)
2018	168,419(22.0)	76,157(23.2)
2019	168,018(21.6)	81,791(23.7)
2020	165,998(21.2)	88,541(24.3)

주: 청년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29세인 가구. 괄호는 일반 가구의 가구주 성별 대비 비율임.
출처: 인천광역시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청년 통계표(2021),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DB'

인천의 9세~24세 청소년 인구 구성은 15.3%에서 2050년 10%로 줄어듦 전망이다. 19세~34세 청년인구 또한 20.5%에서 2030년 17.5%, 2050년 10.8%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표 II-31> 인천광역시 청소년 및 청년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30	2050
청소년인구(천명): 9~24세	452	444	435	425	416	386	280
- 구성비(%): 9~24세	15.3	15	14.7	14.3	14	13	10
청년인구(천명): 19~34세	606	595	584	572	560	520	305
- 구성비(%): 19~34세	20.5	20.1	19.7	19.3	18.9	17.5	10.8

주1: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

주2: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출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시도"

5) 고령가구 (노령화지수, 부양비)

2020년 기준 인천의 노령화지수(유소년 1백명 당 고령인구)가 100을 초과(108.0)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다. 이 지수가 2025년에 180.2, 2030년에 358.8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인천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는 18.2명이다. 2025년 26.2명, 2030년 45.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의 노년부양비는 전국(2025년 29.7명, 2030년 48.6명) 대비 낮은 수치이지만 2025년(108.2)에서 2030년(358.8) 사이에 인천의 고령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32>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단위 : 명

구분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대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 국	129.3	201.5	369.1	411.6	456.2	326.9	252.9	21.8	29.7	48.6	69.9	78.6	56.8	260.2
서 울	149.4	241.4	396.2	407.8	445.6	296.2	198.3	20.6	28.1	43.8	60.6	67.7	47.0	227.7
부 산	174.9	266.9	485.3	505.1	541.0	366.0	209.3	26.5	37.5	59.0	81.3	90.2	63.7	240.1
대 구	135.8	212.0	407.3	441.4	477.9	342.1	252.0	22.3	31.3	53.7	77.3	85.6	63.3	283.6
인 천	108.0	180.2	358.8	407.9	455.6	347.6	321.8	18.2	26.2	45.7	66.6	75.3	57.1	314.0

출처: '시도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0~205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5.

3. 산업 특성 및 경제활동 현황

가. 산업 특성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인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비 사업체의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2020년 인천의 사업체 수는 2019년 대비 약 10만 개 가량 늘어나 306,108개이다⁴⁾. 여성과 남성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여성종사자의 경우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다.

<표 II-33>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성별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계	여성 (전년대비증감률)	남성
2018	202,493	1,070,454	474,005	596,449
2019	206,244	1,092,494	485,735(2.5)	606,759
2020	306,108	1,208,269	514,552(5.9)	693,717

*:2021년 기준 사업체는 2022.9월말 잠정결과, 12월말 공표

주: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외

출처: 인천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2) 산업 규모

가) 인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동 (2019-2020)⁵⁾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601만 3천개, 종사자 수는 2,483만 4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90만 9천 개(17.8%), 203만 7천 명(8.9%) 증가하였다⁶⁾. 2020년 기준 인천의 사업체 수는 306,108개, 종사자 수는 1,208,269명으로 2015

4) 2022년 2월 기준 사업체 수는 303,233개이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경제산업' 2022 사업체조사 개요)

5) 사업체수, 종사자 수(성별, 산업별)는 2020년 기준 통계가 최신(통계청, 2022년 7월 경제총조사 공표 기준)

6)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 발표자료(2021.12 잠정공표)

년(사업체 수 186,011개, 종사자 984,652명)에 비해 각각 120,099개, 223,617명 증가하였다(2021년도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표 II-34>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9-2020)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2019	2020	증감율	2019	2020	증감율
전국	4,176,549	6,013,000	44.0	22,723,272	24,834,000	9.3
인천	206,244	306,108	48.4	1,092,494	1,208,269	10.6

*: 2021년 기준 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022.9월 말 잠정결과, 12월 말 공표 예정

주: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외

출처: 2020년 경제총조사(통계청),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인천광역시)

나) 인천 사업체 종사자 성별 현황

2020년 기준 인천의 사업체 수는 306,180개, 전체 종사자 수는 1,208,269명(여성 종사자 42.6%)으로 전년 대비 각각 48.4%, 10.6% 증가하였다(표 2-32, 표2-33). 인력 등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5> 인천광역시 산업별 종사자 성별 현황(2020)

단위 : 명

구분		종사자 계	여성	남성
전체	계 (사업체 수=306,108개)	1,208,269	514,552 (42.6%)	693,717
산업별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485	159	326
	광업(05~08)	567	59	508
	제조업(10~34)	253,606	72,871	180,7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4,403	743	3,66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661	1,363	6,298
	건설업(41~42)	92,870	15,217	77,653
	도매 및 소매업(45~47)	172,776	76,456	96,320
	운수 및 창고업(49~52)	96,036	15,561	80,475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01,750	63,080	38,670
	정보통신업(58~63)	14,027	4,477	9,550

구분	종사자 계	여성	남성
금융 및 보험업(64~66)	24,618	15,991	8,627
부동산업(68)	31,465	12,039	19,4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1,922	13,443	28,47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57,530	22,077	35,4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0,912	15,113	25,799
교육 서비스업(85)	77,194	52,343	24,8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25,916	102,795	23,1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9,659	9,509	10,1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4,872	21,256	23,616

출처: 2021년도 인천광역시 사업체조사(2020년 기준 통계), 2020년 경제총조사

다) 여성 대표자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업종

2020년 기준 인천의 각 사업체 대표자 수를 살펴보면 총 306,108개 사업체 중 여성 대표자 비중이 36.0%로 남성 대표자(64.0%) 비중보다 작다. 숙박 및 음식점업(여성 57.7%, 남성 42.3%)과 교육서비스업(여성 59.5%)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남성 대표자의 비중이 높다.

<표 II-36> 인천광역시 사업체 대표자 성별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사업체수(=대표자 수)	196,705	202,493	206,244	306,108
여자 대표자	74,390	76,261	77,735	110,146
남자 대표자	122,315	126,232	128,509	195,962

*: 2021년 기준 사업체는 2022.9월 말 잠정결과, 12월 말 공표 예정

주: 2022년 기준 전국 약 660만 개 사업체

주: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외

출처: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인천광역시,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인천의 사업체 대표자 수는 남성 대표자(64.2%)가 여성 대표자(35.8%)보다 많다. 그러나 2020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인천 내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41.7% 증가).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남성의 비중이 높다.

라) 대표자, 종사자 성별 및 종사상 지위 현황

2020년 인천의 사업체 종사자 여성과 남성 수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늘어났다. 2020년의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자영업 및 무급가족 비율이 38.2% 상승하였다.

<표 II-37> 인천광역시 산업 대표자/종사자/종사상 지위 (2017-2020)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산업 대표자	소계	196,705	202,493	206,244	306,108
	남자	122,315	126,232	128,509	195,962
	여자	74,390	76,261	77,735	110,146
산업 전체 종사자	계	1,034,344	1,070,454	1,092,494	1,208,269
	남자	579,823	596,449	606,759	693,717
	여자	454,521	474,005	485,735	514,552
산업 전체 종사자 지위	계	1,034,344	1,070,454	1,092,494	1,208,269
	자영업자, 무급가족	193,866	197,447	200,412	276,956
	상용종사자	679,472	706,128	712,771	739,704
	임시 및 일용근로자	115,122	120,948	128,477	154,465
	기타 종사자	45,884	45,931	50,834	37,144

주: 2020년 기준값은 경제총조사(통계청, 5년주기)에서 20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이취집
출처: 통계청,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인천광역시, 2019 전국사업체조사, 2020년 경제총조사

마) 사업체 규모별 대표자 성별 현황

매출액 중심으로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82,184,926백만 원), 도매 및 소매업(72,713,459백만 원) 순으로 규모가 크다. 해당 업종의 대표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의 경우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여성의 4배가량이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체 매출액의 3% 미만이다.

<표 II-38>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규모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020)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대표자 수)	매출액	대표자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산업(2020)	306,108	282,444,533	110,146	195,962
2020 산업별 (10차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47	151,903	31	116
	광업(05~08)	36	177,575	5	31
	제조업(10~34)	33,657	82,184,926	6,964	26,69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446	9,383,684	113	3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34	2,197,540	151	583
	건설업(41~42)	24,181	20,949,572	4,993	19,188
	도매 및 소매업(45~47)	78,706	72,713,459	32,738	45,968
	운수 및 창고업(49~52)	38,015	18,218,721	3,708	34,307
	숙박 및 음식점업(55~56)	41,888	7,613,092	24,181	17,707
	정보통신업(58~63)	3,749	2,455,014	852	2,897
	금융 및 보험업(64~66)	2,491	19,106,939	702	1,789
	부동산업(68)	14,124	11,198,833	5,367	8,7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347	6,635,442	1,979	6,36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937	3,859,127	2,520	5,4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90	7,678,065	54	436
	교육 서비스업(85)	10,933	5,223,861	6,502	4,4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011	7,894,205	3,579	4,4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943	1,859,087	3,694	4,2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4,273	2,943,488	12,013	12,26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99)	0	0	0	0

출처: 통계청, 2020 경제총조사(2022.7 공표),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사업체조사'

3)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기업 등 사업체 밀집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곳이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은 총 104,114개 사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의 50% 이상이 위치해 있다. 이 구역 내의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9.0%)과 운수업(12.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천 전체 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25.7%), 숙박음식점업(13.7%) 비중이 높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대표자는 여성 대표자(40.1%) 비중이 남성 대표자(50.9%)보다 낮다.

<표 II-3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입주 사업체 고용 현황 (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인천
전체	소계	195,339	104,114
지위별	자영업	2,446	1,627
	상용근로자	176,126	92,608
	임시 일용근로자	14,609	8,607
	무급 등	2,158	1,272
국적별	내국인	191,306	103,090
	외국인	4,033	1,024
대표자 성별	남성	130,310	61,324 (59.9)
	여성	65,029	42,790 (40.1)

주: (상용직)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정규직, (임시 일용) 1년 미만 고용된자, (무급 등) 자영업자 가족(무임금)이나 급여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 받는 자

주2: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경기, 울산 등

출처: 통계청,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1년 기준값 공표예정

<표 II-4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입주 사업체 산업별 현황 (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인천
전체	소계	195,339	104,114(53.3)
산업별	농업, 임업, 어업	6	6
	제조업	71,441	19,78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921	298

구분	전체	인천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1,136	339
건설업	8,997	7,130
도매, 소매업	12,087	7,907
운수업	22,835	12,875
숙박, 음식점업	8,380	6,577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7,546	4,482
금융, 보험업	1,793	922
부동산, 임대업	6,354	5,210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5,862	10,67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5,823	3,69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3,700	3,110
교육서비스업	15,771	12,235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7,972	5,695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2,892	2,289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1,690	758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133	133

주1: (상용직)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정규직, (임시 일용) 1년 미만 고용된 자, (무급 등) 자영업자 가족(무임금)이나 급여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 받는 자

주2: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경기, 울산 등 8곳

출처: 통계청, 「경제자유구역업주사업체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4) 인천 사업체의 산업별·성별 특성

2020년 인천은 전년 대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모든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인천의 건설업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체의 경우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인천 사업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78,706개)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1,888개), 운수 및 창고업(38,015개), 제조업(33,657개) 순이다(2020년 기준).

2020년 인천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여성 종사자의 수(102,795명)는 전년(89,262명) 대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 비해 여성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76,456명), 제조업(72,871명), 숙박 및 음식점업(63,080명) 순으로 여성종사자 수가 많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2019년(47명) 대비 2020년의 종사자(159명)가 증가하였고, 2020년 건설업 여성 종사자(15,271명)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 및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여성 종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경제총조사).

<표 II-41>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2019)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남	여	매출액
전체	전체 산업(2019)	206,244	1,092,494	606,759	485,753	272,040,775
2019 산업별 (10차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47	209	162	47	53,457
	광업(05~08)	31	531	467	64	160,326
	제조업(10~34)	25,190	244,352	175,115	69,237	83,445,02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71	4,069	3,566	503	11,038,77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516	7,096	5,937	1,159	1,878,234
	건설업(41~42)	6,463	56,774	48,578	8,196	16,570,154
	도매 및 소매업(45~47)	46,874	147,971	78,689	69,282	72,575,435
	운수 및 창고업(49~52)	26,774	83,113	69,048	14,065	18,524,016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7,321	114,801	42,318	72,483	7,919,155
	정보통신업(58~63)	1,089	10,200	6,883	3,317	2,167,773
	금융 및 보험업(64~66)	1,771	25,519	8,678	16,841	18,117,081
	부동산업(68)	8,523	23,743	14,485	9,258	6,013,4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105	31,577	20,436	11,141	5,035,69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3,142	51,649	29,763	21,886	3,339,9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86	38,067	23,602	14,465	6,736,900
	교육 서비스업(85)	8,553	76,559	25,288	51,271	6,362,4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7,586	109,265	20,003	89,262	7,299,7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6,968	22,560	11,381	11,179	2,102,3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0,734	44,439	22,360	22,079	2,700,876

출처: 통계청, 2019 사업체 조사 (인천광역시)

<표 II-42> 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2020)

단위 : 개,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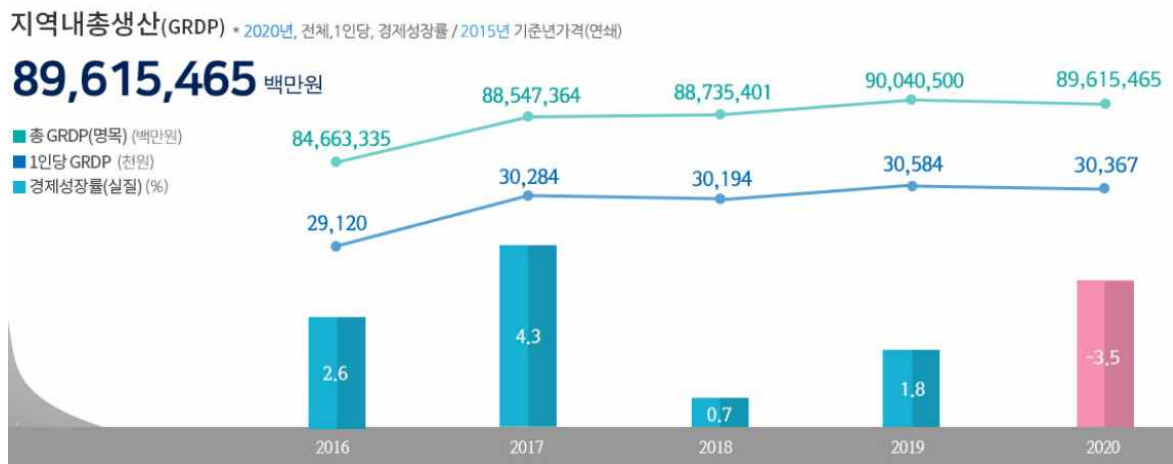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남	여	매출액
전체	전체 산업(2020)	306,108	1,208,269	693,717	514,552	282,444,533
2019 산업별 (10차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47	485	326	159	151,903
	광업(05~08)	36	567	508	59	177,575
	제조업(10~34)	33,657	253,606	180,735	72,871	82,184,9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446	4,403	3,660	743	9,383,68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34	7,661	6,298	1,363	2,197,540
	건설업(41~42)	24,181	92,870	77,653	15,217	20,949,572
	도매 및 소매업(45~47)	78,706	172,776	96,320	76,456	72,713,459
	운수 및 창고업(49~52)	38,015	96,036	80,475	15,561	18,218,721
	숙박 및 음식점업(55~56)	41,888	101,750	38,670	63,080	7,613,092
	정보통신업(58~63)	3,749	14,027	9,550	4,477	2,455,014
	금융 및 보험업(64~66)	2,491	24,618	8,627	15,991	19,106,939
	부동산업(68)	14,124	31,465	19,426	12,039	11,198,8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347	41,922	28,479	13,443	6,635,44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937	57,530	35,453	22,077	3,859,1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90	40,912	25,799	15,113	7,678,065
	교육 서비스업(85)	10,933	77,194	24,851	52,343	5,223,8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011	125,916	23,121	102,795	7,894,2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943	19,659	10,150	9,509	1,859,0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4,273	44,872	23,616	21,256	2,943,488

출처: 통계청, 2020 경제총조사 (2022.7 기준)

5) 인천 지역 내 총생산

2020년 기준 인천 내 총생산(GRDP)은 89,615,465백만 원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인천의 1인당 총생산의 경우 2020년 기준 30,367천 원으로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그림 II-2] 인천 지역 내 총생산



주1: 2015-2020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주2: 작성기준이 년 익익년 12월로 현재 2020년 자료가 최신(22.11 기준)

출처: 인천데이터포털

<표 II-43> 인천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 (2015-2020)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	80,137,506	84,663,335	88,547,364	88,735,401	90,040,500	89,615,465

주: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당해가격 *2020년 기준값이 최신(2022.11 기준)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 '시내총생산(p549)',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지역내총생산'

나. 경제활동

1) 경제활동인구 현황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기준 1,634천명(64.2%)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 1천명이다. 최근 5년(2017~2021) 인천 전체 및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한다.

<표 II-44>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021)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전국	45,080	28,310	16,770	62.8
남자	22,198	16,124	6,074	72.6
여자	22,882	12,186	10,696	53.3
인천광역시	2,548	1,629	920	63.9
남자	1,260	935	325	74.2
여자	1,289	694	595	53.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연도별 통계의 경우 2021년 통계가 최신, 2022.8 기준)

시는 광역 및 군구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여성일자리정책뿐만 아니라 인천 결혼이민자 일자리연계사업, 인천 여성 친화형 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여성의 경우 전국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II-45> 최근 5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17~2022)

단위 : 천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전국	63.2	63.1	63.3	62.5	62.8	64.8
남자	74.1	73.7	73.5	72.6	72.6	74.4
여자	52.7	52.9	53.5	52.8	53.3	55.5
인천광역시	64.7	65.7	65.4	64.2	63.9	65.8
남자	76.4	76.3	75.2	74.1	74.2	75.8
여자	53.3	55.4	55.7	54.6	53.8	56.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22년 7월 기준 인천 전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169만5천 명, 고용률 63.6%, 실업률 3.3%이다. 전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931만1천 명이고 취업자 수가 2,847만5천 명, 고용률이 62.9%, 실업률이 2.9%이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로만 살펴보면 전국 대비 인천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2022년 7월 기준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로 전년 같은 기간(54.2%) 대비 증가하였다. 2022년 7월 기준 인천 여성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3.9%, 53.8%로 전년 같은 기간(3.2%, 52.5%)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7월 기준). 인천의 실업률은 남성(4.2%)이 높지만, 고용률과 경제활동 비율에서 볼 때 임금 및 노동시장 내 여성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표 II-46> 최근 2년 인천광역시 고용률 및 실업률 비율 변화 (2021~2022)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계(21.7 기준)	2,547	1,633	914	64.1	4.1	61.5	67.1
남자	1,259	934	325	74.2	4.8	70.7	75.2
여자	1,288	699	590	54.2	3.2	52.5	58.9
계(22.7 기준)	2,577	1,695	882	65.8	3.3	63.6	70.1
남자	1,273	965	308	75.8	2.8	73.7	79.0
여자	1,304	730	574	56.0	3.9	53.8	61.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7월 기준)

2) 맞벌이 가구 현황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인천의 맞벌이 가구는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다가 2021년 기준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다. 이에 부부가구 및 부부자녀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수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사 일과 자녀 돌봄 시간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

<표 II-47> 인천광역시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 (2017-2021)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44.6	46.3	46.0	45.4	46.3
인천광역시	43.8	45.6	44.8	42.7	44.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표 II-48> 최근 5년 맞벌이 가구 수 및 비율 추이 (2017-2021)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전국	12,224	5,456	44.6	12,245	5,675	46.3	12,305	5,662	46.0	12,332	5,593	45.4	12,587	5,823	46.3
인천	680	298	43.8	682	311	45.6	683	306	44.8	684	292	42.7	701	308	44.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3) 여성 경영인 현황

인천의 여성 경영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순으로 많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이 높다.

<표 II-49> 여성경영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2019)

단위 : 명, %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3,590,535	878,868	404,718	4,874,121	94,959
인천광역시	182,565	45,018	16,692	244,275	-

원자료: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별 여성경영인 종사자수'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20, 2021 미집계

<표 II-50> 인천광역시 산업별 여성경영인 종사자 수 (2019)

단위 : 명, %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	182,565	45,018	16,692	244,275	-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571	500	71	-	571	-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B. 광업(05~08)	22	-	-	-	22	-
C. 제조업(10~34)	26,519	14,613	9,768	2,138	26,519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233	-	-	-	233	-
E.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862	195	256	411	862	-
F. 건설업(41~42)	13,722	8,845	4,057	820	13,722	-
G. 도매 및 소매업(45~47)	58,327	46,938	8,165	3,224	58,327	-
H. 운수 및 창고업(49~52)	6,698	5,002	1,168	528	6,698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34,799	8,051	3,145	45,995	-
J. 정보통신업(58~63)	1,823	1,262	541	20	1,823	-
K. 금융 및 보험업(64~66)	1,656	800	856	-	1,656	-
L. 부동산업(68)	38,992	37,837	722	433	38,992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148	2,565	1,427	156	4,148	-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0,916	2,947	4,692	3,277	10,916	-
P. 교육 서비스업(85)	9,285	7,907	951	427	9,285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343	943	2,125	1,275	4,343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5,728	4,849	695	184	5,728	-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4,435	12,420	1,361	654	14,435	-

주: 해당 기업수가 3미만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X 처리, 중소기업은 기준연도 포함 3년 평균 매출액, 소기업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기업), 구분은 산업별(10차)대분류 활용.

출처: 통계청, 원자료: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4) 성별 임금 격차

인천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 대비 70% 미만의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약간 개선되었다.

<표 II-51> 인천광역시 최근 3년 성별 임금격차

단위 : %

구분	2014	2017	2018	2019	2020
성별임금격차	59.5	61.5	63.8	65.0	65.6

주: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출처: 2022년 인천 양성평등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5) 여성 고용 및 지원 현황

2017년 이후 5년간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수와 이 여성 중에서 취업한 여성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자녀 동거취업 여성의 고용률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다. 자녀의 연령 또한 여성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II-52> 자녀 동거 취업 여성 (2017-2021)

단위 : 천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녀 동거 여성	자녀동 거취업 여성	고용률	자녀 동거 여성	자녀동 거취업 여성	고용률	자녀 동거 여성	자녀동 거취업 여성	고용률	자녀 동거 여성	자녀동 거취업 여성	고용률	자녀 동거 여성	자녀동 거취업 여성	고용률
전국	5,164	2,897	56.1	5,063	2,871	56.7	4,960	2,827	57.0	4,810	2,672	55.5	4,641	2,606	56.2
인천	298	159	53.2	293	166	56.7	287	168	58.5	278	150	53.9	262	148	56.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인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고용 지원 정책 추진기관은 총 12곳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을 포함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미취업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과 상담 등 취업연계를 담당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총 3곳(미추홀구, 서구, 남동구)을 운영 중이다.

<표 II-53> 인천광역시 여성 일 지원 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 %

구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012	6(0)	3
2017	7(1)	3
2022	9(1)	3

출처: 인천시 여성정책 추진계획 및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각 연도

<표 II-54> 인천광역시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기관 (2021)

단위 : %

구분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광역센터	지역(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전국	12	146	53
인천	1(8.3%)	8(5.4%)	3(5.6%)

출처: 2022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표 II-55> 인천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예방) 운영 현황 (2022)

단위 : 개소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운영개소 (9)	0	0	2	1	1	2	1	2	0	0
지원 내용	인턴십 제공 등 경력단절 예방									
	경력이음사례관리 서비스, 집단 상담									
	직업훈련 교육 창업 지원 (인천광역시새일센터(부평), 인천 남동산단 새일센터)									

출처: 인천광역시 데이터포털

4. 돌봄 및 일·생활 균형 현황

가. 돌봄

1)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시설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인천시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요구와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설별로 추진체계와 근거법령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 만 18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공보육 시설이 군구별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가고 보육수요가 접근성이나 이동편의, 이용편의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공보육 시설의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56>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주요 정책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아이사랑꿈터지원단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실행기관	군구별 22곳 (옹진군 제외)	군구별 56곳(20곳 2023년 예정)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22.11월 기준)

2022년 기준 인천의 공공 보육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인천의 영유아 보육시설 비율은 인천과 비슷한 수의 영유아 인구수를 가진 부산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통근과 주거 등 공동 생활권이자, 인접한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인천의 영유아 보육시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출생 시점부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시는 보육 인프라 현황과 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II-57> 최근 3년 영유아 인구 대비 공보육 시설 추이 (2019-2021)

단위: 개, 명

	전국			인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A÷B×1,000)	보육시설(A)	주민등록인구 (0~5세)(B)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A÷B×1,000)	보육시설(A)	주민등록인구 (0~5세)(B)
2019	16.4	37,371	2,285,605	15.4	2,049	133,224
2020	16.7	35,352	2,121,390	15.9	1,943	122,051
2021	17.1	33,246	1,943,208	16.0	1,803	112,522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s.kr (22.11월 기준)

<표 II-58> 영유아 공보육 시설 현황 (광역시도 비교)

단위: 개, 명

	2020			2021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A÷B×1,000)	보육시설(A)	주민등록인구 (0~5세)(B)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A÷B×1,000)	보육시설(A)	주민등록인구 (0~5세)(B)
전국	16.7	35,352	2,121,390	17.1	33,246	1,943,208
인천	15.9	1,943	122,051	16.0	1,803	112,522
부산	14.3	1,778	123,962	14.8	1,668	112,344
서울	15.8	5,370	339,289	16.4	5,049	307,525
경기	17.5	10,761	615,708	17.7	10,136	572,784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s.kr (22.11월 기준)

시는 전반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인천 관내 어린이집이 폐원하며 생겨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를 2019년 개소하였다. 아이사랑꿈터는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와 별도로 만 5세까지 영유아 자녀 돌봄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인천시 전반에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 주체자의 참여 등 지역사회 내 돌봄의 활성화에,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돌봄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① 공동육아나눔터

인천시는 군·구별로 총 22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이다(2022년 기준).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으며, 인천시에서도 가족지원사업으로서 추진된다. 특히 공동체 돌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자녀돌봄의 외연을 확장하여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니며, 마을축제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도록 한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이유로 부모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자녀의 등하원 동행이나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는 "돌봄품앗이"가 주된 서비스이다.

②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는 인천시의 공보육시설 중 하나인 '공동육아나눔터'와 별도로 운영된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만 18세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까지 자녀와 부모(보호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어린이집 하원 이후에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와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기존에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⁷⁾가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하였으나 2022년부터 아이사랑꿈터지원단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특히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어 자녀돌봄 수요가 밀집된 곳(아파트 단지 공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설의 수를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9년 개소 이후 매년 10곳 이상 늘어난 아이사랑꿈터는 2023년까지 100곳 개소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나 현재는 영유아 자녀 가정과 지역의 돌봄 수요에 맞춰 운영되면서 용진군 1곳을 포함하여 2023년에 20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③ 다함께 돌봄센터

인천 내 '다함께 돌봄센터'는 중구와 용진군을 제외하고 군·구별로 1곳 이상 운영

7) '인천 아이사랑꿈터지원단'이 별도 설치되면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가정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주축으로 한다(22.11월 기준).

되며, 2022년 11월 기준 총 22곳에서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2017년 10개소로 시작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긴급상황 돌봄서비스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초등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표 II-59>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시설 현황 (2019-2022)

단위 : 개

기관시설						
연도	계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사랑 꿈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아이돌봄 제공기관
2019	245	22	21	4	179	9
2020	256	22	36	12	175	9
2021	285	22	56	23	175	9

주1: 인천 관내 기관시설 외에 영유아돌봄 ‘인천시 아이돌보미’ 수는 1,305명 (22.8월 기준)

주2: 인천 아이사랑꿈터 36개소 운영중(중구(2), 동구(1), 미추홀(4), 연수구(8), 남동구(11), 부평구(2), 계양구(3), 서구(5)이며, 20개소 설치 중 (중구(2), 동구(2), 미추홀(2), 연수구(2), 남동구(1), 부평구(2), 계양구(2), 서구(5), 강화군(1), 옹진군(1) (22.10월 기준)

주3: 공동육아나눔터는 중구(4), 동구(1), 미추홀(4), 연수구(2), 남동구(3), 부평구(2), 계양구(2), 서구(3), 강화군(1)에서 운영

주4: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양구(2), 연수구(3), 서구(5), 미추홀구(3), 강화군(1), 남동구(6), 부평구(1)에서 운영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22.10월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은 2015년 2,278개소, 2022년 1,702개소로 점차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보육 아동수가 2015년 대비 매년 줄어들고 여아의 수가 남아의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60>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단위 : 개소, 명

연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수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협동	직장	가정	계	여	남
2015	2,278	140	11	814	20	6	51	1,236	81,353	39,464	41,889
2016	2,231	150	11	808	19	6	56	1,181	81,096	39,194	41,902
2017	2,186	155	11	800	17	6	65	1,132	80,895	38,964	41,931
2018	2,141	179	11	779	17	6	63	1,086	79,164	38,137	41,027
2019	2,049	213	11	733	13	6	71	1,002	76,084	36,813	39,271
2020	1,943	230	11	684	12	6	76	925	68,106	32,746	35,360
2021	1,803	256	11	637	10	4	76	809	65,663	31,497	34,166
2022	1,692	279	11	587	10	3	80	722	61,285	29,397	31,888

주: 개인 민간시설에 단체(법인 외)포함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2021), 원자료: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보육통합정보시스템(22.10월 기준)

2021년 기준 인천의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 등 영유아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직장 어린이집 수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표 II-61>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현황 (2021-2022)

단위 : %

구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대여점)
	소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125	87
2021	1,803 (5.4%)	256 (4.7%)	11	10	637	809	4	76 (7.4%)	7	19
2022	1,702 (5.1%)	269 (4.9%)	11	10	598	731	3	80 (6.4%)	7	20

주: 괄호안은 전국 대비 비율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원자료: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22.7월 기준).

2) 남성육아휴직

인천의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은 2014년 130명으로 전체 인원의 3.2% 비중이었다가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나면서 2021년에 1,018명(25.6%)으로 증가하였다. 시 차원에서 ‘인천 아빠육아천사단’ 사업을 운영(시비 100%, 225백만원 2021-2022 양년도)하고 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시민의 관심 제고와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2021년 기준 참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부모 멘토링 및 자녀 양육 남성의 공동체 형성의 지원을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II-62> 인천광역시 아빠육아천사단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비고
아빠육아천사단 참여자	208	1,215	사업 대상: 0~9세 자녀를 둔 인천거주 남성
육아자조모임		356	육아공동체 모임 20개

출처: 2022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표 II-63> 인천광역시 육아휴직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563	2,954	3,498	3,982
여성휴직자 수	2,335	2,543	2,790	2,964
남성휴직자 수(%)	228(8.8)	411(13.9)	708(20.2)	1,018(25.6)

출처: 2022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3) 맞벌이 가구 돌봄 수요

2021년의 인천 내 맞벌이가구는 2020년(29만 2,000명)보다 증가하여 30만 8,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인천 내 유배우 가구와 비교하여 맞벌이 가구 비중도 상승(2020년 하반기 42.7% → 2021년 하반기 44.0%)하였다(통계청, 2022.6)⁸⁾. 전국적 추세와 함께

인천에서도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직장인 부모의 영유아 자녀 등 가족 돌봄 수요 대비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64> 가구의 성별에 따른 맞벌이가구 (전국, 2017-2021)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4.6	46.3	46.0	45.4	46.3
남자	44.3	46.1	46.3	45.2	45.9
여자	46.6	47.7	44.5	46.1	47.8

출처: 통계청,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4) 한부모가족시설

2022년 7월 기준 인천 관내 한부모가족시설은 총 8곳이다. 유형별로 부자가족시설 1곳, 모자가족복지시설 2곳, 미혼모부자가족시설 4곳, 모자일시지원복지시설 1곳(미추홀구)이 운영 중이다. 2015년 대비 한부모가족시설 생활인원이 점차 감소 추세이다. 입소자 수가 2015년 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공동시설 외에 다른 형태의 가족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II-65>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건강가정 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시설(총괄)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부자 시설	일시지원 복지
전국	253	122	46	3	64	9
인천	9(3.6)	8(6.6)	2(4.3)	1(33)	4(6.3)	1(11)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2021년 기준)

주: 괄호 안은 전국 대비 비율

8)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22.6 발표)

<표 II-66>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단위 : 개소

구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일시지원 (일시보호)
복지시설 (8)	2	1	4	1
보호기간 (연장가능)	기본생활 3년 공동생활 2년	기본생활 3년	기본생활 1년 공동생활 2년	6월

주1: 모자가족(기본1, 공동1), 부자가족(기본1), 미혼모부자가족(기본1, 공동3:미추홀, 연수, 부평)

주2: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16호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표 II-67> 인천광역시 여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시설

단위 : 개소, 명

연도	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 생활인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 생활인원
2015	12	513	521	260	8	408	411	220
2016	12	432	434	264	8	345	353	217
2017	12	376	406	232	8	287	310	192
2018	12	127	131	195	8	43	41	161
2019	12	237	236	196	8	119	129	151
2020	14	225	237	160	8	120	137	110
2021	-	-	-	-	8	-	-	117
2022	-	-	-	-	8	-	-	115 (227명)

주: 위의 시설 외에 여성 관련 시설 유형은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가능함.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2021)에서 2020년 기준 공식집계, 원자료: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나. 일·생활 균형

1) 가족친화인증제

인천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4년 26개소에서 지난 5년 사이 꾸준히 늘어났다. 근로시간 준수, 임신부 근로 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13개 심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2021년 기준 187곳이다.

<표 II-68>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이

단위 : 개소

구분	2014	2017	2019	2020	2021
가족친화인증기업	26	99	138	158	187

주: 여성가족부 인증기준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인천 관내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2008년 공공기관 1곳에서 시작하여 2021년 기준 기업 137곳, 공공기관 35곳으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직장 문화 조성 및 근로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인증기관 및 기업 총 244개소 인증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69>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이 (2008-2021)

단위 : 개소

구분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공공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기업 137, 공공 50)	1	2	2	4	4	4	9	7	5	6	8	19	12	17	-	23	4	26	2	35	3

주: 여성가족부 인증기준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 성별 생활시간

인천의 생활시간조사(2019)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항목별 시간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이 인천 전체 평균 23분이고 여성은 37분, 남성은 9분을 사용한다. 가정관리 영역에도 여성의 사용시간은 2시간 22분이다(남성 39분). 반면에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이 4시간 19분 여성이 2시간 40분으로 나타난다.

일과 학습 외에 가사 및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에는 일·생활 균형 인식 전환을 위한 공공캠페인, 제도 인센티브 등을 전개한 것이 유효했다고 보여진다.

<표 II-70> 인천광역시 성별 시간사용 (2019)

단위 : 시간:분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이동
계	11:29	3:29	0:51	1:31	0:23	0:01	0:51	3:45	1:41
남자	11:22	4:19	0:56	0:39	0:09	0:01	0:36	4:10	1:49
여자	11:36	2:40	0:46	2:22	0:37	0:01	1:05	3:20	1:33

출처: Kosis.kr, 원자료: 2019년 생활시간조사 (2020:100)

<표 II-71>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표 -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14	2017	2019	2020	2021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	130 (3.2)	228 (8.9)	411 (13.9)	708 (20.2)	1,018 (25.6)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 일·생활 균형 지수

2020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3.4점으로 2019년 평균 50.5점보다 2.9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인천은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에 있어서 타 시도 대비 낮게 나타났고, 17개 시도 평균(53.4) 대비 낮은 수준(49.7)이다.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 및 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표 II-72> 전국 17개 시도 일·생활 균형 영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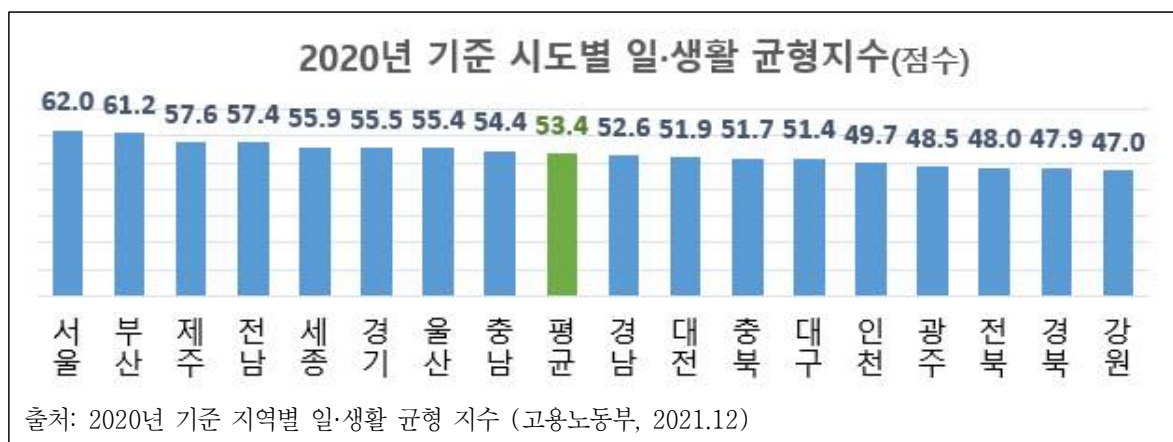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지역	계 (1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평균	53.4	13.7	15.9	15.7	8.0
	시	54.5	14.4	16.0	16.6	7.5
	도	52.5	13.2	15.9	14.9	8.5
1	서울	62.0	15.4	15.5	20.8	10.2
2	부산	61.2	15.5	17.3	15.7	12.7
3	제주	57.6	14.8	20.2	16.0	6.6

구분	지역	계 (1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평균	53.4	13.7	15.9	15.7	8.0
	시 도	54.5 52.5	14.4 13.2	16.0 15.9	16.6 14.9	7.5 8.5
4	전남	57.4	14.6	15.2	15.6	11.8
5	세종	55.9	13.4	15.3	20.7	6.5
6	경기	55.5	13.4	14.9	14.2	13.0
7	울산	55.4	15.8	17.1	17.1	5.4
8	충남	54.4	13.4	15.4	16.5	9.1
9	경남	52.6	12.7	16.3	15.1	8.4
10	대전	51.9	14.5	15.8	15.0	6.6
11	충북	51.7	12.5	15.3	15.6	8.3
12	대구	51.4	13.6	15.1	14.7	8.0
13	인천	49.7	13.6	15.5	15.0	5.6
14	광주	48.5	13.1	16.1	14.0	5.3
15	전북	48.0	11.7	16.1	12.7	7.4
16	경북	47.9	12.2	14.7	14.6	6.4
17	강원	47.0	13.0	15.3	13.5	5.2

주: 일·생활 균형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함.
출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고용노동부, 2021.12 발표)

[그림 II- 3] 전국 17개 시도 일·생활 균형 지수 비교 (2020)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인천은 2018년 지수 대비 향상되어 왔으나 2019년(50.4)과 비교하면 2020년 지수(49.7)가 하락하여 일·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확산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4] 2019년 대비 2020년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 변화



한편 자녀 돌봄 생활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의 주요 구성 요인이다. 보건제도(출산), 휴가제도(임신), 비용지원제도(양육), 성별시간활용(돌봄)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점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육아가치관을 확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안전환경 및 젠더폭력 현황

가. 안전환경

1. 안심지킴이집

인천은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점차 지역사회 내 안전한 환경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인천 안심지킴이집은 24시간 편의점 등 1,323개소에 설치되었고 2021년 기준 1,152개소를 운영중이다.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심지킴이집으로 대피하고, 112상황실과 긴급전화가 연결되어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여성아동 안심드림 마을 조성 사업으로서 여성권익시설협의회를 통해 여성폭력캠페인을 시행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합동점검(민/관/경)을 시행한다.

2. 안심무인택배함

인천 관내 안심무인택배함은 2017년 대비 매년 10개 이상 운영 개수가 늘어났으며 이용 건수도 매년 증가하였다.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에서 운영중이다.

<표 II-73> 인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단위 : 개소,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 개수	26		40		55		64		69	
이용 건수	17,586		42,644		57,512		67,271		69,230	
군구별 설치현황 (2021)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4	3	8	9	11	12	9	12	1	-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 CCTV 설치

인천 지역의 위험 경감을 위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인천의 경찰관서 수는 125개이며 CCTV 관제인력 수는 220명이다. 지자체 CCTV 대수는 22,848대이고 범죄예방 CCTV는 16,168대가 설치되어 있다(2021 지역안전지수 지표).

4. 지역사회 안전 (지역안전지수)

인천의 화재, 생활안전 등 6대 영역 관련 지표(위해지표)를 통해 안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인천의 범죄, 생활안전, 자살, 관련 안전이 특광역시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2021년 기준). 안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 등급이 2020년 대비 2단계 상승하였고 자살분야 등급이 1단계 하락하였다.

<표 II-74> 인천 지역안전지수

단위 : 등급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 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1년('20년 통계 기준)	2	4	3	4	4	4
2020년('19년 통계 기준)	4	4	3	4	3	4
전년대비 증감	2	-	-	-	△1	-

주: 안전지수=100 -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숫자가 작을수록 안전등급 높음. 지역안전지수는 위해(50%), 취약(20%), 경감(30%) 등 3개 지표를 이루어졌으며 각 지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됨.

출처: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안전정책과)

<표 II-75> 인천광역시 위해지표 추이

단위 : 명, 건, %

구분	연도별					'20 대비 증감	2021년 특광역시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통	0.42	0.33	0.36	0.37	0.28	-24.8	0.33
화재	0.07	0.06	0.11	0.08	0.09	12.4	0.09
범죄	104.48	100.29	99.97	102.89	93.06	-9.6	85.51

구분	연도별					'20 대비 증감	2021년 특광역시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안전	26.92	27.50	28.44	28.54	30.30	6.2	26.29
자살	2.56	2.32	2.70	2.50	2.57	2.6	2.41
감염병	0.36	0.35	0.45	0.40	0.48	22.4	0.49

출처: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인천시 안정정책과)

<표 II-76>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별 추이 (2017-2020)

단위 : 명, 건, (%)

구분	안전 지표(위해)	연도별				'19년 비 증감
		2017	2018	2019	2020	
교통	교통사고 사망자수	98	108	111	83	-28(25.2)
화재	화재 사망자수	7	21	14	18	+4(28.6)
	화재 발생건수	1,588	1,604	1,480	1,343	-137(9.3)
범죄	5대범죄 발생건수	30,198	30,215	31,169	28,014	-3,155(10.1)
생활안전	구급발생건수	8,280	8,595	8,646	9,121	+475(5.5)
자살	자살사망자수	700	816	758	773	+15(2.0)
감염병	법정감염병사망자수	109	106	137	146	+9(6.6)

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사망자는 제외)

출처: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인천시 안정정책과)

나. 젠더폭력

인천시민 중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중은 28.9%로 남성(36.4%) 대비 낮게 나타난다.

<표 II-77> 인천 시민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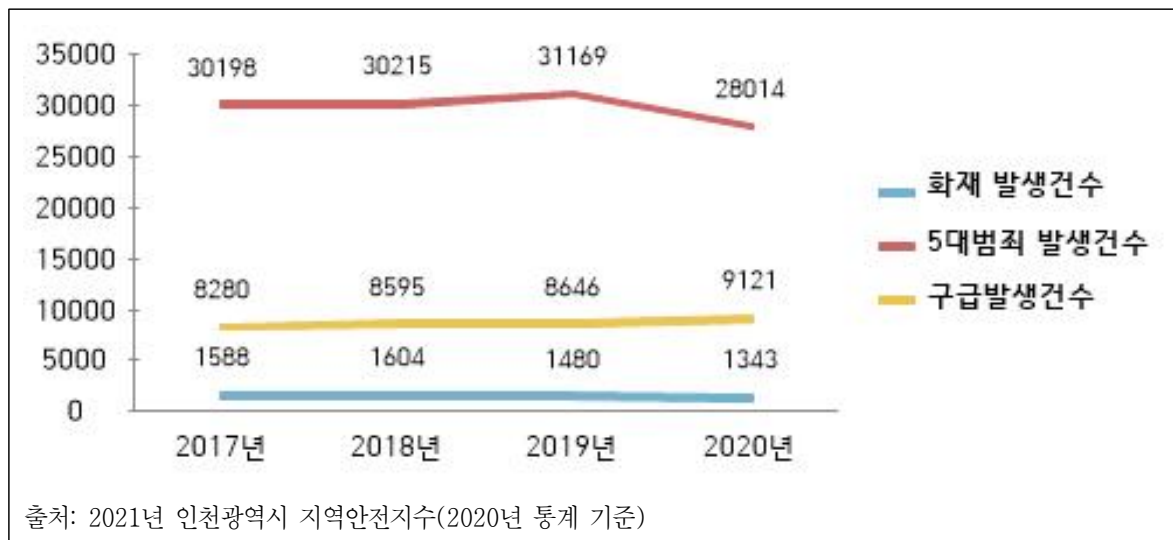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4	2016	2018	2020
전국 계	9.5	13.2	20.5	31.8
인천 소계	11.7	11.3	17.3	32.7
남자	14.7	13.2	20.1	36.4
여자	8.7	9.4	14.6	28.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짝수년 실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13세 이상) - 시도별'

인천은 안전 영역 중에서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다(2021 인천 지역안전지수). 2019년 대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남성 피해자 비율에 비해 높다. 강력범죄 중에서 여성 피해자가 비율이 높은 범죄는 강간·강제추행(91.4%)이다(인천 성인지 통계, 2020; 인천지방경찰청, 2018).

[그림 II-5] 지역안전 관련 화재/범죄/생활안전 발생 현황 (2020)



<표 II-78>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4	2017	2019	2020	2021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86.6 (2013통계)	87.8 (2016통계)	87.7 (2018통계)	88.1 (2019통계)	88.2 (2020통계)

출처: 2022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2022.2)
원자료: 경찰청 범죄통계

1) 디지털 성범죄

인천시는 2021년 6월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개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목표로 하며 2021년 기준 사건지원 505건, 피해회복지원 696건, 삭제지원 306,517건이 이루어졌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16.6%)과 통신매체 이용음란(6.9%)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23%를 차지한다(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이 외에도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악의적인 이미지 합성 유포 등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총 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삭제지원의 경우 성인사이트, P2P,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블로그커뮤니티, 기타 사이트 등 플랫폼별로 삭제 작업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표 II-79>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 및 지원 (2021)

단위 : 건

구분	상담 지원	사건지원				피해회복지원				삭제지원	
총 지원 (308,866건)	1,148	505				696				306,517	
		서류 작성	동행 지원	법률 연계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전문 심리	의료 지원	치유 프로	피해 회복 진행 점검	삭제지원	모니터링
		19	37	10	439	166	33	78	419	4,426	302,291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2021.6.14. 개소)

또한 시는 카메라 등 불법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 대응을 위해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21년 기준 관내 2,179곳에 대해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45,805회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 외에도 탐지 결과 즉, 불법촬영 적발 건수에 대한 확인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보호, 자립

2021년 기준 인천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지원은 총 127,232건으로 상담 51,627건, 심리정서, 수사, 법률, 의료 등 총 75,560건이다.

국내 여성폭력피해지원 정책은 상담지원, 시설 중심의 보호지원, 주거지원 및 공동생활가정(자립홈) 등 자립자활의 3개 영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인천의 상담시설은 총 14곳으로 가정폭력 상담소가 8곳으로 가장 많다. 둘째, 보호시설은 총 8곳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곳,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그룹홈 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1곳, 보호 및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2곳이 있다. 셋째, 자립시설로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부평) 1곳과 학대 피해 여성과 아동의 통합지원(의료, 법률, 심리상담)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3곳이 있다.

<표 II-80> 인천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상담, 보호, 자활) (2021)

단위 : 개소, (%)

구분	상담소					여성 폭력 보호 시설	여성 긴급 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
	소계	가정폭력	성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전 국	435	211	168	9	47	207	18	40	13
인 천	14(3.2)	8(3.8)	3(1.8)	1(11.1)	2(4.3)	8(3.9)	1(5.6)	3(7.5)	1(7.7)

주1: 괄호 안은 전국 대비 인천 소재 비율

주2: 여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주3: 자립시설: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등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가) 상담

인천시는 상담 확대(도서지역 찾아가는 상담), 보호,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021년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6곳,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곳(18개소),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 중이다. 기존의 피해자 상담과 보호 외에 피해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 지원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성매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기술교육 및 취업 훈련으로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II-81> 인천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 현황 (2021)

단위 : 건

구분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성매매자활 지원센터
자립지원	484	75	267	929	-

구분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성매매자활 지원센터
기술교육 및 취업훈련	-	-	-	-	1,988
일자리제공현황	-	-	-	-	41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인천광역시)

2021년 기준 인천의 여성폭력 피해 상담은 총 16,988건이다. 가정폭력(10,402건)이 상담 내용 중 월등히 많다. 이어서 정서·정신건강, 성폭력, 데이트 폭력 순으로 많다.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1곳)는 상담 후 보호시설, 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시의 여성폭력피해상담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82> 인천 여성폭력피해 상담 현황(2021)

단위: 건

구분	가정 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성 폭력	이주 지원	가족 문제	정서· 정신 건강	기타
총계 (16,988건)	10,402	1,687	624	114	162	125	3	417	1,974	1,480

출처: 2022년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강화군 옹진군 등 섬 지역 내에 상담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여성폭력위험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시는 이동상담 형태로 2021년 기준 15개 도서지역에서 총 35회 상담을 운영하였다. 2022년에 33개(옹진 23, 강화 10)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표 II-8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상담 (2021)

단위: 건

구분	상담			지원 내역				
	가정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성매매 피해	심리정서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상담연계
합계	9250	1893	2952	9216	2780	2602	37	698
중구	1,156	-	-	401	53	0	1	41
동구	-	-	-	-	1,924	2,231	-	214

구분	상담			지원 내역				
	가정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성매매 피해	심리정서	수사 법조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상담연계
미추홀구	4,231	495	2,952	5,796	385	334	17	80
연수구	1,510	—	—	704	337	0	1	0
남동구	—	932	—	726	39	31	0	215
부평구	—	315	—	182	29	2	6	96
계양구	1,347	—	—	520	12	4	12	50
서구	1,006	151	—	887	1	—	—	2
강화군	—	—	—	—	—	—	—	—
옹진군	—	—	—	—	—	—	—	—

주: 상담소 개소 지역(구군)별로 상담 건수 표기(2021.7 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상담현황(2021) <http://data.go.kr>

나) 시설

인천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중 피해자 보호시설은 6곳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곳(계양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곳(남동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곳(중구, 남동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곳(미추홀구)이 있다.

<표 II-84> 인천광역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명

연도	가정폭력피해자				폭력피해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시설 수	입소 자	퇴소 자	연말 현재 생활 인원	시설 수	입소 자	퇴소 자	연말 현재 생활 인원	시설 수	입소 자	퇴소 자	연말 현재 생활 인원	시설 수	입소 자	퇴소 자	연말 현재 생활 인원
2015	2	69	72	21	—	—	—	—	1	9	8	8	1	27	30	11
2016	2	46	42	25	—	—	—	—	1	6	7	8	1	35	32	14
2017	2	47	56	16	—	—	—	—	1	13	10	11	1	29	30	13
2018	2	49	50	15	—	—	—	—	1	2	4	9	1	33	36	10
2019	2	78	71	22	—	—	—	—	1	12	11	10	1	28	25	13
2020	1	7	9	5	2	62	56	21	2	12	9	13	1	24	26	11
2021	1	9	8	6	2	—	—	—	2	10	9	13	1	11	9	11
2022	1	4	3	5	—	—	—	—	2	4	1	14	1	9	6	8

주1: 2020년 자료부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 분류됨 (2019년 자료까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항목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자료 포함 작성되었다가 2020년부터 분리 작성)

주2: 2021년 공표 기준으로 2020년 조사결과까지 확인가능, 2021년, 2022년 수치는 공공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여성권익시설 현황(2022.8.기준)'

출처: 제61회 인천통계연보(2021), 원자료: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3) 범죄안전

인천 관내 5대 범죄 발생은 폭력, 절도, 강간·강제 추행 순으로 높다. 가정폭력 범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검거인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 피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배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장소침입 등 성범죄의 경우 남자 검거인원 비율이 여자 검거인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인천 관내 여성피해자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2018년의 경우 강간강제추행(91.4% 여성 피해자)이다(인천 성인지 통계, 2020)⁹⁾.

<표 II-85> 인천 관내 5대 범죄 (2021)

단위 : 건

구분	인천광역시 경찰청										
	합계	중부서	마포출서	남동서	부평서	서부서	계양서	강화서	연수서	삼산서	논현서
살인	36	6	12	1	5	5	1	0	2	2	2
강도	46	4	9	7	8	4	5	1	5	2	1
강간·강제추행	1,375	133	232	212	105	191	86	24	120	188	84
절도	8,994	825	1,352	1,039	987	1,345	757	130	865	1,149	545
폭력	17,789	1,502	2,767	2,073	1,795	2,884	1,734	299	1,531	2,159	1,045

출처: 인천광역시 경찰청

<표 II-86> 인천 가정폭력범죄 현황 (2020)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율 (%)	검거인원 (명)	남자검거 인원(명)	여자검거 인원(명)	여자비율 (%)
전국	402	397	98.8	398	365	33	8.3
인천	19	21	110.5	22	20	2	9.1

9) 2022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내 '인천 젠더그래픽스' 참조, 인천 성인지통계(2020), 원자료: 인천지방경찰청

주1: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주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관련 통계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II-87>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021)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건)	검거건수 (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검거인원 (명)	남자검거 인원 (명)	여자검거 인원 (명)
합계	932	836	89.7	1,010	892	34
공연음란	194	152	78.4	170	155	5
음행매개	—	—	—	—	—	—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	2	1	50.0	1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61	45	73.8	85	5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299	312	104.3	339	304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123	103	83.7	133	12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67	77	114.9	56	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176	137	77.8	213	194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	4	100.0	6	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1	1	100.0	1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등)	5	4	80.0	6	5	—

주: 성풍속범죄 유형 중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위계간음) 제외한 성범죄 건수

출처: 「경찰청범죄통계」, 경찰청

6.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현황

가. 여성 대표성

2021년 기준 인천시 전체 위원회 수는 178개이다.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수는 총 3,093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47.4%이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인 40%를 넘어섰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15.2%(202명)에서 2021년 27.6%(40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II-88> 인천광역시 위원회 여성참여 (2021)

단위 : 명, %

구분	총계	위촉직 현황		
		위촉위원수	여성	비율
위원회 수	178개	3,093	1,357	47.4

출처: 2022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천시 광역의회(군구별 및 비례) 여성 비율은 2014년 6회 지방선거 결과 8.6%(35명 중 3명), 7회 8.1%(37명 중 3명)로 10% 미만이었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17.5%(40명 중 7명)로 증가하였다.

시의원 여성 비율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확대와 특히 의사결정 과정의 성인지력과 성평등 의식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의원 비율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표 II-89> 인천광역시의회 여성의원비율

단위 : 명, %)

구분	제6회 지방선거(2014)	제7회 지방선거(2018)	제8회 지방선거(2022)
광역시의원 총수 및 성별 당선자수	광역시의원 35 비례 4 (여2, 남2) 선출 31 (여1, 남30)	광역시의원 37 비례 4 (여3, 남1) 선출 33 (여0, 남33)	광역시의원 40 비례 4 (여2, 남2) 선출 36 (여5, 남31)
여성시의원 비율 (선출+비례)	8.6%	8.1%	17.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나. 성평등 정책 현황

1) 양성평등기금 현황

성평등 기금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과 한부모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표 II-90> 성평등 기금 활용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성평등 기금 활용 사업 예산	2019	2020	2021	2022
계	100,000	198,680	220,000	220,000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70,000	69,680	70,000	70,000
한부모지원사업	30,000	30,000	120,000	120,000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0	99,000	30,000	30,000

출처: 2022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 성별영향평가

인천시에서 2005년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된 이후 대상 과제의 수와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실국별 세부 사업 외에 인천시는 2016년부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91>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특정평가
2017	245	93	11	121	19	1
2018	248	110	6	98	33	1
2019	261	97	6	82	75	1
2020	296	132	4	78	81	1
2021	280	139	3	79	58	1

주: 홍보물성별영향평가 2016년부터 실시, 특정성별영향평가 2017년부터 실시

출처: 2022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위해 고용·일자리 정책 추진 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지예산

인천시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으로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평가, 자치구별특화 관련 사업이 추진되며 인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가 사업 수와 예산의 비중이 크다.

인천의 성인지 예산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수는 2017년(175건) 대비 2020년에 350건으로 확대되고 이 시기에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까지 사업 수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 대상사업 수는 210건(예산: 4,561억원)으로 21년 대비 줄어들었다.

<표 II-92> 인천 성인지예산 반영 연도별 추이 (2014-2022)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사업(건)	103	93	104	175	311	334	350	316	210
예산액(억원)	1,457	1,259	1,240	2,742	6,317	7,923	9,299	8,973	4,561

출처: 2022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표 II-93> 인천 성인지예산 증감 비교 (2021-2022)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1		예산 증감율 (2021년 대비)
	건	금액	건	금액	
계	210	456,121	316	897,259	감소 49.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4	130,346	81	122,590	증가 6.33%
성별영향평가사업	112	275,831	212	610,340	감소 54.81%
자치단체특화사업	24	49,944	23	164,329	감소 69.61%

출처: 2022년 인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 성평등 정책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젠더거버넌스’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갖추었다.

성평등한 관점에서 정책개선과 환류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활동가 교육 등 민관협력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표 II-94> 젠더 거버넌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19	인천형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2020	사업 추진 논의 젠더거버넌스 TF 구성	자문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2021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회 구성 시민활동가 정책모니터링(청년, 노동, 군구분과 등) 교육 및 시민활동가 정책 제안서 작성	젠더거버넌스 구성 운영 *시민활동가 60명
2022(예정)	젠더거버넌스 시민활동가 모니터링	정책 환류·반영

출처: 2022년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5) 지역성평등지수

성평등한 지역(시·도)를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해 인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하위권(level 3)에 머무르다 2020년 중상위권에 진입하였다(2020년 중상위지역: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지역 전체 지수는 지난 5년 간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16) 72.6 → (‘17) 74.4 → (‘18) 75.7 → (‘19) 76.9 → (‘20) 76.4점) 인천의 성평등 등급은 상승하였지만 영역별로 성평등 정책의 우선 추진 방향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세부과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표 II-95> 지역 성평등 변화 추이

단위 :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19년 대비
국가성평등 전체	69.3	70.1	70.9	71.7	73.1	73.7	74.7	1점 ↑
지역성평등 전체	71.5	72.1	72.6	74.4	75.7	76.4	76.9	0.5점 ↑
인천 성평등	71.6	72.7	73.2	74.5	75.8	76.7	76.9	0.2점 ↑

출처: 국가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2021), 지역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2021)

전국 17개 시도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천 성평등 지수에서 취약 영역인 복지, 안전, 의사결정, 가족 영역의 성평등 수준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구군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96> 지역성평등 지수

단위 : 점

구 분	지역 성평등지수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전국(2020)	76.9	74.7	38.6	95.1	88.2	97.5	76.2	64.3	87.1
인천(2020)	76.9(중상위)	75.4	41.4	95.8	85.9	97.7	76.0	62.4	86.0
인천(2019)	76.7(중하위)	75.4	40.7	95.7	87.4	98.1	73.0	60.1	87.7
인천(2018)	75.8(중하위)	74.4	38.5	95.7	87.5	98.4	70.7	57.0	92.3
인천(2017)	74.5(중하위)	72.4	34.7	95.5	87.6	97.7	68.4	56.1	92.0

주1: 지역성평등지수=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지수화한 값(남성대비 여성). 완전평등한 상태=100

주2: 2021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는 2022.12 발표 예정 / '종합점수'는 각 연도 시행계획(인천) 참조함.

출처: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7. 소결

이 장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의 정책환경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관련 자료의 집계 기준연월에 따라 최근 5년 또는 현재 시점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또는 연도별 추이와 성별 현황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책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으로서 인천의 지리적 특성, 산업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돌봄 정책과 사회서비스, 폭력예방 및 범죄안전정책,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정책 환경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섬)지역과 도심지역으로 구성된 각 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면적 비중은 도서지역(강화군, 38.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22년 7월 기준 인구 수(3,028,579명, 여성 비율 49.8%)는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구(약 56만명), 남동구(약 51만명), 부평구(약 48만명) 순으로 인구수가 많다. 대부분 군구에서 남성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이 세 곳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약간 많으며 50% 이상이다. 이 같은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업지구이자 주거 밀집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여성의 경제활동, 안전한 환경, 공공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가구형태와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은 인구 수 대비 5% 미만이지만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결혼이민자 2018년 10,875명 → 2020년 11,771명).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성인이 이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가족 및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구 수의 증감 추이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연령과 세대, 성별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지난 5년간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낮지만,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해마다 소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 여성 청년 가구주(24.3%)의 비율은 청년 남성 1인 가구주(21.2%)의 비중보다 더 높다. 청년여성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자원에 접근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함께 노년세대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여성 고령자가 55.8%로,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다는 점에서 여성의 초고령화가 예상되지만, 건강한 상태로 노년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중장년시기부터 여성의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정책이 요구된다. 여성고령자가 밀집한 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성별로 나타나는 건강 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성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보건체계 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경제적 빈곤화가 우려되며, 성별직종분리가 확인된다. 인천의 사업체 수는 2019년 약 20만 개에서 2020년 약 30만 여개로 사업체의 수가 대폭 늘어났으나 사업체 대표자 수는 남성대표자가 64%, 여성 대표자가 36%로 여성의 비중이 낮다. 또한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 업은 전체 매출액의 3% 미만으로 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노동 시장 내의 성불평등성을 완화를 위해 취업훈련이나 경력단절 예방 등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지원 외에도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공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맞춤형 시설, 시설의 접근성,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 등 보육수요 다양화를 고려한 공보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2014년 3.2%에서 2021년에는 25.6%로 대폭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며, 일·생활 균형 인식전환,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별 일·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의 제도 참여가 관건이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천여성은 28.9%로 남성(36.4%)보다 낮다. 2020년 기준으로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은 80% 이상으로 범죄 위협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길들이기, 이미지 합성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2021년 6월에 설치하여 상담, 사건법률연계, 피해회복, 삭제지원 등 피해 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인천시는 2021년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민·관·경 통합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범죄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가 정비되었지만, 젠더폭력의 문제는 성별위계뿐만 아니라 조직위계 및 기존 관행과 문화관습에 의해 그 피해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일터, 학교, 집 등 해당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젠더폭력 위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외딴 곳일 경우 피해자 고립의 위험성도 가중되므로 섬 지역처럼 폭력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추진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의 제도적 수단이 안착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추진도구가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Ⅲ. 제1차 인천 양성평등 종합계획(2018~2022) 이행평가

1. 1차 종합계획 개요 및 특징
2. 1차 종합계획 추진성과 및 종합평가
3. 1차 종합계획 영역별 평가



III

제1차 인천 양성평등 종합계획(2018~2022) 이행평가

1. 1차 종합계획 개요 및 특징

가. 1차 종합계획 추진 개요

- 인천시는 1998년 제1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총 4차에 걸쳐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1차와 3차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차와 4차 기본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4차 기본계획 완료 후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8~2022년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각 시기의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 과제는 해당 시기의 여성정책 의제와 인천의 쟁점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 제1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남녀고용평등강화,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여성인적자원 정보화 교육,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지급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양립지원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제2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에서 남녀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 국가경쟁력 향상 IT분야 전문인력 양

성 등을 추진했다.

- 제3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일/가족 양립, 성평등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인재 DB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 제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성평등추진기반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폭력예방의무교육대상 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확대 및 성인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 종합계획(2018~2022)은 여성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 남성·가사 육아 참여 강조,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표 III-1>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역사(1998~2027)

기본/종합계획(추진기간)	정책과제
제1차 인천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년~2002년)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 2. 빈곤 악순환 예방과 건강한 가족생활 3. 여성의 대표성과 가시화 증진 4.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장 5. 평생사회교육, 건강한 여성복지
제2차 인천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년~2007년)	6. 인천 여성정보화 추진 7. 인천여성사 발간과 인천여성 정체성 확립 8. 여성정책 교류를 통한 국제화 증진 9. 여성정책의 주류화 10. 인천여성정책 추진 체계와 재정확보방안
제3차 인천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년~2012년)	1.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2. 일/가족 양립지원 3.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 여성문화 발굴 4. 여성복지권 및 건강권 보장 5.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체계 강화 6. 여성의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 확대 7.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기본/종합계획(추진기간)	정책과제
제4차 인천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년~2017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2.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3.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정치·행정·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강화 5. 다양한 가족가구 지원 6. 여성의 권익 증진 7. 성평등 문화 확산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2018년~2022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기반 강화 4.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6. 성주류화 정책추진 기반 강화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2023년~2027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2.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3.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4.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나. 1차 종합계획 특징

-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총 6개 영역의 24개 정책과제와 1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1차 종합계획은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을 주요 비전으로 삼아 일상의 차별 해소와 동등한 참여, 젠더거버넌스 강화, 일·생활 균형, 젠더폭력 근절 등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 주요 정책과제는 인천시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바탕으로 취약한 분야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2016년 기준 인천시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있으며, 특히 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안전’, ‘가족’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었으나, 점수가 높지 않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림 III-1]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구조



2. 1차 종합계획 추진성과 및 종합평가

가. 이행실적 종합평가

- 제1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영역별 성과 및 향후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 1차 종합계획의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성별영향평가의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정책의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의 내실화, 여성폭력 방지 조례 개정 및 디지털 성범죄 중심의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 공보육 인프라 및 공공돌봄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들 수 있다.

- 그러나 1차 종합계획에서 미추진된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향후 과제로 제시된 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 위상 제고,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 추진체계의 설치,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피해자 지원 관련 실적 관리의 표준화 등을 통해 향후 양성평등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2> 영역별 성과 및 향후과제

영역	성과 및 한계	향후과제
[1영역]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교육 지속 • 성평등한 공공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역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성평등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 지역 여성문화 확산 및 성평등 자료관의 활성화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모색
[2영역]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 •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 새일센터 운영 및 추가 개소 • 여성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 추진체계 설치 • 새일센터 업무 확장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전세대 여성 대상 고용평등지원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개발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3영역]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행정 분야 여성 리더십 증가 • 여성인재,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DB 구축과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 •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4영역]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 관리 • 인천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보육 인프라 확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제도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공보육의 서비스 내실화 •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 다양한 가구 대상의 일·생활 균형 사업 발굴
[5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관련 정책 기반 수립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신설을 통한 대응력 강화 • 여성폭력 피해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맞춤형 지원시설 확충 • 도서지역 피해상담 지원강화 • 여성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및 건강권 증진 사업 재개 • 피해자 지원 실적관리의 표준화
[6영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추진의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지속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금의 증액 및 사업운용 확대 •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환류의 점검 • 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내실화

나. 이행관리 평가

- 각 년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평가 및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행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의 이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종합계획의 추진 1차년도의 시행계획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미반영될 경우 이후 4년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차년도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1차년도에 모두 반영할 수 없을 경우, 차년도의 신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둘째,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각 세부과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부족하였다. 과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과제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세부과제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변경된 추진계획의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 셋째, 세부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이 가능한 실적관리 체계가 부진하다. 매년 성과지표의 기준이 달라져 연간 사업추진의 현황을 일관성 있게 점검하기 어렵거나, 특정 사업이 여러 세부과제에 중복해서 보고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반적인 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차별 성과지표를 통일하고, 사업이행 점검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1차 종합계획 영역별 평가

가. [1영역]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1) 과제 구성 특성

- [1영역]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은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1-1), 지역대중매체·디지털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1-2),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1-3) 총 3개 정책과제,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은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은 언론 매체에서의 여성에 대한 외모평가와 여성혐오 및 성차별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는 인천시민들이 여성문화 시설과 성평등 전시를 접하고 성인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표 Ⅲ-3> [1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1.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3개 과제 20개 세부과제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2) 이행실적 평가

가)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과제 1-1)

<표 Ⅲ-4> <1-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내용
1-1. 생활 속 성평등	1-1-1. 양성평등 주간행사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상, 평등부부상, 다양한 가족상 등 시상 확대 • 양성평등 기념행사 전시, 기획 지원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내용
문화 확산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인천여성영화제의 운영 지원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에 관한 캠페인 • 인천시 홍보물, 발간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송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 교사의 성평등 교육 강화 • 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및 지원 • 성평등 교육 내용의 연구와 강사 지원

○ <1-1-1. 양성평등 주간행사의 다양화>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했다.

- 여성상·평등부부상·다양한 가족상 등의 분야에서 시상이 이루어져 2021년 까지 총 253명이 양성평등 유공자로 선정되었지만,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연간 목표 인원도 80명('18년)에서 2020년 60명으로 축소되었다.
- 매년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양성평등기념주간 유공자 표창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

○ <1-1-2. 인천여성영화제 개최지원>은 영화를 통해 성차별과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 및 여성영화인 창작·네트워킹 지원을 목표로, 매년 인천여성영화제를 비롯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했다.

- 2018년과 2019년은 지원 예산이 각각 1천만 원과 4백만 원이었으나, 2020년 이후 영화제 지원액을 4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승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영화제를 통한 여성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 <1-1-3.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개선>은 사회의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을 시정하여 성평등한 문화와 관계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캠페인 및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진행을 목표로 하였다.
 - 세부내용 중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매뉴얼 작성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 가족 성평등 실태 및 개선방안(2020)』 연구에도 성차별적 언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광고 제작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 양성평등정책 시민공모전에서 성평등한 언어 및 표현에 관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2019년 ‘인천청년 성평등 서포터즈’, 2020년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등 양성평등센터 사업이 추진되었다.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까지 총 248건을 수행하였고, 사후검토에서 사전검토로 방식을 전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21년에 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수행했다. 시 제작 홍보물 외에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홍보물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 <1-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는 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시정하고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및 교사의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끌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성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지역대중매체, 디지털공간에서의 성차별 개선(과제 1-2)

<표 Ⅲ-5> <1-2.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1-2. 지역대중매체, 디지털공간에서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 전문가 모니터링단의 연구와 활동 지원 •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의 성차별 개선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의 관점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실시 • 시민 대상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 개설

○ <1-2-1. 지역신문, 방송,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디지털에서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시정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및 전문가,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목표하였다.

- 시민 모니터링단은 「정책모니터링단 Vision仁」, 「정책모니터링단 체크-IN(cheon)」 형태로 매년 진행되었으나, 2020년 온라인 공공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외한 지역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우 적었다.
- 전문가와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 <1-2-2. 정보화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초기에는 인천 시민대상의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디지털시민성 교육에 '성평등 이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평등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그나마도 2020년 콘텐츠 노후화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였을 뿐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즉 디지털 공간에서 발행하는 폭력적,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예방교육은 아니었다.
- 시민대상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은 개설되지 않았다.

다)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과제 1-3)

<표 III-6> <1-3. 지역여성문화의 활성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내용
1-3. 지역여성문화의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성사, 여성인물사에 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의 여성사 교육 실시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연구 수행 (가칭)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 및 운영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인천의 여성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마련

○ <1-3-1. 지역여성사 발굴 및 확산>은 지역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여성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여성사 교육 실시를 추진했다.

- 지역여성사 및 여성인물 발굴을 위해 2020년 『인천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가 수행되었고, 2021년에는 『인천 여성 생애구술사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2022년부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여성생애구술사 자료구축을 추진했다.
- 여성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에만 양평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양성평등교육이 진행되었고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문화관광해설 활용 가이드가 배부되었으나, 2019년을 제외하고는 여성사와 무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으로 진행되어 지역 여성사 확산이라는 초기의 목표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 <1-3-2. 지역여성문화 공간 조성>은 시민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성평등 관련 연구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 인천시 성평등 자료실 설립을 위해 2018년 『성평등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19년 『성평등자료실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가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 2020년 여성가족재단 1층 전시실에 성평등 자료관 「다다름」이 설립되어 2021년 6월 개관하였으며, 전시회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의 성평등 문화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 <1-3-3. 지역여성문화 예술인 지원>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0년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이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문화 예술인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와 한계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교육 지속
 - 시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매년 수행하고 코로나19 시국에도 지속적으로 인천여성영화제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시민 대상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인식개선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일조하였다.
- 성평등한 공공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매년 확대되었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건수에서 개선사항 건수의 확대가 요구되며, 시 관련 시설과 부처로의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지역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공간 마련
 -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역여성사 및 인물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와 생애구술사 자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여성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수

행하였다. 특히 단계적 연구를 통해 인천시 성평등 자료관 「다다름」이 개관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성평등 문화 플랫폼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향후과제

○ 청소년 대상 성평등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 생활 속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1차 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구성을 통해 지역 대중매체나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감시하고 개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10대의 성폭력 피해와 가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 1차 계획에서는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가 추진되지 않았지만, 2차년도 계획에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확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여성문화 확산 및 성평등 자료관의 활성화

- 1차 계획의 시행을 통해 지역여성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으므로, 2차년도 계획에서는 성평등 자료관을 활용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인천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여성문화 활성화와 프로그램화, 홍보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모색

- 세부사업 중 실시되지 않았던 성차별적 언어표현 개선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송 계획은 이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비방 등에 대한 경각심과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대중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나. [2영역]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1) 과제 구성 특성

- [2영역]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은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2-1),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2-3), 여성일자리 확대(2-4) 4개 정책과제,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는 위해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은 고용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의 정비와 직장내성희롱을 근절하고자 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유지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모색했다. 더불어 청년여성을 위한 고용정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성일자리 확대”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표 III-7> [2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2-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4개 과제 10개 세부과제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2-4 여성일자리 확대	

2) 이행실적 평가

가)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과제 2-1)

<표 III-8>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2-1. 고용기회의	2-1-1.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및 일자리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평등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
	2-1-2.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의 여성 참여율 제고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 지원

○ <2-1-1.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는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제공하여 성평등한 고용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고용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일환으로 분야별 심화교육 중 「일·삶과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개발하여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년 1~3회 2021년까지 총 6회를 실시하여 추진목표를 달성하였다.
- 고용정책 수립 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사업부문에서 337건의 성별영향평가와 1,311건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다.
- 고용정책에 대한 성인지 예산 반영 실적은 2018년 28개에서 시작하여, 2019년 이후 연 30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8년 일자리경제본부 9개 부서 35개 사업, 2019년도 11개부서 34개 사업, 2020년도 9개 부서 33개 사업, 2021년도 노동정책관 담당관 사업 2건 및 일자리경제본부 사업 31건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 목표를 달성했다.

○ <2-1-2.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는 남성 위주 훈련 직종에서의 여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료생의 3분의 2가량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의료기기 전문가 양

성과정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 이공계 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전문가 직업교육훈련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이공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으로 운영되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공계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였다. 청년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2-2)

<표 III-9>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 성인지적 인사고과 모델 개발 • 직장 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직장 내 임금격차 현황 점검 및 임금공시제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2-2-2.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촉진사업 추진 • 근로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권리보장 교육 실시 • 치유를 위한 노무·심리상담서비스 제공
	2-2-3. 직장 내 성희롱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예방 교육 확대, 교육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 모니터링)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점검(실태조사,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2-2-1. 고용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는 직장 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2019년 『인천시 여성친화기

- 업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개를 선정하고 작업공간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중심의 고용차별 해소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시설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직원(기간제·용역)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었고, 여성노동자가 대다수 근무하고 있는 120 미추홀콜센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공공기관 중심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수립되었지만 2021년도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 1』를 수행한 것 이외의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 <2-2-2.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감정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실현하고자 돌봄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사업, 돌봄노동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근로환경 개선 특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권리보장 교육과 치유지원을 진행했다.
-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재직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인사·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지원 및 고용촉진을 지원했다. 이후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목표보다는 고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 해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괄하는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으로 사업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2-3.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은 실질적인 직장문화를 변화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예방사업 점검을 위해 2021년 인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 공무원 및 유관단체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 체계가 제도화된 부분은 성과이지만 민간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편으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2-3)

<표 III-10>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2-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	2-3-1.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사후관리 • 여성근로자 상담지원 확대 •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
	2-3-2.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동사업 발굴/수행 • 인력 및 기술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2-3-3.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 청년여성 채용 지원 사업 추진

○ <2-3-1.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였다.

- 매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취업자 및 채용기업의 사후관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예방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업체 워크숍’을 비롯한 사업주와 근로자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 <2-3-2. 취업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중구 영종지역의 수요증대에 따라 2021년 여성가족부 지정 산단형 새일센터가 개소하였다. 또한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새일센터별 여성고용우수기업 인턴사업장 연계, 여성취업박람회,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였다.
 - 2018년도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직업교육훈련 과정개발’을 위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9년도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2020년, 2021년에는 계양새일센터의 ‘청소년 브레인아트 강사 양성과정’ 등 인력 및 기술 수요파악에 기초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원 개발했다.
- <2-3-3.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하대와 인천대의 대학일자리 센터를 통해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취업역량 Step Up」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년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청년여성 고용정책 지원 사업은 진로탐색과 취업준비 지원 등 한정적인 정책에 머무르고 있으며,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라) 여성일자리 확대(2-4)

<표 III-11> <2-4. 여성일자리 확대>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2-4. 여성일자리 확대	2-4-1. 여성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 창업 지원 •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2-4-2.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자 및 미취업자 대상 정책요구 및 실태조사 • 생애주기별 취업여성 지원 사업 개발 및 시행

- <2-4-1. 여성일자리 창출>은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형 일자리 현황 진단 및 수요를 파악하고 창업보육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24회 이상의 전문가 활용 등의 지원과 연간 10회 이상의 인큐베이팅을 진행했으나, 수혜 대상 기업이 적고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이다.
- <2-4-2.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확대>는 여성 특화 일자리 정책 및 고용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 지역 여성인력 수요 및 취업여성 근무환경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진행하며, 인천광역시새일센터를 통해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매년 수행되고 있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화되고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와 한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공공기관 고용현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기반은 다소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현황은 점검과 성별임금공시제 등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 과학기술분야에서 남성 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은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새일센터 운영 및 추가 개소

-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상담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가 추진되었고, 산단형 새일센터의 추가 개소로 지원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되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 여성창업 활성화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기업 수가 적고 예산 규모가 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적극적인 여성 창업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향후 과제

○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 추진체계 설치

- 여성일자리 정책을 아우르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성평등 노동 정책 전담 추진체계의 설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격차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 새일센터 업무 확장 및 종사자 교육강화

- 2022년 6월부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상을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에서 구직자를 포함한 전체 일하는 여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일센터 종사자의 노동법 교육과 고용평등 정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 전 세대 여성대상 고용평등 및 취·창업 지원서비스 개발

- 현재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청년 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한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경력단절 여성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청년여성을 포함한 전 세대 여성에게 고용평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지원 정책이 진로탐색과 취업준비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 취·창업정책에 대한 성인지 통계 작성 등 전반적인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 돌봄노동자 및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추진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노동권익센터 내에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상담과 권익보호 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만들거나 독립적인 여성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3영역]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1) 과제구성 특성

- [3영역]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는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3-1),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3-2),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3-3),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3-4) 총 4개 과제와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는 지난 10년간 인천의 여성 대표성의 미비함 속에서, 정치 분야의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는 행정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은 기업이 양성평등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에서는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과 지역 여성리더십을 증진하고, 지방자치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표 Ⅲ-12> [3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3-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개 과제 15개 세부과제
	3-2.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2) 이행실적 평가

가)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과제 3-1)

<표 III-13> <3-1.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3-1.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정치리더 발굴 • 유권자 특성에 맞는 정치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3-1-2.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주류화 교육 실시 • 인천시의회 성평등 연구 모임 구성 및 지원 •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 <3-1-1.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 증진과 여성 정치리더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계획했다.

- 기관추천을 통하여 기성정치인과의 멘토링 및 기존인프라 연계 등 네트워킹을 통한 여성리더 발굴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2021년부터 여성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인하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인문교양과 취업준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여성 정치리더 양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수강 대상 또한 전문직, 대학생,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어서 유권자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2021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추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3-1-2.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 군·구 의원 대상 성주류화 교육과 시의회 성평등 연구모임 진행,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 모니터링 활동, 여성의원 연석회의의 진행이 계획되었다.

- 시의원 대상 성주류화 교육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되었으나, 성과지표가 참가인원 혹은 교육횟수로 연도마다 다르게 제시됨에 따라, 전체 37명의 시의원 중 몇 명이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군·구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의 성평등 연구모임의 경우, 성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모임의 활동(2020년)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의정 모니터 4기(54명, 2018~2020.6)와 5기(55명, 2020.7~2022.6)를 운영하였다. 그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모니터 대상 성평등 교육은 연 1회 진행하였다. 그러나 애초의 성과지표는 모니터링 활동 횟수이지만, 시행계획에는 교육 횟수와 참가자 여성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의정 모니터들의 활동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시, 군·구 여성의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여성의원 연석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애초부터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다.

나)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과제 3-2)

<표 III-14> <3-2.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3-2.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2-1. 행정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설정 및 달성 •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의 내실화
	3-2-2.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수립

- <3-2-1. 행정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권 강화>는 성평등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증진하고

자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를 추진했다.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27.5%로 행정안전부 목표(19.2%)를 초과 달성했다. 주요부서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도 2018년 17명(17.5%)에서 2021년 52명(33.8%)으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은 평균 40% 이상을 줄곧 유지하였다. 2021년 조사대상 위원회 178개 중 169개(94.9%)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달성했으며,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7.4%였다.
- <3-2-2.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는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능력 발현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매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등 확대 운영계획을 추진했다.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및 임원 확대 운영 추진계획의 결과로 여성임원 비율이 2018년 7월 11.9%에서, 2021년 12월 28.4%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중간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4.4%에서 21.0%로 확대되어 여성 대표성이 향상되었다.
 -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 14.8%에서, 2021년 34.5%로 상승하여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과제 3-3)

<표 III-15> <3-2. 공공·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3-3.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관리자의 양성평등 교육 • 여성 CEO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3-3-2.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민간기업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의식 확산 캠페인 실시

- <3-3-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은 기업의 성평등한 경영을 지원하고 차세대 여성 CEO 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관리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등을 계획하였으나, 연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계획 및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3-2.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 여건 조성>은 민간기업이 여성인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였으나 연간 시행계획의 부재로 추진되지 않았다.

라)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과제 3-4)

<표 Ⅲ-16>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3-4. 젠더리더십 역량 강화	3-4-1. 지역 여성정치 리더십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 정치인-아카데미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구축
	3-4-2.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 • 인천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풀뿌리 마을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

- <3-4-1. 지역 여성정치 리더십 증진>은 여성 정치인 양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였다.
 - 여성의 역량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였으며, 여성리더아카데미 과정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교육으로 한정되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후자의 경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여성정치인 리더십 증진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3-4-2. 지역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은 지역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와 젠더전문가 및 풀뿌리 마을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을 추진했다.
- 여성인재 발굴의 경우 여성전문인력DB에 신규 인재를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매년 신규 인재를 DB에 추가 등록하여 등록 인원이 2018년 3,203명에서 2021년 3,35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DB 기능 개선 작업 또한 진행되었다.
- 2018년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37명이 수료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기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2020년부터는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인 「I-젠더활동가」를 통해 젠더활동가를 양성했다. 또한 2021년부터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마을 단위의 페미니스트 소모임을 36개('21년), 25개('22년) 지원하고 있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와 한계

○ 공공 및 행정 분야 여성 리더십 증가

- 인천시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과 위원회 위촉직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천시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도 임원과 중간관리자 비율 및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하다.

○ 여성인재,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DB 구축과 교육 운영

- 인천지역의 여성인재 DB의 구축과 발굴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인재 혹은 여성리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DB에 등록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발굴하고 교육한 인재가 적절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 향후 과제

○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여성 정치리더 발굴과 네트워킹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가 1차 종합계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예비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의 만남, 시의원과 군·구의원의 네트워킹 등 미추진된 사업의 필요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성인지적 의정 활동 지원

- 시, 군·구 의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의회 전반에 성평등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교육횟수와 참가자 수 모두를 성과지표로 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의회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약하게 추진된 의정 모티터링과 성평등 연구모임의 운영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 관리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 CEO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1차 종합계획에서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가 사실상 미추진된 만큼, 2차 종합계획에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과 더불어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4영역]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과제 구성 특성

- [4영역]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은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개선(4-1), 돌봄서비스의 강화(4-2), 가족친화경영 확산(4-3),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4-4) 총 4개 정책과제,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개선”은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구축과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조성 측면에서 세부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돌봄서비스의 강화”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및 남성의 가사, 육아참여 권리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을 계획하였다.
- “가족친화경영 확산”은 가족친화제도 정착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은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표 Ⅲ-17> [4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4. 일·생활 균형사회기반 조성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개선	4개 정책과제 8개 세부과제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4-3. 가족친화경영확산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	

2) 이행실적 평가

가)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과제 4-1)

<표 Ⅲ-18>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4-1. 일·생활 균형 지역환경 개선	4-1-1.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 가족친화마을 조성 •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
	4-1-2.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관련기능 강화 •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한 돌봄 참여 교육

○ <4-1-1.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은 기업·가정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일·생활 균형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거버넌스 구축, 가족친화마을 조성,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을 계획했다.

- 2018년 기초조사를 위해 『인천시 일·생활 균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센터 설립은 추진되지 않았다. 또한 일·생

활 균형추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은 전문가·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및 포럼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 확대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확산 예정이었으나 실제 시범마을 운영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2021년 『인천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와 2022년 가족친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체된 사업이 진행되었다.
-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 모니터링은 <4-2-3>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포함하여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4-1-2. 일·생활 균형 지역문화조성>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조성 및 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 사업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한부모를 위한 저녁 자조모임 등 가족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한 돌봄참여 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돌봄 참여 교육 시행과 매뉴얼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계획에서 제외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나) 돌봄서비스의 강화(과제 4-2)

<표 III-19>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4-2. 돌봄서비스의 강화	4-2-1. 공보육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및 내실화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4-2-2.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 공동돌봄나눔터 확대 설치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확대 및 내실화 •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 보육 실시 •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 취업부모 육아네트워크 구축 지원
	4-2-3.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권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능력 향상 •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 여건 마련

- <4-2-1.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총 34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20~40개소가 확충되었고, 인천형 어린이집 또한 2017년 50개소에서 2022년 224개소 확대 예정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보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133개소에서 2022년 140개소로 점차 지원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 <4-2-2.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아동 연령별,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양육 고충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8년 부평구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하여 시작하였으며, 2022년 32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이사랑꿈터는 2018년 18개소에서 2022년 총 44개로 확대되었다.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9,242백만 원에서 2022년 17,847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서비스 연계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2020년 부모부담 보육료를 시비로 보조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친환경 무상급식에 인천시 내 어린이집의 97.2%가 참여하고 있다.
- <4-2-3. 남성의 가사·육아참여 권리 확대>는 일·생활 균형과 더불어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능력 향상과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 여건 마련 등을 계획했다.
 -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환경모니터링에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하여 추진되었으며, 매년 제도 이용자가 증대하여 2018년 20명(육아휴직 공무원 83명 중 24.1%)에서 2021년 53명으로 증가했다.
 -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능력 향상의 경우 2021년부터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여,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육아공동체 형성을 지원했

다. 한편 공간적 남성 돌봄 참여 여건 마련의 경우 남성 돌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다) 가족친화경영 확산(과제 4-3)

<표 III-20> <4-3. 가족친화경영확산>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4-3. 가족친화 경영확산	4-3-1. 가족친화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 제도 홍보 강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 대상 인센티브 개발 •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4-3-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근무환경 실태조사 •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4-3-1. 가족친화제도 정착>은 중소기업 중심의 인천형 가족친화 컨설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맞춤형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도되었다.

-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의 경우, 2018년 45개소에서 2022년 190개소로 확대 예정이다.
- 2021년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4-3-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조성과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캠페인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2019년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49회 진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2021년 우수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2022년 우수기업을 표창할 예정이다.

- 제도가 갖춰져 있으나 기업 특성상 활용하지 못하는 분위기 개선을 위해, 정시퇴근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컨설팅을 추진했다.

라)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제 4-4)

<표 Ⅲ-21>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1개)	사업내용
4-4.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	4-4-1. 다양한 가구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 다문화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 가족돌봄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 비혼 출산·양육자의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1인 가구 일·생활 균형 지원

○ <4-4-1. 다양한 가구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는 장애아가정, 한부모가족, 가족돌봄가구, 비혼 출산·양육자,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장애아가정의 돌봄서비스는 이용 가정수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65가정에 40,339건의 돌봄서비스 연계하였고 2022년 362가정이 서비스 이용 예정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8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어교육·부모교육 등을 방문교육으로 진행했다. 2021년 기준 23,066명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2,433명이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 1인 가구 생활준비교육과 자조모임조성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컨설팅을 시행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4세 이하 비혼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 및 한계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관리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4개 정책과제에서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사업이행을 점검함으로써, 대체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은 기존의 목적과 달리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같은 성과목표로 관리되어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 지원’의 경우, 기존에 추진되었던 가족정책 사업과의 큰 차별성을 지니지 못했다.

○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일·생활 균형 제도정착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을 확대하였고, 가족친화인증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가족친화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갔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보육 인프라 확충

-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 2배 이상 개소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 등을 확대 설치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기능강화

- 관내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예산증대를 통해 맞벌이가족 일·생활 균형 지원 등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였다. 한편 일·생활 균형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일·생활 균형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나) 향후 과제

○ 인천시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제도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일·생활 균형 제도확산과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에 적합한 기업환경 맞춤형 제도가 추진되기 위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생활 균형 기능 강화는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조성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확산을 위해 컨설팅·교육 중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 공보육의 서비스 내실화

- 1차 종합계획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2차 종합계획에서는 수요에 따른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사 대상의 성평등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추진, 어린이집 내 성평등 교재·교구 활용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에 대한 기업문화의 변화와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에 직면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추진되지 못한 남성의 돌봄참여에 대한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넘어선 사업이 필요하다.

○ 다양한 가구 대상의 일·생활 균형 사업 발굴

- 1차 종합계획의 다양한 가구(1인 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등)의 맞춤형 일·생활 균형 계획이 기존의 가족정책서비스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차 계획에서는 다양한 가구의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화된 사업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마. [5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1) 과제 구성 특성

- [5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은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5-1),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5-2),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5-3),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5-4),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5-5),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5-6)의 총 6개의 정책과제와 2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및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과 이주여성 등 소외 여성의 폭력 대응능력의 함양을 시도했다.
-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의 강화”는 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을 통해 청소년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I-22> [5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5.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 건강권 증진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6개 과제 20개 세부과제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2) 이행실적 평가

가)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제 5-1)

<표 Ⅲ-23>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사업내용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1.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 • 여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 여성폭력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폭력 OUT! 인천’ •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 근절 홍보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거점화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인지 교육과의 통합 • 수요자 맞춤형 강좌 진행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에 여성안전 관련 사항 추가 •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 <5-1-1. 제도적 기반 마련>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폭력의 예방 실효성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례화를 추진했다.

- 여성폭력 예산을 지원받는 피해자 지원시설이 2018년 22개소에서 2021년 27개소로 늘어났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시설 관련 예산도 2019년 5,537백만 원에서 2022년 8,498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했다.

○ <5-1-2.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여성 차별적인 사회의식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인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공익광고 송출 및 홍보자료를 제작·배포,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폭력근절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 <5-1-3.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2019년부터 평균 30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도 2019년부터 200회 이상 매년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총 208개의 학교에서 초등학생 대상 성인 지적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 <5-1-4.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지역환경 개선사업 여성안전 관련 사항 추가, 인천형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 여성아동 안심드림 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통해 여성거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씩 추가하면서 추진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예산삭감에 따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인천시가 직접운영하면서 축소 추진되었다. 2020년, 2021년에는 여성권익시설협의회를 지원하였고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은 2018년부터 꾸준히 추가하여 2021년까지 1,034개소를 설치 운영했다.
 - 무인안심택배함의 경우 2019년 55개소에서 2021년 69개소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이용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9,230건 이용건수를 달성했다.

나)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5-2)

<표 III-24>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5-2. 새로운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력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불법촬영장비 전문 탐지장비 임차 • 여성안전지도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빈번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강화		구역 표시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5-2-2.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스톱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SMS 발송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 <5-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2019)』를 진행하고, 2021년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에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여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폭력예방교육에 디지털 성범죄가 추가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 2018년 시, 군·구에 총 381대의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매년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진행하였다.
- <5-2-2.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는 스톱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주지시키고 건전한 데이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2회 이상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스톱킹·데이트폭력 상담 또한 매년 연 500건 이상 시행되었다.
- <5-2-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예규로 「인천광역시 성희

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가 이루어졌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지침 및 성희롱 처리절차가 마련되었다.

다)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5-3)

<표 III-25>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사업내용
5-3. 여성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여성폭력 대응 교육 •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 <5-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를 추진했다. 2019년 민관경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2회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약 4회, 컨퍼런스 1회, 간담회 1회, 실무자간담회센터 교류 2회가 실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0회가 달성되었다.

-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이동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서지역 찾아가는 여성폭력 이동상담을 통해 도서방문 35회를 실행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시설이 2017년 6개소에서 2021년 9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대상 시설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지원금액 및 대상자수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5-3-2.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관 역량 강화>는 여성폭력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소진 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을 추진했다.

- 2021년 27개소 154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지원하였고, 29개의 종사자 소진방지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사회 복지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5-4)

<표 Ⅲ-26>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사업내용
5-4.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5-4-1. 청소년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데이트 교육 및 여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 다각화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영세자영업자 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가정방문을 통한 피해자 발굴·관리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 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전문강사·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 및 파견 •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 <5-4-1. 청소년 대상 폭력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근절 활동 추진>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대상 폭력 가해 예방교육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계획했다.

- 청소년 대상의 폭력예방은 성문화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2020년(526건)을 제외하고 ‘성문화 체험관’과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매년 2,3천 건의 청소년 대상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5-6-1③과 일치한다.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의 경우 2021년 3,144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상담 3,300건을 목표로 했다.
- <5-4-2.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폭력 대응능력 강화>는 가정방문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의 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계획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으로 일반인 대상의 폭력예방교육과 통합되어 실시되었고, 애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진 않았다.
- <5-4-3.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는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피해자 발굴·관리,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가 계획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 <5-4-4.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공유 강화>는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계획했다.
 - 2020년부터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가 추가 운영되었다. 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피해지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2019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6,294명에서 2021년 10,852명으로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지속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주여성 모임 지원도 2019년 20개 팀에서 2021년 35개 팀으로 확대되었다.

마)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5-5)

<표 III-27>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5-5. 여성건강권 증진 기반 강화	5-5-1.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 여성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및 기초자료 DB 구축 • 인천형 여성건강지표 개발·적용 •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정책과제	세부과제(3개)	사업내용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확대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신건강 증진 실천방법 보급 확대 •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강화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여성폭력 상담기관의 연계

- <5-5-1. 제도적 기반 마련>은 2019년, 2020년에 여성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발전방향 논의가 각 1회씩 진행되었으나,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및 기초자료 DB 구축을 비롯한 이외의 사업들은 추진되지 않았다.
- <5-5-2.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지역 보건소의 탄력운영과 이동식 건강상담센터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며 추진되지 못했다.
- <5-5-3. 정서적 지지기반 강화>는 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이동서비스 실시, 폭력지원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미추진되었다.

바)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5-6)

<표 III-28>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사업내용
5-6. 계층 간 건강형평성 향상	5-6-1. 청소년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 중심주의 의식 개선 교육 • 뉴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산후 건강관리 강화 • 공공의료기관(인천의료원) 내 분만실 설치 •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관리 강화 • 연령대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센터 설립·운영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이주여성과 도서지역 거주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관리 강화

○ <5-6-1. 청소년 건강 증진>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성인지적 성교육은 코로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2020년(526건)을 제외하고 ‘성문화체험관’과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매년 2, 3천 건의 청소년 대상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매해 약 7천 명 내외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형태로 진행했다.
- 여성청소년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실행을 위해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연간 시행계획에 미포함되어 추진되지 않았다.

○ <5-6-2. 모성보호의 다각화>의 경우 난임 및 산모 지원 사업은 활발히 시행되었으나,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업은 미추진되었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2022년까지 1만 건을 진행한다는 초기 계획은 달성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난임부부 6,610명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했고, 236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진행했다.

- 출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2020년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2021년 인천산후조리원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했다.
- <5-6-3. 성인여성 건강 증진>은 연령대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 <5-6-4.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건강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간이형 건강관리센터’의 상시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미추진되었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 및 한계

- 여성폭력 관련 정책 기반 수립
 - 2021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다. 2022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인천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인천의 여성폭력 현황 분석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신설을 통한 대응력 강화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개소 후 7개월간의 상담(1148건), 사건지원(505건), 피해회복(696건), 삭제 요청(4426건) 등의 지원 건수를 보면 디지털 성폭력 지원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욕구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 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 보호시설 추가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 관련 예산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되

었다. 이주여성폭력 피해자 생활시설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등을 추가 개소하였고,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상과 지원금도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시설 설치와 피해자지원 상담소 등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

나) 향후 과제

○ 피해자 맞춤형 지원시설 확충

-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설과 동반자녀의 연령이 고려된 가족보호시설 등 대상별 특성이 반영된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보호시설의 추가 설치도 요구된다. 현재 인천에 긴급 보호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여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 도서 지역 피해상담 지원강화

- 인천은 40여 개의 유인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서 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월 1회 정도의 상담인력 파견만으로 사례발굴과 후속지원 등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지역주민 간 집단적·폐쇄적 문화가 강하여 피해자 및 가족은 피해사실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에 대한 우려가 큰 특성이 있다. 따라서 외부인의 파견을 통한 교육과 활동가 양성과 더불어 섬 내부의 주민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피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여성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및 건강권 증진 사업 재개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감염병 확산 예방으로 집중되며 여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의 건강권 증진)를 위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시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지원 실적관리의 표준화

- 피해자 지원 실적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실적관리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기 다른 형태로 산출되고 있는 피해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여성폭력의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 [6영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 과제구성 특성

- [6영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6-1),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6-2),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6-3) 총 3개의 과제와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을 정비”는 성주류화 정책 결정 기구를 내실화하고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통해 도시공간 정책을 포함한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는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내실화하고 성인지 통계 구축의 확대, 성인지 교육 체계의 정비를 모색하였으며, “성주류화 정책 민간체계 구축”은 젠더거버넌스의 구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강화와 젠더 이슈 발굴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계획했다.

<표 III-29> [6영역] 과제 개요

영역	정책과제	비고
6.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4개 과제 10개 세부과제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2) 이행실적 평가

가)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과제 6-1)

<표 III-30>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내용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환경 정비	6-1-1. 성주류화 정책 결정기구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및 위상 제고 •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성인지 역량 강화
	6-1-2.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 및 젠더정책담당관 지정 •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신설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6-1-3. 성주류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성주류화 실행 매뉴얼(안) 개발 •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6-1-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시-군구간 협력체계 구축

○ <6-1-1. 성주류화 정책 결정기구의 내실화>는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자 계획했다.

-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위원장의 위상을 격상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위원회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연 1회 운영되었고,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하는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사업목적은 위원의 성인지 교육 참여 의무화로 되어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여 전체 위원 중 교육 참여자의 비율은 파악할 수 없다.

○ <6-1-2.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는 성평등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지정, 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으로 2020년에 젠더전문관 1명을 확충하였고, 2021년에는 젠더전문관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성주류화팀(행정5급 1인, 행정6급 2인)’이 신설되어 성주류화 추진 기반이 강화되었다.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인천여성가족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몇 번의 직제 개편을 통해 정책연구부서와 인천양성평등센터 및 인천성평등자료관을 산하에 둔 성주류화 사업부서의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 <6-1-3. 성주류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은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계획과 평가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 성주류화 도구(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추진목표 및 지표 설정을 위해 2019년 『성주류화 실행 매뉴얼 연구』를 진행하고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성주류화 기본수칙과 홍보물 제작 시 젠더 관점 반영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한 젠더전문가 검토를 매년 진행하였으며, 2021년 이후에는 공모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젠더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 선정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6-1-4.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은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여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2019년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은 5개 구 6개 사업, 2021년 7개 구 8개 사업에 특화사업비를 지원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안) 개발 연구』, 『인천형 여성친화마을 모델(안)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 공무원 및 시의원, 컨설턴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컨설팅 및 사업성과평가, 정책개선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점은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나)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과제 6-2)

<표 III-31>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4개)	내용
6-2.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민관협력체계 구축	6-2-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운영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6-2-2.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
	6-2-3. 성인지 통계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관리 • 행정통계의 성별 분리 통계 실시
	6-2-4. 성인지 교육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확대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정책담당자의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6-2-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는 성주류화의 주요 실행도구인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실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연 2회 개최 이외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추진되지 않았다.

-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248건 이후 매년 250건 이상 시행되어 당해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달성했다. 그러나 정책개선율이 성과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평가하기 어렵다.
- 2018년 인천 최초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작하였고 이후 도시재생사업, 신축 공공시설, 관광콘텐츠, 창업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하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6-2-2.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화>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했으며,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집행 실적을 비교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 매년 300건 이상 작성되었으며, 예산액도 2018년 6,317억 원에서 2021년 8,973억 원으로 상승했다.

- 2022년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결산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 점검의 기회를 마련했다.
- <6-2-3. 성인지 통계 구축 확대>는 격년으로 『인천 성인지 통계』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매년 주민등록인구통계·인천기본통계에 성별 분리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 <6-2-4. 성인지 교육 체계 정비>는 성주류화 추진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을 추진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인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 성인지 교육 참여 인원이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21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다)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과제 6-3)

<표 III-32>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2개)	내용
6-3. 성주류화 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6-3-1. 젠더거버넌스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6-3-2.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젠더전문가집단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인지 교육 지원

- <6-3-1. 젠더거버넌스 기반 조성>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학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9년 『인천형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젠더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과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1년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이후 청년, 노동, 군·구 분과별 모임을 통해 포럼 및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성과를 남겼다.

- <6-3-2.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는 지역의 젠더 이슈 발굴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0년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사업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를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성과와 한계

- 성평등 정책추진의 기반 마련
 - 젠더전문관과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젠더전문관은 행정 6급으로서 다른 팀이나 부서와 교섭력을 가지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성주류화팀의 경우 여성정책과 내의 한 개 팀에 불과하여 여성가족국 내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천시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 등 권한에 한계가 있다.
-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지원
 - 인천시는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2022년 현재 5개 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성과평가, 정책개선 자문 역할을 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지속 및 확대
 - 인천시는 2018년부터 매해 다양한 주제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점검을 통한 정책개선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향후과제

○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사업운용 확대

-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기준 48억여 원이며, 2020년까지 1억원 내외의 사업비는 사용하였고, 2021년에 2억원 가량으로 다소 상승했다. 낮은 금리와 이자수입 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규모가 매우 협소하며,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지역여성단체 지원과 민간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환류의 점검

- 1차 종합계획 후반에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분과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분과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정책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정책환류가 체계화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내실화

- 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 위원회가 연 2회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력을 갖춘 실행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과 심의를 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IV.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수요조사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IV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수요조사

1.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인천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2023-2027)」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의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56명과 만 15~18세의 남녀 청소년 244명으로 총 2,500명이다. 조사대상은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을 실시하여 추출하였고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15일간)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성인을 대상으로는 양성평등의식, 경제활동, 가족돌봄 및 시간활용, 안전 및 건강, 양성평등정책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청소년 설문조사의 내용은 양성평등의식, 가족생활 및 가치관, 안전 및 건강, 학교생활, 양성평등정책, 5개 영역이다.

<표 IV-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인천시민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 대상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만 15~18세 남녀 청소년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표본 설계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추출	성·학령·지역별 비례할당추출
유효 표본수	2,256명	244명

구분	내용	
	인천시민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2. 07. 08 ~ 22. 07. 22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 경제활동 - 가사·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 - 안전 및 건강 -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 가족생활 및 가치관 - 안전 및 건강 - 학교생활 -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성인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거주지역별로 서구(15.1%), 남동구(14.4%), 부평구(14.1%), 미추홀구(12.9%), 연수구(12.4%)등으로 구분된다.

성별은 남성 50.8%, 여성 49.2%로 고르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 18.7%, 30대 19.0%, 40대 21.0%, 50대 21.6%, 60대 이상 약 20%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가 56.7%, 미혼 또는 비혼자가 37.1%이며 동거, 이혼, 사별, 별거 대상자는 6.2%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았고, 부부(19.6%), 1인 가구(17.8%), 3세대 이상(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별로는 비장애인이 93%, 등록 및 미등록 장애인은 6.9%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무직 또는 퇴직이 15.2%, 주부 13.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4%, 서비스종사자 7.8%, 관리자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 응답자는 300~399만원이 19.9%로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 16.5%, 400~499만원 16.2%, 700만원 이상 15.6%, 500~599만원이 11.6%등의 순이었다.

<표 IV-2> 성인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중구	172	7.6
	동구	108	4.8
	미추홀구	290	12.9
	연수구	280	12.4
	남동구	324	14.4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부평구	318	14.1
	계양구	251	11.1
	서구	341	15.1
	강화군	110	4.9
	옹진군	62	2.7
	남성	1145	50.8
	여성	1111	49.2
연령별	20대	421	18.7
	30대	428	19.0
	40대	473	21.0
	50대	488	21.6
	60대 이상	446	19.8
혼인상태별	미혼/비혼	836	37.1
	기혼(배우자 있음)	1280	56.7
	동거(사실혼 포함)	21	0.9
	이혼	83	3.7
	사별	29	1.3
	별거	7	0.3
가구형태별	1인 가구	401	17.8
	부부(사실혼 포함)	443	19.6
	한부모 가족	50	2.2
	부모+미혼자녀	763	33.8
	부모+기혼자녀	63	2.8
	3세대 이상	380	16.8
	기타	156	6.9
장애여부	장애있음(등록장애인)	91	4.0
	장애있음(미등록장애인)	66	2.9
	장애없음	2099	93.0
현재 직업	관리자	174	7.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3	9.4
	사무종사자	609	27.0
	서비스종사자	175	7.8
	판매종사자	80	3.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	0.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1	3.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21	0.9
	단순노무종사자	95	4.2
	군인	5	0.2
	주부	310	13.7

구 분		사례수	비율(%)
	학생	79	3.5
	무직/퇴직	342	15.2
	기타	69	3.1
월 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2	4.5
	100~199만원	151	6.7
	200~299만원	372	16.5
	300~399만원	449	19.9
	400~499만원	365	16.2
	500~599만원	261	11.6
	600~699만원	205	9.1
	700만원 이상	351	15.6
합 계		2,256	100.0

청소년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거주지역별로는 서구 15.2%,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모두 13.9%, 미추홀구 12.3%, 계양구 11.1%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0.8%, 여성이 49.2%의 비율로 거의 비슷하다.

연령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44.7%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해당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20.9%, 고등학교 1학년 15.6%, 중학교 3학년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14.8%의 비율로 적지 않았다.

<표 IV-3> 청소년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중구	19	7.8
	동구	12	4.9
	미추홀구	30	12.3
	연수구	34	13.9
	남동구	34	13.9
	부평구	34	13.9
	계양구	27	11.1
	서구	37	15.2
	강화군	11	4.5
	옹진군	6	2.5
성별	남성	124	50.8
	여성	120	49.2
연령별	중학교 3학년	10	4.1

구 분		사례수	비율(%)
	고등학교 1학년	38	15.6
	고등학교 2학년	51	20.9
	고등학교 3학년	109	44.7
	학교에 다니지 않음	36	14.8
합 계		224	100.0

나. 설문 문항구성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인천시에서 실시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제1영역은 ‘양성평등 의식 문화’로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남녀인식, 인천시에서 개선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 관련 문항 등이 담겨 있다. 제2영역 ‘경제활동’에는 미취업자의 일자리 에 대한 인식, 취업자의 직장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출산휴가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생각 등이 있다. 제3영역 ‘가사·가족돌봄 및 시간 활용’은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자녀 양육 관련 가사 분담에 대해 조사하는 문항들이다. 제4영역의 주제는 ‘안전 및 건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등을 질문하였고, 제5영역은 기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수요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또한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영역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로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을 묻고 있다. 제2영역은 ‘가족 생활 및 가치관’을 주제로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다. 제3영역은 ‘안전 및 건강’을 주제로 질문하였으며,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젠더폭력 관련 정책 필요도 등을 담고 있다. 제4영역 ‘학교생활’은 성교육 이수경험 및 확대 필요성,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을 조사하였고, 제5영역은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으로 인천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IV-4>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내용

인천시민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인식 - 인천시에서 개선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의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 출산휴가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 -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생각 • 가사·가족돌봄 및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 안전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 젠더폭력 관련 정책 필요도 •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 등 - 성별 이미지 • 가족생활 및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의견 • 안전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 젠더폭력 관련 정책 필요도 •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이수경험 및 확대 필요성 -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 •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다. 성인조사 결과

1)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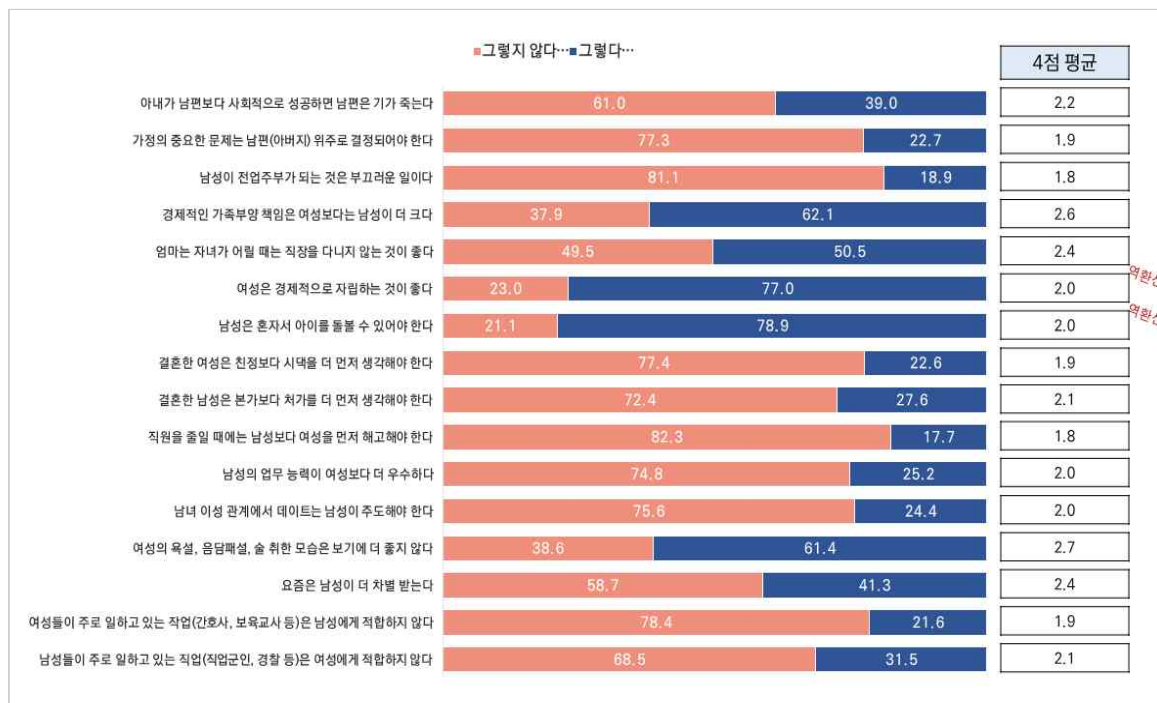
성인 대상 설문조사의 첫 번째 영역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에 대한 것이다.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항목은 양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과 표에서는 이를 4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성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와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문항은 역질문 문항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성숙한 것이다.

[그림 IV-1]은 각 문항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그렇다’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도식화 하였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문항은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1.8점)’와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1.8점)’이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2.7점)’로 여성의 특정 행위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인천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N=610, 단위 : %, 점



<표 IV-5>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응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문항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 의식은 높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역질문 문항 두 개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긍정응답으로 환산하였으며 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성별 분석결과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의 부정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항목은 남성의 부정응답 비율이 44.1%인 반면, 여성의 부정응답 비율은 74.1%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고정관념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항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부정 의식이 높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인천시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단위 : %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256	1,145	1,111	421	428	473	488	446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61.0	61.3	60.9	74.8	69.6	59.8	54.7	48.0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77.3	72.1	82.3	81.5	80.1	81.2	77.5	66.6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81.1	77.0	84.1	81.5	81.1	82.7	80.9	79.1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37.9	31.4	44.0	50.6	46.5	38.7	30.3	24.9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49.5	50.3	50.4	62.7	57.2	47.8	46.3	35.0
8)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77.4	72.8	81.7	83.1	79.2	79.7	77.3	68.2
9) 결혼한 남성은 본가보다 처가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72.4	73.2	72.1	67.7	72.0	72.1	77.5	72.0
10)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82.3	77.3	86.9	82.4	81.3	85.8	83.0	78.5
11)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74.8	67.1	82.4	77.4	75.0	76.1	74.4	71.1
12)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75.6	74.1	77.1	74.8	79.2	77.8	75.6	70.6
13)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38.6	38.1	39.0	55.8	47.7	39.3	30.7	21.3
14)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다	58.7	44.2	74.1	62.2	57.9	58.8	59.6	54.9
15)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작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78.4	72.2	85.0	81.5	78.5	79.1	80.7	72.0
16)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68.5	58.8	78.5	70.5	65.4	67.0	71.5	67.9

	긍정(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256	1,145	1,111	421	428	473	488	446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77.0	67.7	84.4	73.4	78.3	78.9	76.2	78.3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78.9	72.4	82.9	81.2	82.0	82.5	78.1	70.0

동일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항목에 대해 2018년에 실시한 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IV-6>이다. 대부분의 문항이 1차보다 2차에서 평균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더 성숙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의 경우 1차 1.9점에서 2차 2.4점으로 상승하였는데, 이 문항은 1차 조사 시 ‘엄마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였다가 2차 조사에서 수정된 것으로 점수의 차이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문구보다 자녀의 연령을 어릴 때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정’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6> 인천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비교(1차 2018년도 VS 2차 2020년도)

단위 : %, 점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1차(2018년도)	54.2	45.8	2.4
	2차(2022년도)	61.0	39.0	2.2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1차(2018년도)	72.4	27.7	2.1
	2차(2022년도)	77.3	22.7	1.9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차(2018년도)	73.3	26.8	2.0
	2차(2022년도)	81.1	18.9	1.8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1차(2018년도)	28.6	71.4	2.8
	2차(2022년도)	37.9	62.1	2.6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1차(2018년도)	81.4	18.6	1.9
	2차(2022년도)	49.5	50.5	2.4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1차(2018년도)	12.5	87.6	1.8
	2차(2022년도)	23.0	77.0	2.0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차(2018년도)	11.6	88.5	1.8
	2차(2022년도)	21.1	78.9	2.0
8)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1차(2018년도)	79.6	20.4	1.9
	2차(2022년도)	77.4	22.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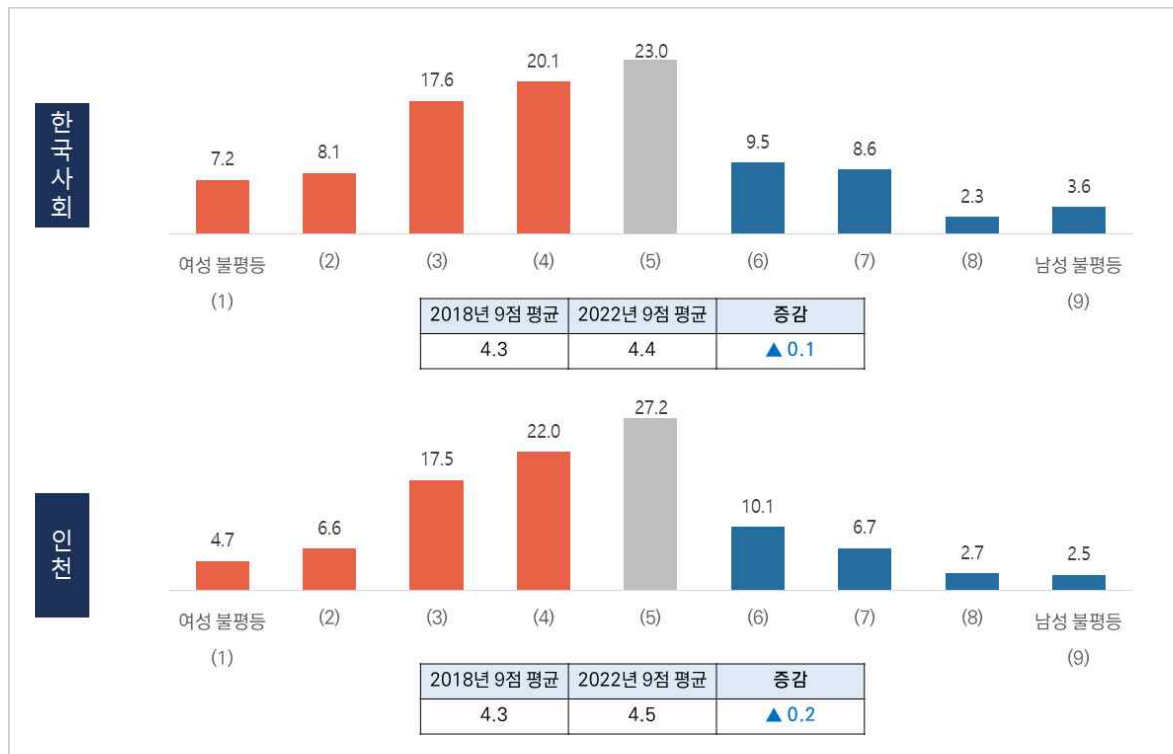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9) 결혼한 남성은 본가보다 처가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72.4	27.6	2.1
10)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1차(2018년도)	86.6	13.4	1.8
	2차(2022년도)	82.3	17.7	1.8
11)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1차(2018년도)	63.6	36.5	2.2
	2차(2022년도)	74.8	25.2	2.0
12)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차(2018년도)	65.9	34.1	2.2
	2차(2022년도)	75.6	24.4	2.0
13)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1차(2018년도)	20.6	79.4	3.1
	2차(2022년도)	38.6	61.4	2.7
14)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다	1차(2018년도)	59.6	40.4	2.4
	2차(2022년도)	58.7	41.3	2.4
15)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작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78.4	21.6	1.9
16)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68.5	31.5	2.1

다음은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로,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와 인천시를 얼마나 양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림 IV-2]에서 중간인 5점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 인식에 가까우며, 좌측인 1점으로 갈수록 여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우측인 9점으로 갈수록 남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를 보면 한국 사회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4.4점,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식은 4.5점으로 둘 다 5점에 가까우나 여성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약간 치우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1차 조사인 2018년 자료의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0.1점,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0.2점 상승하여 해당 수치만큼 양성평등에 더 근접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 점



다음의 <표 IV-7>은 앞서 살펴본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성별 및 연령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그림 IV-2]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 응답자의 경우, 양성평등(가운데, 5점)에서 여성 불평등 쪽으로 약간 치우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나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양성평등(5점)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여성 불평등 쪽으로 약간 치우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비해 양성평등(5점)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와 50대에서 양성평등하다고 응답한 5점 비율이 한국 사회의 결과에 비해 약 9%가량 높았다.

<표 IV-7>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명)	여성 불평등 (1)	(2)	(3)	(4)	양성 평등 (5)	(6)	(7)	(8)	남성 불평등 (9)
한국 사회	전체	2,256	7.2	8.1	17.6	20.1	23.0	9.5	8.6	2.3	3.6
	남성	1,145	2.6	3.1	10.4	20.2	29.3	13.1	12.8	3.1	5.5
	여성	1,111	11.9	13.2	25.1	20.0	16.6	5.9	4.2	1.5	1.6
	20대	421	8.8	9.7	14.3	14.0	22.8	10.7	9.5	3.1	7.1
	30대	428	8.9	7.2	18.7	14.3	22.0	9.6	11.0	3.0	5.4
	40대	473	7.2	9.3	20.3	20.9	17.8	11.2	9.7	1.1	2.5
	50대	488	6.6	8.2	18.4	24.8	21.5	8.0	8.6	2.7	1.2
	60세 이상	446	4.7	5.8	16.1	25.3	31.4	8.3	4.3	1.8	2.2
인천시	전체	2,256	4.7	6.6	17.5	22.0	27.2	10.1	6.7	2.7	2.5
	남성	1,189	2.4	3.0	11.2	20.7	33.0	12.9	9.8	3.3	3.8
	여성	1,111	8.1	10.4	26.4	22.5	19.9	6.7	3.2	1.9	1.1
	20대	421	5.5	5.2	16.2	16.4	31.4	8.6	7.6	4.0	5.2
	30대	428	6.3	6.1	16.1	18.0	27.1	10.3	8.2	4.0	4.0
	40대	473	4.2	8.9	21.4	21.4	22.4	10.1	8.2	2.1	1.3
	50대	488	4.5	8.0	19.3	24.4	30.9	11.7	3.6	0.9	1.8
	60세 이상	446	3.4	4.5	14.1	29.1	27.2	10.1	6.7	2.7	2.5

계속하여 <표 IV-8>은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2018년 1차 실태조사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2차 실태조사 결과가 1차 실태조사 결과보다 양성평등에 약간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양성평등(5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실태조사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남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값이 양성평등에 좀 더 가까워진 이유는 응답자가 양성평등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남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V-8>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비교(1차 2018년 VS 2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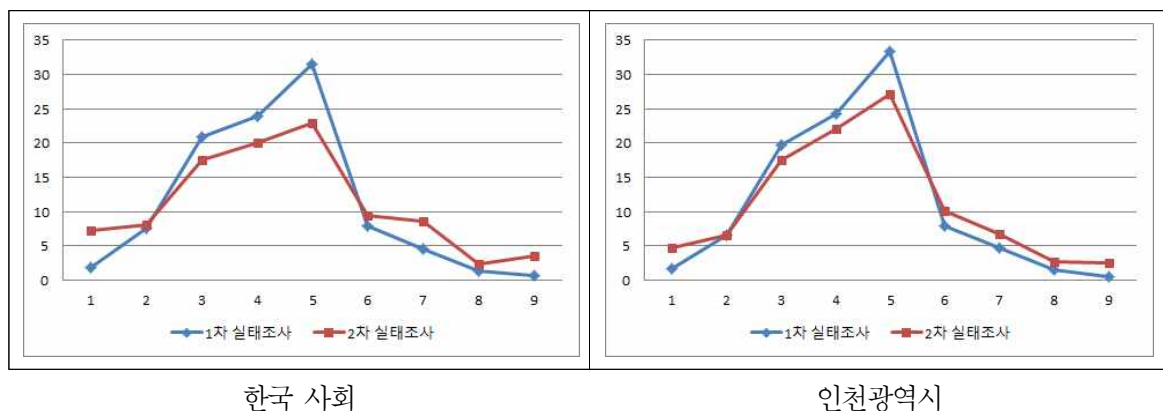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여성 불평등		↔		양성 평등		↔		남성 불평등		여성 불평등	남성 불평등	평 균
			(1)	(2)	(3)	(4)	(5)	(6)	(7)	(8)	(9)				
한국 사회	1차 (2018년도)	2,000	1.9	7.6	20.9	23.9	31.5	8.0	4.5	1.3	0.6	54.3	14.3	4.3	
	2차 (2022년도)	2,256	7.2	8.1	17.6	20.1	23.0	9.5	8.6	2.3	3.6	53.0	24.0	4.4	
인천시	1차 (2018년도)	2,000	1.7	6.5	19.7	24.3	33.3	8.0	4.7	1.5	0.5	52.1	14.7	4.3	
	2차 (2022년도)	2,256	4.7	6.6	17.5	22.0	27.2	10.1	6.7	2.7	2.5	50.8	22.0	4.5	

주: 표 우측의 여성불평등값은 (1)부터 (4)까지, 남성불평등값은 (6)부터 (9)까지의 비율을 합산한 값임.

1차와 2차 실태조사 비교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V-3]과 같다. 먼저 [그림 IV-3]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면 양성평등인 5점의 비율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불평등에 해당하는 1점부터 4점까지의 결과는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 불평등에 해당하는 6점부터 9점까지의 결과는 모두 증가하였다.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식 역시 5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요컨대,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 모두 전반적으로, 양성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양쪽 가장 끝의 여성불평등 응답 비율과, 남성 불평등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평등에 대한 인식이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3] 한국 사회와 인천시의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1차 VS 2차)



이어서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을 [그림 IV-4]에 나타냈다.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5점은 양성평등, 1점으로 갈수록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9점으로 갈수록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의미한다. 5년 후 한국 사회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은 평균 4.7점으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 역시 평균 4.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주관적 성평등 수준

단위 : %, 점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를 <표 IV-9>에 제시하였다. 먼저 양성평등(5점) 인식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양성평등의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석결과에서는 여성 불평등(3, 4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5년 후에도 여성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V-9>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평등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명)	여성 불평등 (1)	(2)	(3)	(4)	양성 평등 (5)	(6)	(7)	(8)	남성 불평등 (9)
한국 사회	전체	2,256	4.3	4.6	11.2	20.6	34.6	11.7	7.5	2.0	3.5
	남성	1,145	1.7	1.7	4.9	16.2	39.0	16.1	11.3	3.3	5.8
	여성	1,111	6.9	7.6	17.6	25.0	30.2	7.3	3.6	0.7	1.1
	20대	421	6.9	5.2	10.7	14.5	33.3	11.9	8.6	3.3	5.7
	30대	428	4.2	6.1	11.0	16.4	32.7	11.7	9.3	2.6	6.1
	40대	473	4.7	3.6	14.0	22.0	30.4	12.5	8.2	2.1	2.5
	50대	488	3.3	4.5	11.3	23.2	36.9	11.9	5.9	1.4	1.6
	60세 이상	446	2.7	3.8	8.7	26.0	39.7	10.8	5.6	0.9	1.8
인천시	전체	2,256	3.4	4.7	10.8	21.2	36.1	11.6	7.0	2.2	3.1
	남성	1,145	1.3	1.7	4.7	16.9	41.6	15.9	9.6	3.1	5.2
	여성	1,111	5.5	7.8	17.0	25.7	30.4	7.2	4.2	1.3	0.9
	20대	421	5.5	4.3	10.5	17.1	37.8	10.0	7.6	1.9	5.5
	30대	428	3.0	7.2	9.6	16.4	36.9	9.8	8.6	3.5	4.9
	40대	473	3.4	4.4	14.4	21.1	33.8	10.4	8.0	1.9	2.5
	50대	488	2.7	4.9	11.3	22.1	36.9	12.7	5.5	2.9	1.0
	60세 이상	446	2.5	2.7	7.8	28.9	35.2	15.0	5.2	0.9	1.8

2)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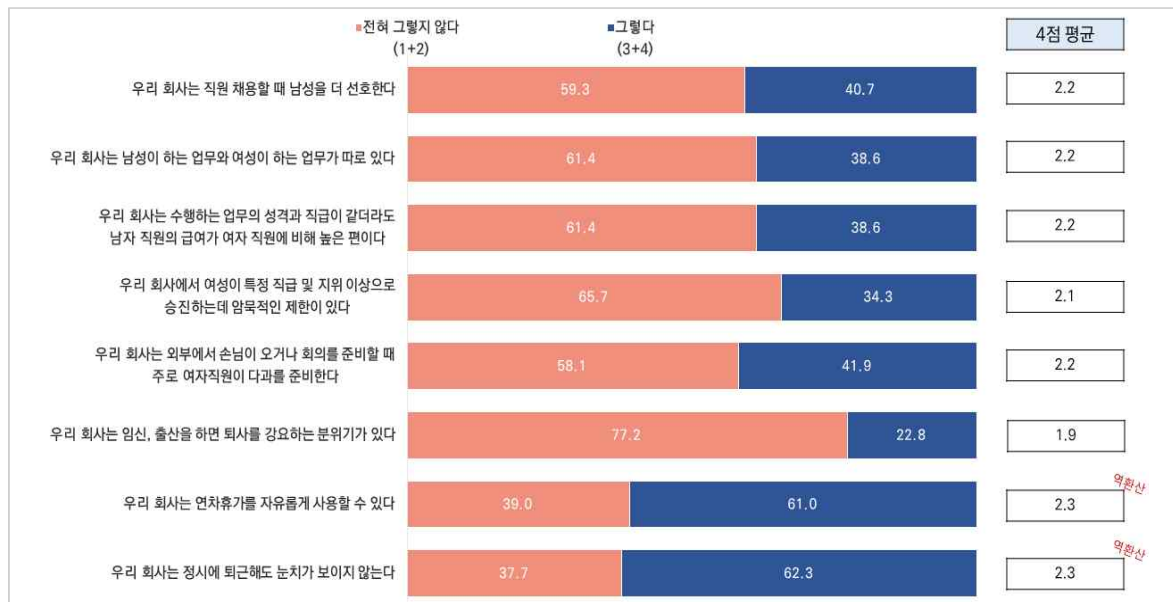
다음은 실태조사의 두 번째 영역인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양성평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을 긍정하거나, 이를 점수화하였을 때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문화가 양성평등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7번째와 8번째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를 체감한 것으로 묻는 역질문 문항이다.

[그림 IV-5]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가 모두 2.2점으로 다른 문항들보다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해당 문항의 상황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와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역질문 문항으로 환산하여 모두 2.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단위 : %, 점



이어서 <표 IV-10>은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성별, 연령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긍정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으로 나타내었다. 단 7번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와 8번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역질문 문항이므로 긍정응답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더 가깝다.

성별 분석결과,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여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직장 문화와 상황에 대해 체감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0>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단위 : %, 점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전체	59.3	40.7	2.2
	남성	58.7	41.3	2.3
	여성	62.3	37.7	2.2
	20대	60.9	39.1	2.2
	30대	58.4	41.6	2.3
	40대	53.3	46.7	2.4
	50대	58.8	41.2	2.3
	60대 이상	68.2	31.8	2.2
2)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전체	61.4	38.6	2.2
	남성	63.0	37.0	2.2
	여성	61.4	38.6	2.2
	20대	68.7	31.3	2.0
	30대	62.1	37.9	2.2
	40대	58.6	41.4	2.3
	50대	61.6	38.4	2.2
	60대 이상	57.3	42.7	2.3
3)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	61.4	38.6	2.2
	남성	66.9	33.1	2.1
	여성	55.5	44.5	2.3
	20대	62.2	37.8	2.1
	30대	64.0	36.0	2.1
	40대	58.9	41.1	2.3
	50대	59.4	40.6	2.3
	60대 이상	63.5	36.5	2.2
4)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 및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전체	65.7	34.3	2.1
	남성	71.9	28.1	2.0
	여성	59.2	40.8	2.3
	20대	62.2	37.8	2.2
	30대	66.8	33.2	2.1
	40대	65.3	34.7	2.2
	50대	66.8	33.2	2.2
	60대 이상	66.7	33.3	2.2
5)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전체	58.1	41.9	2.2
	남성	68.2	31.8	2.0
	여성	46.6	53.4	2.5
	20대	56.1	43.9	2.3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30대	62.1	37.9	2.2
	40대	57.8	42.2	2.3
	50대	58.0	42.0	2.3
	60대 이상	55.7	44.3	2.3
6)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전체	77.2	22.8	1.9
	남성	77.9	22.1	1.9
	여성	73.5	26.5	2.0
	20대	75.2	24.8	1.9
	30대	76.4	23.6	1.9
	40대	80.3	19.7	1.9
	50대	74.7	25.3	2.0
	60대 이상	79.2	20.8	1.9
7)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체	39.0	61.0	2.3
	남성	37.8	62.2	2.3
	여성	42.5	57.5	2.4
	20대	40.9	59.1	2.2
	30대	34.5	65.5	2.2
	40대	34.4	65.6	2.3
	50대	42.0	58.0	2.4
	60대 이상	45.5	54.5	2.4
8)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전체	37.7	62.3	2.3
	남성	38.8	61.2	2.3
	여성	38.2	61.8	2.2
	20대	34.3	65.7	2.1
	30대	31.1	68.9	2.1
	40대	39.2	60.8	2.3
	50대	40.3	59.7	2.3
	60대 이상	43.5	56.5	2.4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결과를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표 IV-11>에 나타내었다. 각 문항에 대해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2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점수가 높아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와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문항은 평균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제외한 타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균이 0.1점 낮아진 2번 문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IV-11>의 결과를 간단히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직장 내 성불평등 문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 문항은 직장 내 문화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직장 내 성평등 문화가 쇠퇴하고 악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이 빠르게 발전하여 부정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V-11>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비교

단위 : %, 점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1차(2018년도)	65.4	34.6	2.1
	2차(2022년도)	59.3	40.7	2.2
2)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1차(2018년도)	55.1	44.9	2.3
	2차(2022년도)	61.4	38.6	2.2
3)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1차(2018년도)	66.9	33.1	2.1
	2차(2022년도)	61.4	38.6	2.2
4)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 및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1차(2018년도)	70.5	29.5	2.0
	2차(2022년도)	65.7	34.3	2.1
5)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1차(2018년도)	68.8	31.2	2.0
	2차(2022년도)	58.1	41.9	2.2
6)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1차(2018년도)	83.2	16.8	1.8
	2차(2022년도)	77.2	22.8	1.9
7)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차(2018년도)	46.5	53.5	2.5
	2차(2022년도)	39.0	61.0	2.3
8)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1차(2018년도)	46.1	53.9	2.5
	2차(2022년도)	37.7	62.3	2.3

다음은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의 운영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로 <표 IV-12>에서는 성별,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이용 여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미혼/비혼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제도의 운영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 대상자가 다른 혼인상태의 응답자보다 제도의 이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는 직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대상자가 일·생활 균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일·생활 균형제도의 운영을 독려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2>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여부

단위 : %

항 목	구 분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출산전후휴가	전체	41.4	33.6	25.0
	남성	41.2	35.7	23.1
	여성	40.0	33.5	26.5
	미혼/비혼	37.7	28.3	33.9
	기혼	44.9	36.2	18.9
	동거, 이혼 등	27.8	41.8	30.4
2) 육아휴직	전체	47.9	30.5	21.7
	남성	47.0	29.2	23.8
	여성	48.3	31.8	19.9
	미혼/비혼	46.6	25.0	28.3
	기혼	49.2	33.6	17.2
	동거, 이혼 등	41.8	32.9	25.3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체	33.2	40.5	26.3
	남성	34.8	39.5	25.8
	여성	31.2	41.9	26.9
	미혼/비혼	31.6	34.5	33.9
	기혼	35.2	43.6	21.1
	동거, 이혼 등	22.8	46.8	30.4
4) 유연근무제	전체	37.2	44.7	18.1
	남성	38.7	44.2	17.1
	여성	35.2	45.3	19.5
	미혼/비혼	36.3	39.7	24.0
	기혼	38.7	46.8	14.5
	동거, 이혼 등	26.6	55.7	17.7

항 목	구 분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5)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전체	35.6	39.6	24.8
	남성	37.5	38.0	24.5
	여성	33.0	41.7	25.2
	미혼/비혼	30.1	35.0	34.8
	기혼	39.3	42.1	18.7
	동거, 이혼 등	32.9	43.0	24.1

주: '동거, 이혼 등'에는 동거, 이혼, 사별, 별거가 포함됨

다음의 <표 IV-13>는 앞서 살펴본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지만 30% 내외의 대상자는 충분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하여 육아휴직 등의 여러 제도는 당연히 이용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특성이나 조직문화 등에 따라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시행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분성을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3>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편의성

단위 : %

항 목	구 분	자유롭게 이용	이용 가능하나 충분히 이용 불가능	이용 못함
1) 출산전후휴가	전체	64.4	33.7	1.9
	남성	66.1	31.5	2.4
	여성	61.9	37.0	1.2
	미혼/비혼	67.8	30.3	1.9
	기혼	62.9	35.1	2.0
	동거, 이혼 등	59.1	40.9	0
2) 육아휴직	전체	64.0	33.7	2.3
	남성	59.0	38.4	2.6
	여성	63.5	34.8	1.6
	미혼/비혼	67.7	30.0	2.3
	기혼	63.4	34.3	2.3
	동거, 이혼 등	42.4	54.5	3.0
3) 육아기	전체	64.2	33.1	2.8

항 목	구 분	자유롭게 이용	이용 가능하나 충분히 이용 불가능	이용 못함
근로시간 단축	남성	70.0	27.9	2.2
	여성	58.0	38.5	3.5
	미혼/비혼	66.7	31.6	1.7
	기혼	62.6	34.2	3.2
	동거, 이혼 등	66.7	27.8	5.6
4) 유연근무제	전체	63.4	33.5	3.2
	남성	61.7	35.6	2.7
	여성	57.1	39.4	3.5
	미혼/비혼	64.0	32.5	3.5
	기혼	62.8	34.0	3.2
	동거, 이혼 등	66.7	33.3	0
5)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전체	64.0	32.7	3.3
	남성	64.2	30.2	5.6
	여성	60.8	35.4	3.8
	미혼/비혼	66.3	31.3	2.4
	기혼	63.3	32.7	4.0
	동거, 이혼 등	57.7	42.3	0

제도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그림 IV-6]에 나타내었다. 응답의 1순위는 ‘직장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24.1%)’였으며, 다음은 ‘대체 인력이 없어서(21.9%)’,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과중을 우려해서(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2018년 1차 조사에서는 59.9%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응답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제도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



다음은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표 IV-14>에 나타내었다.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5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통이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긍정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으로 나타내었다.

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문항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 응답이 적고 긍정 응답이 많았다. 이는 여성이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용 단계의 성차별 예방 강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노력’, ‘돌봄노동 가치 홍보 돌봄 일자리 개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리후생 격차 축소’의 항목에서 여성 긍정의 비율이 각각 74.3%, 75.4%, 73.2%, 70.9%로 70%를 상회하였고 남성 응답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성별 임금격차 축소 노력’,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리후생 격차 축소’의 항목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 응답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직종을 가리지 않고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14>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

단위 : %

항 목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부정	긍정	평균
채용 단계의 성차별 예방 강화	전체	2.0	5.2	26.1	42.8	23.9	7.1	66.8	3.8
	남성	3.0	6.7	30.8	44.3	15.2	9.7	59.5	3.6
	여성	0.9	3.6	21.2	41.3	32.9	4.5	74.3	4.0
	20대	3.1	6.4	28.5	36.3	25.7	9.5	62.0	3.8
	30대	3.3	6.5	28.0	36.4	25.7	9.8	62.1	3.7
	40대	2.1	4.7	26.0	45.5	21.8	6.8	67.2	3.8
	50대	0.4	3.7	23.6	48.0	24.4	4.1	72.3	3.9
	60대 이상	1.1	4.9	24.9	46.6	22.4	6.0	69.1	3.8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전체	5.2	9.7	34.2	38.0	13.0	14.8	51.0	3.4
	남성	6.0	10.0	37.7	34.8	11.4	16.0	46.2	3.4
	여성	4.3	9.3	30.5	41.3	14.6	13.6	55.9	3.5
	20대	9.5	15.2	34.2	27.1	14.0	24.7	41.1	3.2
	30대	8.4	12.6	32.2	32.5	14.3	21.0	46.7	3.3
	40대	3.8	8.7	36.2	38.5	12.9	12.5	51.4	3.5
	50대	2.5	5.3	36.9	42.2	13.1	7.8	55.3	3.6
	60대 이상	2.5	7.4	30.9	48.4	10.8	9.9	59.2	3.6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노력	전체	2.7	5.7	25.4	40.5	25.7	8.5	66.2	3.8
	남성	4.4	7.7	30.7	41.0	16.2	12.1	57.2	3.6
	여성	1.1	3.7	19.8	40.1	35.4	4.8	75.4	4.0
	20대	5.9	6.2	28.0	32.3	27.6	12.1	59.9	3.7
	30대	4.7	8.9	24.5	34.6	27.3	13.6	61.9	3.7
	40대	1.7	5.9	26.4	41.0	24.9	7.6	66.0	3.8
	50대	1.0	4.3	23.2	45.9	25.6	5.3	71.5	3.9
	60대 이상	0.9	3.6	24.9	47.5	23.1	4.5	70.6	3.9
돌봄노동 가치 홍보 돌봄일자리 개선	전체	1.5	4.7	26.0	43.0	24.8	6.2	67.8	3.8
	남성	1.8	5.2	30.4	42.8	19.8	7.0	62.6	3.7
	여성	1.1	4.3	21.4	43.3	29.9	5.4	73.2	4.0
	20대	2.4	6.2	25.9	39.2	26.4	8.6	65.6	3.8
	30대	2.1	7.2	25.2	36.4	29.0	8.3	65.4	3.8
	40대	1.3	3.4	25.2	46.7	23.5	4.7	70.2	3.9

항 목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부정	긍정	평균
	50대	1.0	3.7	24.4	48.6	22.3	4.7	70.9	3.9
	60대 이상	0.7	3.6	29.4	43.0	23.3	4.3	66.4	3.8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리후생 격차 축소	전체	2.5	5.8	24.9	41.4	25.5	8.2	66.8	3.8
	남성	3.3	6.6	27.2	40.3	22.5	9.9	62.9	3.7
	여성	1.6	4.9	22.6	42.4	28.5	6.5	70.9	3.9
	20대	4.0	8.8	32.5	35.2	19.5	12.8	54.6	3.6
	30대	3.7	8.2	25.9	39.0	23.1	11.9	62.1	3.7
	40대	1.7	3.2	25.2	44.0	26.0	4.9	70.0	3.9
	50대	1.0	3.9	20.9	45.1	29.1	4.9	74.2	4.0
	60대 이상	2.2	5.4	20.9	42.6	28.9	7.6	71.5	3.9
여성의 고위직 및 관리직 진출 지원	전체	4.3	7.7	32.4	36.6	19.0	12.0	55.6	3.6
	남성	6.7	10.7	38.8	32.9	10.8	17.4	43.8	3.3
	여성	1.7	4.6	25.8	40.4	27.5	6.3	67.9	3.9
	20대	7.1	8.8	34.2	26.6	23.3	15.9	49.9	3.5
	30대	5.8	11.0	33.9	27.3	22.0	16.8	49.3	3.5
	40대	4.7	7.2	30.0	40.2	18.0	11.9	58.1	3.6
	50대	1.4	6.8	31.8	42.8	17.2	8.2	60.0	3.7
	60대 이상	2.7	5.2	32.5	44.4	15.2	7.9	59.6	3.6
남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전체	2.3	5.5	29.2	44.2	18.8	7.8	63.0	3.7
	남성	1.6	5.6	30.4	44.1	18.3	7.2	62.4	3.7
	여성	3.0	5.5	27.9	44.3	19.4	8.5	63.6	3.7
	20대	3.3	9.3	32.3	36.8	18.3	12.6	55.1	3.6
	30대	3.3	7.0	30.4	36.7	22.7	10.3	59.3	3.7
	40대	0.8	4.9	26.2	45.0	23.0	5.7	68.1	3.8
	50대	1.8	4.7	26.6	51.4	15.4	6.5	66.8	3.7
	60대 이상	2.2	2.2	30.9	49.6	15.0	4.4	64.6	3.7

3) 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

다음은 설문조사의 세 번째 영역인 ‘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표 IV-15>에서는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인천광역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응답의 1순위는 ‘믿고 맡길 만한 공보육 확대(31.4%)’였으며,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20.1%)’,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 결과 역시 ‘믿고 맡길 만한 공보육 확대’

가 53.5%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46.9%,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가 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 역시 ‘믿고 맡길만한 공보육 확대’, ‘보육서비스 다양성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믿을만한 공보육의 확대와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자녀돌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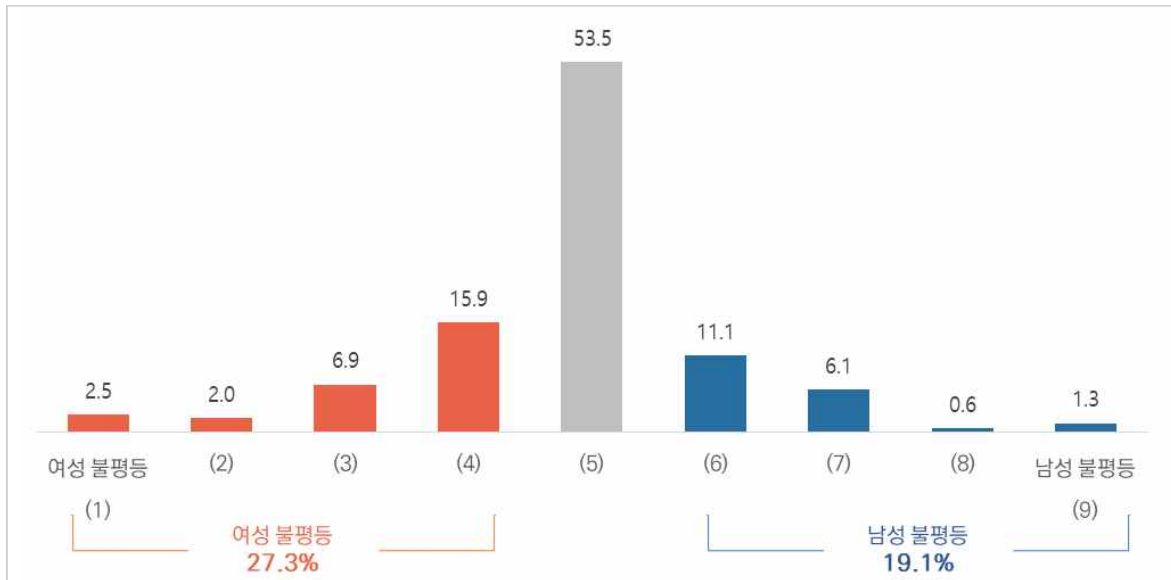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믿을만한 공보육 확대	보육 서비스 다양성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해소	과건직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확대	남성 육아참여 인식개선	부모교육 확대	기타
전체	1,185 (52.5)	1,057 (46.9)	343 (15.2)	766 (34.0)	451 (20.0)	435 (19.3)	244 (10.8)	8 (0.4)
남성	621 (54.2)	548 (47.9)	204 (17.8)	357 (31.2)	196 (17.1)	228 (19.9)	131 (11.4)	5 (0.4)
여성	564 (50.8)	509 (45.9)	139 (12.5)	409 (36.8)	255 (23.0)	207 (18.6)	113 (10.2)	3 (0.3)
20대	180 (42.8)	176 (41.8)	50 (11.9)	181 (43.0)	112 (26.6)	85 (20.2)	54 (12.8)	4 (1.0)
30대	202 (47.2)	193 (45.1)	87 (20.3)	163 (38.1)	91 (21.3)	73 (17.1)	47 (11.0)	0
40대	274 (57.9)	228 (48.2)	59 (12.5)	148 (31.3)	87 (18.4)	100 (21.1)	49 (10.4)	1 (0.2)
50대	278 (57.0)	240 (49.2)	67 (13.7)	143 (29.3)	93 (19.1)	99 (20.3)	55 (11.3)	1 (0.2)
60대 이상	251 (56.4)	220 (49.4)	80 (18.0)	131 (29.4)	68 (15.3)	78 (17.5)	39 (8.8)	2 (0.4)

다음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270명에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등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로, 이를 [그림 IV-7]에 나타내었다. 1~9점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5점)’이라는 응답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3,4점으로 응답한 ‘여성 불평등’의 비율은 27.3%, 6,7,8,9점으로 응답한 ‘남성 불평등’의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그림 IV-7]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N=1,270, 단위 : %



이를 성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남성(57.9%)이 여성(47.9%)보다 ‘남녀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한편 남성의 경우 아내 불평등과 남편 불평등의 응답 비율이 동일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아내 불평등(36.4%)이 남편 불평등(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불평등은 1,2,3,4점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이고, 남편 불평등은 6,7,8,9점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결과이다.

연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대의 경우 ‘아내 불평등’이 5.9%, ‘남편 불평등’이 35.3%로 남편 불평등 결과가 큰 폭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0대의 경우, ‘아내 불평등’이 24.5%, ‘남편 불평등’이 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응답자부터는 ‘아내 불평등’이 ‘남편 불평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평등함을 체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의 불평등 체감 정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불평등 체감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6>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단위 : %

구 분		아내 불평등		↔		평등		↔		남편 불평등		아내 불평등	남편 불평등	평균
		(1)	(2)	(3)	(4)	(5)	(6)	(7)	(8)	(9)				
전 체		2.5	2.0	6.9	15.9	53.5	11.1	6.1	0.6	1.3		27.3	19.1	4.8
성별	남성	0.1	0.6	4.6	15.8	57.9	11.3	7.4	0.6	1.8		21.1	21.1	5.2
	여성	4.9	3.6	10.7	17.2	47.9	10.1	4.4	0.6	0.6		36.4	15.7	4.5
연령	20대	0.0	0.0	0.0	5.9	58.8	23.5	8.8	0.0	2.9		5.9	35.3	5.5
	30대	0.5	2.1	10.1	11.7	50.5	10.1	11.7	1.1	2.1		24.5	25.0	5.1
	40대	2.4	3.3	9.0	19.2	49.5	7.8	5.7	0.6	2.4		33.9	16.5	4.7
	50대	3.8	1.1	5.4	17.4	51.5	12.3	7.4	0.5	0.5		27.8	20.7	4.8
	60대 이상	2.6	2.0	5.2	14.4	60.6	12.4	2.0	0.6	0.3		24.1	15.2	4.8

4) 안전 및 건강

다음은 네 번째 ‘안전 및 건강’의 영역으로 <표 IV-17>은 향후 5년간 젠더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이다. 1순위 응답으로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강화’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에 취약한 환경 개선’이 23.7%, ‘폭력피해자 지원’이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 역시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강화’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력에 취약한 환경 개선’이 45.5%, ‘폭력피해자 지원’이 3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강화’에서 여성(49.1%)의 응답 비율이 남성(4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강화’의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폭력예방 교육 확대’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젠더 폭력 예방 및 해결 정책

단위 : 명(%)

구분	폭력예방 교육 확대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확대	폭력피해자 지원	차별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가해자 처벌 교육 강화	폭력에 취약한 환경 개선	기타
전체	399 (17.7)	502 (22.3)	844 (37.4)	658 (29.2)	1,059 (47.4)	1,026 (45.5)	14 (0.6)
남성	224 (19.6)	264 (23.1)	416 (36.3)	336 (29.3)	523 (45.7)	515 (45.0)	12 (1.0)
여성	175 (15.8)	238 (21.4)	428 (38.5)	322 (29.0)	546 (49.1)	511 (46.0)	2 (0.2)
20대	57 (13.5)	84 (20.0)	165 (39.2)	102 (24.2)	238 (56.5)	189 (44.9)	7 (1.7)
30대	73 (17.1)	103 (24.1)	161 (37.6)	117 (27.3)	217 (50.7)	181 (42.3)	4 (0.9)
40대	76 (16.1)	104 (22.0)	170 (35.9)	152 (32.1)	208 (44.0)	234 (49.5)	2 (0.4)
50대	108 (22.1)	117 (24.0)	176 (36.1)	135 (27.7)	225 (46.1)	214 (43.9)	1 (0.2)
60대 이상	85 (19.1)	94 (21.1)	172 (38.6)	152 (34.1)	181 (40.6)	208 (46.6)	0

다음은 건강 관련 정책 필요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의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월경 건강 보장, 피임법 상담 서비스,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서비스,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6문항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IV-18>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6개 정책 모두 80% 또는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역시 모든 항목에 대해 3점 이상으로 높은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소년 평등 성 인식 및 권리 강화’와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의 정책 필요도가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징적인 부분은 ‘월경 건강 보장’과 ‘임신 중단(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각각 18.3%, 17.2%로 나타나 다른 문항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낙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18>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단위 : %

항 목	구분	부정	긍정	4점 평균
청소년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전체	9.2	90.8	3.3
	남성	11.3	88.7	3.2
	여성	7.1	92.9	3.4
	20대	10.7	89.3	3.3
	30대	12.4	87.6	3.2
	40대	6.8	93.2	3.3
	50대	7.2	92.8	3.3
	60대 이상	9.6	90.4	3.2
	미혼/비혼	9.8	90.2	3.3
	기혼	8.4	91.6	3.3
	동거, 이혼 등	12.9	87.1	3.2
월경 건강 보장	전체	18.3	81.7	3.0
	남성	19.7	80.3	2.9
	여성	16.9	83.1	3.1
	20대	18.3	81.7	3.1
	30대	20.6	79.4	3.0
	40대	15.6	84.4	3.0
	50대	18.2	81.8	3.0
	60대 이상	19.1	80.9	2.9
	미혼/비혼	19.5	80.5	3.0
	기혼	17.7	82.3	3.0
	동거, 이혼 등	17.1	82.9	3.0
피임법 상담 서비스	전체	9.1	90.9	3.2
	남성	10.5	89.5	3.2
	여성	7.5	92.5	3.3
	20대	11.9	88.1	3.3
	30대	12.1	87.9	3.2
	40대	6.6	93.4	3.3
	50대	7.4	92.6	3.2
	60대 이상	8.1	91.9	3.2
	미혼/비혼	11.0	89.0	3.3
	기혼	7.7	92.3	3.2
	동거, 이혼 등	10.0	90.0	3.3

항 목	구분	부정	긍정	4점 평균
임신 중단(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체	17.2	82.8	3.0
	남성	20.5	79.5	2.9
	여성	13.9	86.1	3.1
	20대	23.3	76.7	3.0
	30대	18.0	82.0	3.0
	40대	11.0	89.0	3.1
	50대	13.1	86.9	3.1
	60대 이상	21.7	78.3	2.9
	미혼/비혼	19.5	80.5	3.1
	기혼	15.2	84.8	3.0
	동거, 이혼 등	21.4	78.6	2.9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전체	9.2	90.8	3.3
	남성	9.7	90.3	3.3
	여성	8.6	91.4	3.3
	20대	8.6	91.4	3.3
	30대	11.7	88.3	3.3
	40대	7.8	92.2	3.3
	50대	9.0	91.0	3.2
	60대 이상	9.2	90.8	3.3
	미혼/비혼	9.4	90.6	3.3
	기혼	8.8	91.2	3.3
	동거, 이혼 등	11.4	88.6	3.1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	전체	9.1	90.9	3.2
	남성	9.9	90.1	3.1
	여성	8.4	91.6	3.3
	20대	8.8	91.2	3.3
	30대	13.3	86.7	3.2
	40대	8.0	92.0	3.2
	50대	7.6	92.4	3.2
	60대 이상	8.3	91.7	3.2
	미혼/비혼	9.8	90.2	3.3
	기혼	9.1	90.9	3.2
	동거, 이혼 등	5.7	94.3	3.2

다음 <표 IV-19>는 남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연애, 결혼, 취업, 대인관계의 상황으로 나누어 응답한 결과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먼저 연애의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의 응답이 23%이고, ‘중요하다’는 긍정의 응답이 77%로 더 높게 나타났다. 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1차 조사보다 부정의 응답은 줄어 들고 긍정의 응답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도 2차는 2.9점으로 1차 실태조사의 2.7점보다 0.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외모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시 남성 외모의 중요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31.6%, 긍정 응답은 68.4%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부정의 응답은 줄어 들고 긍정의 응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역시 1차 실태조사 결과 2.6점에서 2차 실태조사는 2.8점으로 0.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남성 외모의 중요도에 대해 부정 응답은 25.7%, 긍정 응답은 74.3%로 나타났으며,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부정의 응답은 감소하고 긍정의 응답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평균점수는 1차와 2차 실태조사 모두 2.9점으로 동일하였다.

대인관계에서 남성 외모의 중요도는 부정 응답이 27.8%, 긍정 응답이 71.9%로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부정 응답은 줄어 들고 긍정 응답은 증가하였다. 평균 점수 역시 1차 실태조사 결과 2.6점에서 2차 실태조사는 2.8점으로 0.2점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남성 외모의 중요도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 분석에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남성의 외모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외모 중요도 - 남성

단위 : %, 점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연애	전체	1차(2018년도)	3.1	33.6	52.5	10.9	36.7	63.4	2.7
		2차(2022년도)	2.4	20.6	61.7	15.3	23.0	77.0	2.9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성별	남성	2.5	18.8	61.7	17.0	21.3	78.7	2.9
		여성	2.3	22.5	61.7	13.5	24.8	75.2	2.9
	연령	20대	5.5	18.5	55.1	20.9	24.0	76.0	2.9
		30대	2.1	20.1	57.2	20.6	22.2	77.8	3.0
		40대	1.5	19.5	64.3	14.8	20.9	79.1	2.9
		50대	2.5	21.1	64.1	12.3	23.6	76.4	2.9
		60대 이상	0.9	23.8	66.6	8.7	24.7	75.3	2.8
결혼	전체	1차(2018년도)	4.2	43.8	42.1	9.9	48.0	52.0	2.6
		2차(2022년도)	2.9	28.7	54.9	13.5	31.6	68.4	2.8
	성별	남성	2.8	26.4	54.7	16.2	29.2	70.8	2.8
		여성	3.0	31.1	55.2	10.7	34.1	65.9	2.7
	연령	20대	5.2	26.8	50.8	17.1	32.1	67.9	2.8
		30대	3.7	26.2	50.5	19.6	29.9	70.1	2.9
		40대	2.3	27.7	57.1	12.9	30.0	70.0	2.8
		50대	2.9	30.9	55.7	10.5	33.8	66.2	2.7
		60대 이상	0.4	31.6	59.9	8.1	32.1	67.9	2.8
취업	전체	1차(2018년도)	3.5	27.7	49.3	19.6	31.2	68.9	2.9
		2차(2022년도)	2.3	23.4	54.6	19.8	25.7	74.3	2.9
	성별	남성	1.8	21.5	56.2	20.5	23.3	76.7	3.0
		여성	2.7	25.4	52.9	19.0	28.1	71.9	2.9
	연령	20대	4.3	24.5	48.7	22.6	28.7	71.3	2.9
		30대	2.6	22.7	51.9	22.9	25.2	74.8	3.0
		40대	1.3	24.3	57.5	16.9	25.6	74.4	2.9
		50대	2.3	20.7	58.4	18.6	23.0	77.0	2.9
		60대 이상	1.1	25.1	55.4	18.4	26.2	73.8	2.9
대인 관계	전체	1차(2018년도)	6.6	41.5	40.5	11.4	48.1	51.9	2.6
		2차(2022년도)	2.8	25.0	56.2	15.7	27.8	71.9	2.8
	성별	남성	2.7	23.7	57.6	16.0	26.4	73.6	2.9
		여성	3.0	26.4	54.7	15.4	29.3	70.1	2.8
	연령	20대	5.5	24.7	54.2	15.7	30.2	69.8	2.8
		30대	3.5	23.6	53.5	19.4	27.1	72.9	2.9
		40대	1.5	25.8	58.4	14.4	27.3	72.7	2.9
		50대	2.9	25.2	58.2	13.7	28.1	71.9	2.8
		60대 이상	1.1	25.6	56.3	15.7	26.7	72.0	2.9

다음의 <표 IV-20>은 여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앞선 남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전체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애시에 여성 외모의 중요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7.2%, 긍정 응답은 82.4%로 부정 응답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차 실태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23.6%, 긍정 응답이 76.5%로 부정 응답은 줄어 들고 긍정 응답은 증가하였다. 평균 점수 역시 1차 실태조사에서는 2.9점, 2차 실태조사에서는 3.0점으로 0.1점 증가하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경우, 여성 외모 중요도에 대한 부정 응답이 22.1%, 긍정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37.5%, 긍정 응답이 63%로 2차 실태조사에서 더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평균 점수 역시 1차 실태조사에서 2.8점, 2차 실태조사에서 2.9점으로 더 높아졌다.

취업의 상황에서는 여성 외모에 대한 부정 응답이 18.8%, 긍정 응답이 80.9%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25.1%, 긍정 응답이 75%로 나타나 이 역시 2차 실태조사에서 여성 외모 중요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대인관계에서는 부정 응답이 23.1%, 긍정 응답이 76.3%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42.8%, 긍정 응답이 57.3%로 부정과 긍정 응답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차 실태조사 결과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평균 역시 1차 실태조사 2.7점에서 2차 실태조사 2.9점으로 0.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외모 만족도 역시 남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모든 문항에서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여성의 외모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진 결과를 보인다. 여성의 외모 중요도의 경우, 성별 분석에서 연애와 취업 문항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외모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20> 외모 중요도 - 여성

단위 : %, 점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연애	전체	1차(2018년도)	2.1	21.5	56.5	20.0	23.6	76.5	2.9
		2차(2022년도)	1.9	15.4	60.7	22.1	17.2	82.4	3.0
	성별	남성	1.8	16.1	60.5	21.6	17.9	82.1	3.0
		여성	1.9	14.7	60.8	22.6	16.6	82.8	3.0
	연령	20대	3.8	16.6	55.8	23.8	20.4	79.6	3.0
		30대	1.6	16.1	58.6	23.6	17.8	82.2	3.0
		40대	1.5	14.6	62.8	21.1	16.1	83.9	3.0
		50대	2.3	15.6	62.1	20.1	17.8	82.2	3.0
		60대 이상	0.2	14.1	63.5	22.2	14.3	84.1	3.1
결혼	전체	1차(2018년도)	3.0	34.0	47.0	16.1	37.0	63.0	2.8
		2차(2022년도)	3.0	19.1	58.0	19.9	22.1	77.7	2.9
	성별	남성	2.8	18.6	58.1	20.5	21.4	78.6	3.0
		여성	3.2	19.6	57.9	19.4	22.8	76.9	2.9
	연령	20대	4.5	19.7	53.2	22.6	24.2	75.8	2.9
		30대	3.7	18.0	56.3	22.0	21.7	78.3	3.0
		40대	2.7	17.3	60.7	19.2	20.1	79.9	3.0
		50대	2.3	23.0	58.8	16.0	25.2	74.8	2.9
		60대 이상	1.8	17.3	60.3	20.6	19.1	80.0	3.0
취업	전체	1차(2018년도)	2.7	22.4	47.5	27.5	25.1	75.0	3.0
		2차(2022년도)	2.0	16.8	60.9	20.3	18.8	80.9	3.0
	성별	남성	1.9	19.2	61.0	17.9	21.1	78.9	2.9
		여성	2.1	14.4	60.8	22.7	16.5	82.9	3.0
	연령	20대	3.1	19.5	54.2	23.3	22.6	77.4	3.0
		30대	2.8	15.7	59.6	22.0	18.5	81.5	3.0
		40대	1.7	15.6	63.2	19.5	17.3	82.7	3.0
		50대	2.3	18.9	61.7	17.2	21.1	78.9	2.9
		60대 이상	0.2	14.6	65.2	20.0	14.8	83.6	3.1
대인 관계	전체	1차(2018년도)	5.6	37.2	43.4	13.9	42.8	57.3	2.7
		2차(2022년도)	2.6	20.5	60.2	16.7	23.1	76.3	2.9
	성별	남성	2.6	20.1	61.1	16.2	22.7	77.3	2.9
		여성	2.5	21.0	59.2	17.3	23.5	75.2	2.9
	연령	20대	4.8	22.1	56.3	16.9	26.8	73.2	2.9
		30대	3.3	21.0	58.9	16.8	24.3	75.7	2.9
		40대	1.7	19.2	61.1	18.0	20.9	79.1	3.0
		50대	2.3	21.9	61.1	14.8	24.2	75.8	2.9
		60대 이상	1.1	18.4	63.2	17.3	19.5	77.4	3.0

5) 양성평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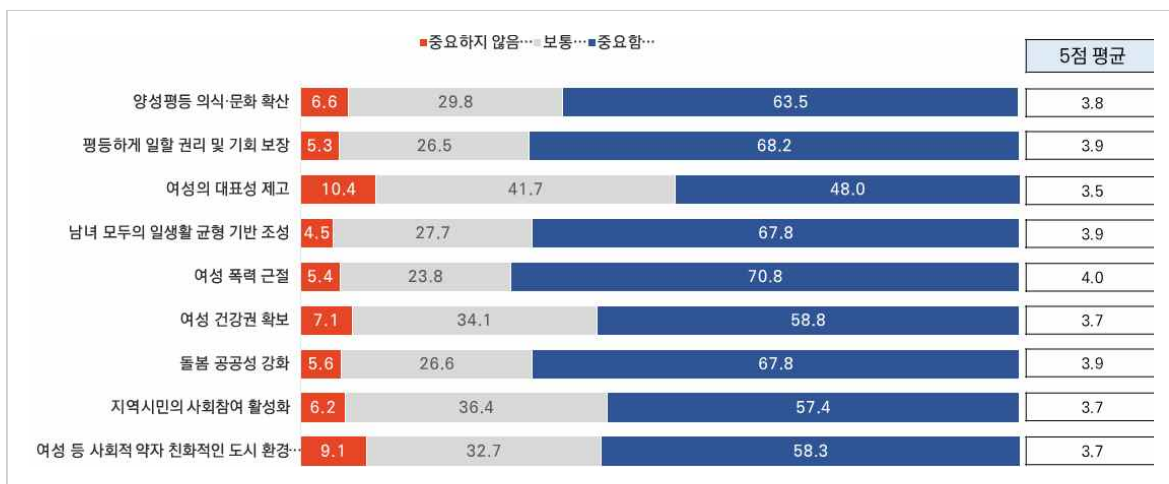
조사의 다섯 번째 영역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것으로 [그림 IV-8]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9개 문항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1점부터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됨을 의미한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문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70.8%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문항은 48%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평균 점수는 ‘여성 폭력 근절’ 문항이 4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문항이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8]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단위 : %, 점



앞선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성별, 연령별 분석을 <표 IV-21>에서 구체화하였다. 성별 분석에서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양성평등의식·문화 확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돌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항목에서 20대의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20대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적으로 30대 또는 40대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령을 고려한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1>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단위 : %

구 분	성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5점 평균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남성	2.9	5.7	35.8	38.8	16.9	8.6	74.6	3.6
	여성	1.1	3.5	23.7	44.6	27.2	4.6	71.8	3.9
	20대	3.1	4.8	26.8	39.7	25.7	7.8	65.3	3.8
	30대	3.3	5.1	30.6	35.5	25.5	8.4	61.0	3.7
	40대	1.3	5.1	31.9	40.2	21.6	6.3	61.7	3.8
	50대	1.2	3.1	30.5	46.9	18.2	4.3	65.2	3.8
	60대 이상	1.3	5.2	28.9	45.1	19.5	6.5	64.6	3.8
평등한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남성	2.5	3.7	32.1	41.5	20.3	6.2	61.8	3.7
	여성	1.0	3.3	20.8	41.5	33.4	4.3	74.9	4.0
	20대	2.6	3.6	25.4	38.0	30.4	6.2	68.4	3.9
	30대	3.3	5.6	27.6	36.7	26.9	8.9	63.6	3.8
	40대	1.1	1.9	31.5	39.7	25.8	3.0	65.5	3.9
	50대	1.2	3.5	23.8	45.7	25.8	4.7	71.5	3.9
	60대 이상	0.9	3.1	24.2	46.6	25.1	4.0	71.7	3.9
여성의 대표성 제고	남성	6.6	7.7	47.4	29.2	9.1	14.3	38.3	3.3
	여성	1.8	4.4	35.7	40.4	17.6	6.2	58.0	3.7
	20대	7.4	5.9	39.9	29.5	17.3	13.3	46.8	3.4
	30대	6.3	7.5	40.2	30.6	15.4	13.8	46.0	3.4
	40대	3.4	5.9	43.1	34.9	12.7	9.3	47.6	3.5
	50대	1.6	5.7	43.0	37.3	12.3	7.4	49.6	3.5
	60대 이상	3.1	5.4	41.7	40.6	9.2	8.5	49.8	3.5

구 분	성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5점 평균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남성	1.6	3.4	32.8	43.1	19.1	5.0	62.2	3.7
	여성	0.9	3.2	22.3	45.7	27.8	4.1	73.5	4.0
	20대	1.4	3.3	26.4	40.9	28.0	4.8	68.9	3.9
	30대	2.6	4.0	29.0	37.4	27.1	6.5	64.5	3.8
	40대	0.4	2.7	29.8	43.3	23.7	3.2	67.0	3.9
	50대	1.0	3.1	26.2	50.4	19.3	4.1	69.7	3.8
	60대 이상	0.9	3.6	26.9	48.9	19.7	4.5	68.6	3.8
여성 폭력 근절	남성	3.1	4.1	28.9	36.5	27.4	7.2	63.9	3.8
	여성	0.6	3.0	18.5	37.2	40.7	3.6	77.9	4.1
	20대	3.1	3.8	24.7	37.5	30.9	6.9	68.4	3.9
	30대	2.8	4.9	25.9	34.6	31.8	7.7	66.4	3.9
	40대	1.5	3.0	26.2	39.1	30.2	4.4	69.3	3.9
	50대	1.2	2.9	19.5	38.7	37.7	4.1	76.4	4.1
	60대 이상	0.9	3.4	23.1	33.9	38.8	4.3	72.6	4.1
여성 건강권 확보	남성	3.6	6.1	40.3	37.6	12.5	9.7	50.1	3.5
	여성	1.3	3.2	27.7	43.1	24.8	4.5	67.9	3.9
	20대	3.6	7.8	33.5	32.3	22.8	11.4	55.1	3.6
	30대	4.9	6.8	33.6	34.1	20.6	11.7	54.7	3.6
	40대	1.9	3.2	37.0	41.6	16.3	5.1	57.9	3.7
	50대	1.0	2.9	32.6	45.3	18.2	3.9	63.5	3.8
	60대 이상	1.1	3.1	33.6	46.9	15.2	4.3	62.1	3.7
돌봄 공공성 강화	남성	2.4	4.3	30.0	40.9	22.4	6.7	63.3	3.8
	여성	1.1	3.4	23.0	45.5	26.9	4.5	72.4	3.9
	20대	2.4	2.9	30.9	38.7	25.2	5.2	63.9	3.8
	30대	3.0	5.8	24.1	41.4	25.7	8.9	67.1	3.8
	40대	0.6	2.7	29.6	41.0	26.0	3.4	67.0	3.9
	50대	1.0	3.5	24.8	47.1	23.6	4.5	70.7	3.9
	60대 이상	1.8	4.5	23.8	47.1	22.9	6.3	70.0	3.8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남성	2.1	4.9	40.1	39.8	13.1	7.0	52.9	3.6
	여성	1.3	4.1	32.6	41.9	20.1	5.4	62.0	3.8
	20대	2.4	4.8	33.7	36.8	22.3	7.1	59.1	3.7

구 분	성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5점 평균
	30대	2.1	5.1	36.2	39.3	17.3	7.2	56.5	3.6
	40대	0.8	4.2	40.6	37.4	16.9	5.1	54.3	3.7
	50대	1.0	4.1	35.0	43.9	16.0	5.1	59.8	3.7
	60대 이상	2.2	4.5	36.1	46.6	10.5	6.7	57.2	3.6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남성	5.6	7.4	39.0	34.2	13.7	13.0	47.9	3.4
	여성	1.3	3.7	26.1	42.7	26.3	5.0	69.0	3.9
	20대	6.2	7.4	31.6	31.6	23.3	13.5	54.9	3.6
	30대	5.6	7.7	29.7	37.6	19.4	13.3	57.0	3.6
	40대	3.2	4.4	36.6	36.4	19.5	7.6	55.8	3.6
	50대	1.2	4.1	29.3	45.3	20.1	5.3	65.4	3.8
	60대 이상	1.6	4.7	36.1	40.1	17.5	6.3	57.6	3.7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에 이어 [그림 IV-9]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9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9개 전체 문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보통’으로,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는 약 20~25%에 불과하였다. 그 중 ‘지역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항목은 2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항목은 19.4%로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전체 항목에 대해서 3점대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지역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항목만 약간 높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단위 : %, 점



<표 IV-22>에서는 양성평등정책 만족도에 대한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문항에서 ‘보통’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 중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보통 정도로 체감하는 응답자와 함께 사회의 바람직성 편향¹⁰⁾에 의한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통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며 부정 및 긍정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정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과 ‘만족하지 않음’을 합하였고, 긍정은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을 합한 것이다.

먼저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 건강권 확보’, ‘돌봄 공공성 강화’,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남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40대 또는 50대의 응답이 가장 낮은 경우가 많았다.

<표 IV-22>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성별, 연령별 비교

단위 : %

구분	성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정	긍정	5점 평균
양성평등	남성	4.1	11.9	59.7	19.1	5.2	16.0	24.3	3.1

10)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타인에게 좋게 보이거나 좋은 응답을 고르게 되는 경향을 의미함.

구 분	성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정	긍정	5점 평균
의식·문화 확산	여성	5.3	18.6	53.8	17.7	4.5	23.9	22.2	3.0
	20대	6.9	12.8	51.8	22.1	6.4	19.7	28.5	3.1
	30대	7.2	18.0	51.2	16.8	6.8	25.2	23.6	3.0
	40대	4.0	15.4	58.6	17.1	4.9	19.5	22.0	3.0
	50대	3.9	17.8	59.4	15.8	3.1	21.7	18.9	3.0
	60대 이상	1.8	11.7	62.1	20.9	3.6	13.5	24.4	3.1
평등한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남성	3.9	14.1	55.7	20.2	6.0	18.0	26.2	3.1
	여성	5.1	21.2	53.0	15.8	4.8	26.3	20.6	2.9
	20대	6.2	15.2	50.8	21.6	6.2	21.4	27.8	3.1
	30대	5.1	19.6	52.1	14.3	8.9	24.8	23.1	3.0
	40대	3.6	17.3	55.8	17.3	5.9	20.9	23.3	3.0
	50대	4.5	19.7	54.7	18.6	2.5	24.2	21.1	2.9
여성의 대표성 제고	남성	4.3	11.6	64.1	14.9	5.1	15.9	20.0	3.0
	여성	4.6	18.5	58.1	14.2	4.6	23.1	18.8	3.0
	20대	6.9	13.1	59.9	13.5	6.7	20.0	20.2	3.0
	30대	5.6	17.1	54.7	16.8	5.8	22.7	22.7	3.0
	40대	2.7	14.2	63.8	14.2	5.1	16.9	19.2	3.0
	50대	4.3	15.6	64.3	12.5	3.3	19.9	15.8	2.9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남성	4.5	12.1	59.6	18.2	5.6	16.6	23.8	3.1
	여성	5.4	18.4	55.2	15.1	5.9	23.8	21.0	3.0
	20대	7.6	13.8	53.9	18.8	5.9	21.4	24.7	3.0
	30대	7.0	19.4	50.5	15.9	7.2	26.4	23.1	3.0

구 분	성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정	긍정	5점 평균
	40대	4.7	14.2	60.5	14.6	6.1	18.8	20.7	3.0
	50대	4.1	16.8	59.8	16.2	3.1	20.9	19.3	3.0
	60대 이상	1.6	11.7	61.7	18.2	6.8	13.3	25.0	3.2
여성 폭력 근절	남성	4.5	13.9	57.1	18.5	5.9	18.4	24.4	3.1
	여성	6.5	21.2	50.4	15.3	6.7	27.7	22.0	2.9
	20대	6.9	14.7	53.2	17.8	7.4	21.6	25.2	3.0
	30대	6.3	17.5	50.5	18.7	7.0	23.8	25.7	3.0
	40대	3.8	18.0	57.9	14.0	6.3	21.8	20.3	3.0
	50대	5.3	19.5	53.9	18.0	3.3	24.8	21.3	2.9
	60대 이상	5.3	17.2	53.1	16.5	7.9	22.5	24.4	3.0
여성 건강권 확보	남성	3.1	12.1	62.0	18.7	4.1	15.2	22.8	3.1
	여성	4.7	18.3	54.2	17.2	5.6	23.0	22.8	3.0
	20대	5.5	14.0	55.8	18.3	6.4	19.5	24.7	3.1
	30대	5.6	17.8	53.3	16.6	6.8	23.4	23.4	3.0
	40대	3.6	15.0	60.3	16.9	4.2	18.6	21.1	3.0
	50대	2.9	15.8	62.7	16.6	2.0	18.6	18.6	3.0
	60대 이상	2.1	13.2	58.0	21.6	5.1	15.3	26.7	3.1
돌봄 공공성 강화	남성	4.3	14.1	59.3	17.3	5.0	18.4	22.3	3.0
	여성	4.6	17.3	54.4	17.9	5.8	21.9	23.7	3.0
	20대	4.5	15.4	58.9	14.3	6.9	20.0	21.1	3.0
	30대	6.3	15.0	54.9	17.3	6.5	21.3	23.8	3.0
	40대	3.6	17.1	57.1	16.7	5.5	20.7	22.2	3.0
	50대	4.9	15.4	60.5	16.6	2.7	20.3	19.3	3.0
	60대 이상	3.0	15.4	52.6	23.2	5.7	18.4	29.0	3.1

구 분	성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정	긍정	5점 평균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남성	3.8	14.2	57.3	19.2	5.5	18.0	24.7	3.1
	여성	3.3	16.2	54.7	20.8	5.0	19.5	25.8	3.1
	20대	4.8	13.5	53.0	22.1	6.7	18.3	28.7	3.1
	30대	4.4	15.9	55.1	17.8	6.8	20.3	24.5	3.1
	40대	2.7	12.5	62.6	17.1	5.1	15.2	22.2	3.1
	50대	3.5	16.6	56.8	20.1	3.1	20.1	23.2	3.0
	60대 이상	2.3	17.5	51.9	23.1	5.1	19.9	28.3	3.1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남성	4.5	14.7	56.9	19.1	4.8	19.2	23.9	3.1
	여성	4.8	21.1	50.5	18.2	5.4	25.9	23.6	3.0
	20대	6.7	15.7	53.4	17.8	6.4	22.3	24.2	3.0
	30대	6.1	18.5	51.4	18.0	6.1	24.5	24.1	3.0
	40대	3.4	17.8	59.0	15.2	4.7	21.1	19.9	3.0
	50대	3.7	20.1	53.7	19.7	2.9	23.8	22.5	3.0
	60대 이상	3.7	16.8	51.0	22.8	5.7	20.5	28.5	3.1

다음의 <표 IV-23>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총 6개 정책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까지로 응답이 가능하며 1점부터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23>에서는 가운데를 제외하고 1,2,3점을 선택한 경우를 합하여 ‘중요하지 않음’ 혹은 부정, 5,6,7점을 선택한 경우를 합하여 ‘중요함’ 혹은 긍정으로 나타내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중요함’을 선택한 비율이 ‘중요하지 않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제도 활용 활성화’ 항목에서 ‘중요함’ 비율이 가장 높았고(67.6%), ‘가족친화기업 확산’ 항목의 ‘중요함’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55.1%).

성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정

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 60대 이상 응답자는 부정 응답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표 IV-23> 돌봄 및 일·생활 균형정책 중요도

단위 : %, 점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제도활용 활성화	전 체		6.3	67.6	5.2
	성별	남성	5.2	64.5	5.1
		여성	7.5	70.8	5.3
	연령	20대	4.0	72.2	5.4
		30대	6.8	63.6	5.2
		40대	4.0	68.7	5.3
		50대	4.1	68.6	5.2
		60대 이상	12.8	64.8	5.0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전 체		6.3	64.8	5.1
	성별	남성	5.3	59.8	5.0
		여성	7.3	69.9	5.3
	연령	20대	4.8	67.2	5.2
		30대	6.1	65.7	5.2
		40대	3.4	65.3	5.3
		50대	6.4	63.7	5.1
		60대 이상	11.0	62.3	4.9
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다각화	전 체		6.6	66.5	5.2
	성별	남성	4.5	63.9	5.1
		여성	8.7	69.2	5.2
	연령	20대	4.8	64.6	5.2
		30대	6.3	65.2	5.2
		40대	4.7	68.3	5.3
		50대	4.5	70.1	5.2
		60대 이상	12.8	63.9	4.9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	전 체		6.7	64.0	5.1
	성별	남성	5.2	61.9	5.0
		여성	8.3	66.1	5.1
	연령	20대	4.8	67.9	5.2
		30대	5.4	63.6	5.2
		40대	4.7	67.2	5.2
		50대	5.7	63.3	5.0
		60대 이상	13.2	57.8	4.7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강화	전 체		6.7	67.0	5.2
	성별	남성	5.9	65.0	5.2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연령	여성	7.6	69.1	5.1
		20대	5.2	67.9	5.1
		30대	7.0	65.2	5.2
		40대	4.2	70.0	5.0
		50대	5.3	68.4	5.3
		60대 이상	12.1	63.2	5.2
가족친화 기업 확산	전 체		9.4	55.1	4.8
	성별	남성	7.4	54.4	4.8
		여성	11.4	55.9	4.8
	연령	20대	7.8	59.6	4.9
		30대	10.0	55.6	4.9
		40대	6.8	57.5	4.9
		50대	5.9	51.6	4.8
		60대 이상	16.8	51.8	4.6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를 <표 IV-24>에 나타내었다. 1순위 응답으로는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표 IV-25>에서 보았을 때는 ‘시민의 인식 개선사업’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50.2%)’의 순이었다.

[그림 IV-10]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표 IV-24>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개, %

구 분	사례 수	시민의 의식 개선사업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	기타
1차(2018년)	(2000)	41.7	8.0	21.9	8.0	20.3	0.1
2차(2022년)	(2256)	40.8	22.6	12.7	12.7	10.9	0.4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내용으로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표 IV-25>에 나타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가 28.7%에서 50.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V-25> 향후 5년간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1+2순위)

단위: 개, %

구 분	사례 수	시민의 의식개선 사업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원확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제공	시군구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	기타
1차(2018년)	(2000)	65.0	28.7	29.2	44.5	30.0	0.5
2차(2022년)	(2256)	66.0	50.2	30.0	29.6	22.8	1.5

라. 청소년 조사 결과

1) 양성평등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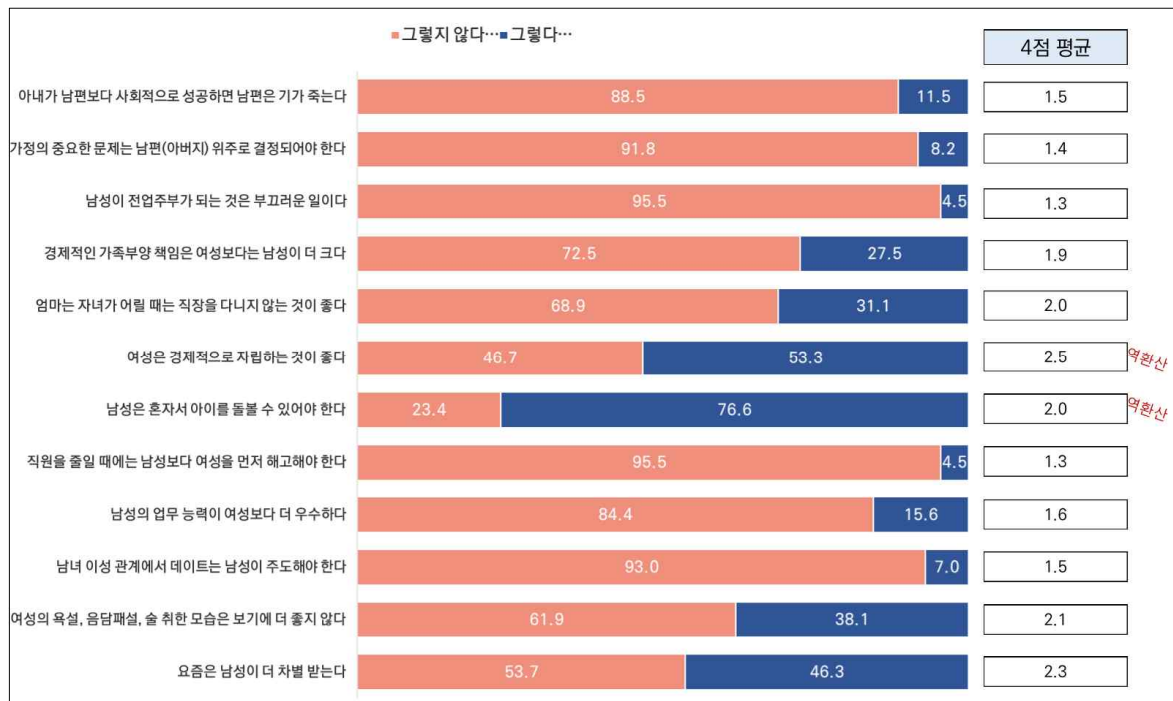
다음은 청소년 조사 결과이다. 청소년 조사의 1영역도 성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조사결과에 대해 [그림 IV-1]에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은 12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를 4점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것으로, 이를 부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가 성숙함을 의미한다. 단,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와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문항의 경우 역질문이므로 역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IV-11] 인천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단위 : %, 점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4>에 제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 응답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긍정 응답으로 나타내었다.

부정 응답이 가장 많은 문항은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95.5%)’와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95.5%)’로 나타났다. 그 뒤로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93.0%)’와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91.8%)’ 순으로 나타났다.

역질문하였으므로 긍정 응답이 많은 항목은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

다(76.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53.3%)’였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항목에서는 남녀의 응답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문항에서는 남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36.3%, 여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71.7%로 두 배가량 여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최근 젠더이슈와 관련하여 남녀의 응답 비율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26>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청소년)

단위 : %

항 목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체	남성	여성
	244	124	120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88.5	92.7	84.2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91.8	93.5	90.0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95.5	94.4	96.7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72.5	72.6	72.5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68.9	75.8	61.7
8)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95.5	96.8	94.2
9)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84.4	83.1	85.8
10)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93.0	91.1	95.0
11)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61.9	63.7	60.0
12)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53.7	36.3	71.7
항 목	긍정(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전체	남성	여성
	244	124	120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53.3	48.4	58.3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76.6	74.2	79.2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에 대해 2018년의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표 IV-27>에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 중 6개 문항만 1차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실태조사와의 비교 결과,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항목만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해 부정 및 긍정의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고 평균 역시 크게 변화한 바가 없어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항목의 경우, 성인 조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문항의 수정으로 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27> 인천시민(청소년)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비교

단위 : %, 점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1차(2018년도)	88.8	11.2	1.6
	2차(2022년도)	88.5	11.5	1.5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91.8	8.2	1.4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차(2018년도)	96.0	4.0	1.4
	2차(2022년도)	95.5	4.5	1.3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1차(2018년도)	65.2	34.8	2.0
	2차(2022년도)	72.5	27.5	1.9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68.9	31.1	2.0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46.7	53.3	2.5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차(2018년도)	19.4	80.6	1.9
	2차(2022년도)	23.4	76.6	2.0
8)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95.5	4.5	1.3
9)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84.4	15.6	1.6
10)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차(2018년도)	87.4	12.6	1.7
	2차(2022년도)	93.0	7.0	1.5
11)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1차(2018년도)	55.2	44.8	2.3
	2차(2022년도)	61.9	38.1	2.1

항 목	구 분	부정	긍정	평균
12)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1차(2018년도)	-	-	-
	2차(2022년도)	53.7	46.3	2.3

다음의 [그림 IV-12]은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성평등 수준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로 응답할 수 있으며 5점은 양성평등, 1점에 가까울수록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9점에 가까울수록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는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에 대해 모두 4.4점으로 나타나 여성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약간 치우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IV-26>에 제시하였다.

[그림 IV-12]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단위 : %, 점



<표 IV-28>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여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이 52.5%, 남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3.4%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여

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이 43.4%, 남성불평등이 15.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남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8.2%이고,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9.6%였다. 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남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50.9%,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44.9%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보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응답자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남성 또는 여성에게 모두 불평등한 사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8>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명)	여성 불평등 (1)	(2)	(3)	(4)	양성 평등 (5)	(6)	(7)	(8)	남성 불평등 (9)	여성 불평등	남성 불평등
한국 사회	전체	244	7.4	8.6	13.1	23.4	24.2	8.6	10.7	1.2	2.9	52.5	23.4
	남성	124	4.8	9.7	6.5	22.6	21.0	9.7	17.7	2.4	5.6	43.6	35.4
	여성	120	10.0	7.5	20.0	24.2	27.5	7.5	3.3	0	0	61.7	10.8
인천 시	전체	244	6.1	3.7	14.3	19.3	41.0	7.0	6.1	1.6	0.8	43.4	15.6
	남성	124	4.8	3.2	8.1	16.9	43.5	9.7	10.5	1.6	1.6	33.0	23.4
	여성	120	7.5	4.2	20.8	21.7	38.3	4.2	1.7	1.7	1.7	54.2	9.3

주: 표 우측의 '여성불평등'은 (1)부터 (4)까지 비율을, '남성불평등'은 (6)부터 (9)까지의 비율을 합산한 값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표 IV-29>에 나타내었다. 평균 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0.1점이 상승하였고,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두 결과 모두 성평등 수준에 대한 청소년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양성평등(5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여성불평등하다는 인식 및 남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의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인천시에 대해서는 양성평등(5점) 비율은 증가하였고, 여성불평등 비율은 감소, 남성불평등 비율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점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다음의 그림 [그림 IV-13]에 제시하였다.

<표 IV-29>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여성 불평등		↔		양성 평등		↔		남성 불평등		여 성 불 평 등	남 성 불 평 등	평 균
			(1)	(2)	(3)	(4)	(5)	(6)	(7)	(8)	(9)				
한국 사회	1차 (2018년도)	500	3.4	8.8	17.8	20.8	33.8	10.6	3.8	0.2	0.8	50.8	15.4	4.3	
	2차 (2022년도)	244	7.4	8.6	13.1	23.4	24.2	8.6	10.7	1.2	2.9	52.5	23.4	4.4	
인천시	1차 (2018년도)	500	1.0	7.6	15.6	22.2	39.8	9.8	3.0	0.2	0.8	46.4	13.8	4.4	
	2차 (2022년도)	244	6.1	3.7	14.3	19.3	41.0	7.0	6.1	1.6	0.8	43.4	15.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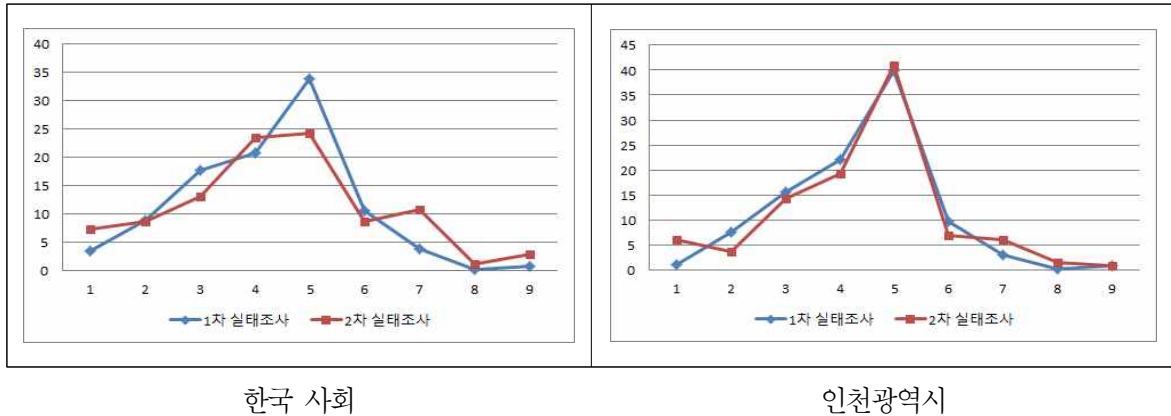
주: 여성불평등은 (1)부터 (4)까지, 남성불평등은 (6)부터 (9)까지의 비율을 합산한 값임

[그림 IV-13]에서는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2차 실태조사에서 양성평등(5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또한 여성불평등하다는 비율과 남성불평등하다는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성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가운데) 부분이 줄어들고, 남성 불평등의 가장 끝값과, 여성 불평등의 가장 끝값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차 실태조사의 청소년 사례 수가 1차 실태조사보다 많이 적은 편이어서 여러 해석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1차 실태조사와 2차 실태조사의 결과가 비슷하여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성 불평등의 끝값이 약간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전체 평균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13]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다음의 [그림 IV-14]는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에 대해 양성평등(5점)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 모두 평균이 0.2점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IV-31>에 제시하였다.

[그림 IV-14]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단위 : %, 점



<표 IV-28>은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성불평등(38.5%)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불평등(19.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천광역시에 대해 역시 여성불평등(33.1%)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불평등(20.0%) 비율을 앞섰다.

그러나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40%를 초과하였고 남성불평등하다는 응답은 10% 내외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 모두에 대해 여성불평등과 남성불평등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남성 응답자보다 양성평등(5점)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즉,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가 양성평등하거나 여성불평등한 사회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여성 응답자가 우리 사회를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30>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명)	여성 불평등 (1)	(2)	(3)	(4)	양성 평등 (5)	(6)	(7)	(8)	남성 불평등 (9)	여성 불평등	남성 불평등
한국 사회	전체	244	6.6	1.2	13.9	16.8	42.2	6.1	7.8	2.5	2.9	38.5	19.3
	남성	124	4.8	1.6	12.9	11.3	40.3	8.1	10.5	4.8	5.6	30.6	29.0
	여성	120	8.3	0.8	15.0	22.5	44.2	4.2	5.0	0	0	46.6	9.2
인천시	전체	244	5.7	1.2	9.4	16.8	46.7	11.1	5.7	2.0	1.2	33.1	20.0
	남성	124	4.8	1.6	7.3	12.1	45.2	15.3	8.1	4.0	1.6	25.8	29.0
	여성	120	6.7	0.8	11.7	21.7	48.3	6.7	3.3	0	0.8	40.9	10.8

주: 표 우측의 '여성불평등'은 (1)부터 (4)까지, '남성불평등'은 (6)부터 (9)까지의 비율을 합산한 값임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1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표 IV-29>에 나타내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양성평등(5점) 비율이 1차 실태조사보다(59.0%) 2차 실태조사

에서(42.2%) 더 낮았다. 또한 여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실태조사보다(25.4%) 2차 실태조사에서(38.5%) 증가하였으며, 남성불평등하다는 응답 또한 1차 실태조사보다(15.6%) 2차 실태조사 결과(19.3%)에서 더 높았다.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도 역시 양성평등(5점) 응답 비율이 1차 실태조사보다(62.6%) 2차 실태조사에서(46.7%) 더 낮았다. 여성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1차 실태조사 결과보다(23.2%) 2차 실태조사에서(33.2%) 증가하였으며 남성불평등하다는 비율 또한 1차 실태조사보다(14.2%)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20.1%) 더 높았다.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에 대해 모두 평균 점수가 감소한 이유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여성 불평등 응답 비율이 대폭 상승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남성 불평등 응답 비율 역시 증가하였으나 여성 불평등의 증가분에 비하면 소폭 상승하여 양성평등 비율 역시 감소하였다. 따라서 1차 실태조사와의 비교 결과 양성평등하다는 인식에서 더 멀어지고 여성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V-31>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주관적 성평등 수준 비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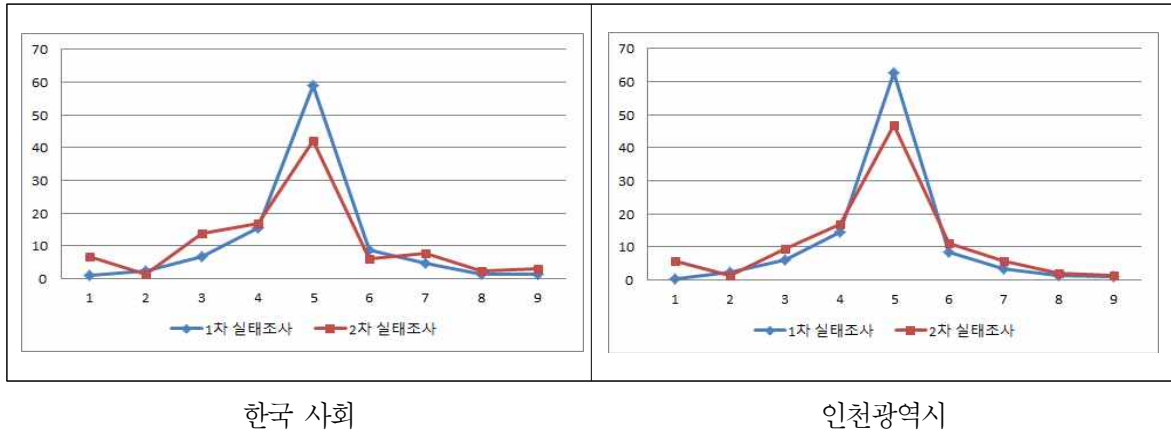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여성 불평등		↔		양성 평등		↔		남성 불평등		여성 불평 등	남성 불평 등	평균
			(1)	(2)	(3)	(4)	(5)	(6)	(7)	(8)	(9)				
한국 사회	1차 (2018년도)	500	1.0	2.2	6.8	154	590	8.6	4.6	1.2	1.2	25.4	15.6	4.9	
	2차 (2022년도)	244	6.6	1.2	139	168	422	6.1	7.8	2.5	2.9	38.5	19.3	4.7	
인천시	1차 (2018년도)	500	0.4	2.4	6.0	144	626	8.4	3.4	1.4	1.0	23.2	14.2	4.9	
	2차 (2022년도)	244	5.7	1.2	9.4	168	467	11.1	5.7	2.0	1.2	33.2	20.1	4.7	

다음의 [그림 IV-15]는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 모두 양성평등(5점)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1차 실태조사보다 2차 실태조사에서

더 낮았다. 여성불평등하다와 남성불평등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변화하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5] 5년 후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청소년)



다음은 인천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를 8가지 문항으로 알아본 결과이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였으며 <표 IV-32>에서는 다중응답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항목에 대해서 ‘온라인상 성별 혐오 및 공격(53.3%)’,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49.2%)’, ‘고용상 성차별(43.4%)’, ‘여성에 대한 폭력(2.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 분석결과, ‘고용상 성차별’ 항목의 경우 남성 응답자(49.6%)가 여성 응답자(39.2%)보다 더 많았으며, ‘가사, 육아 등 남성의 낮은 참여’ 항목은 여성(30.8%)이 남성보다(21.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며 여성의 경우 육아 및 돌봄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단위 : 명(%)

구분	고용상 성차별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가사, 육아 등 남성의 낮은 참여	여성의 낮은 의사결정 참여	여성 에 대한 폭력	여성의 성적 대상화	온라인상 성별혐오 및 공격	성별 고정관념	기타
전체	106(43.4)	122(50.0)	64(26.2)	57(23.4)	104(42.6)	69(28.3)	130(53.3)	71(29.1)	9(3.7)
남성	59(49.6)	61(49.2)	27(21.8)	26(21.0)	53(42.7)	38(30.6)	66(53.2)	35(28.2)	7(5.6)
여성	47(39.2)	61(50.8)	37(30.8)	31(25.8)	51(42.5)	31(25.8)	64(53.3)	36(30.0)	2(1.7)

2) 안전 및 건강

세 번째 영역인 ‘안전 및 건강’에서는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해 필요도를 묻고 있다. <표 IV-33>은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청소년의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월경 건강 보장’, ‘피임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임신 중단(낙태)를 위한 의료 서비스’,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 생식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6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의 4가지로 응답할 수 있다. 표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으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긍정으로 나타내었다.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의 경우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긍정 응답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긍정 응답의 비율이 88.9%로 나타났으며, 남성이(87.1%) 여성보다(90.8%) 더 낮게 응답하였다.

요컨대,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해 대부분 응답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중단(낙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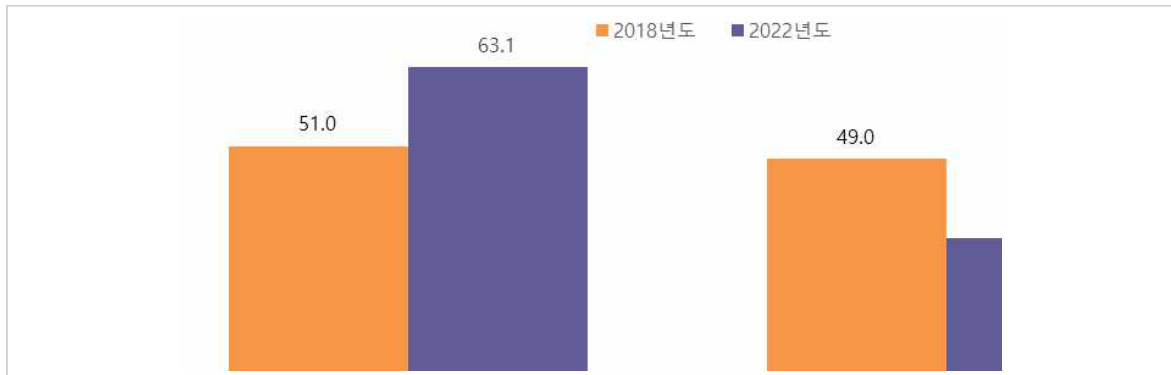
구 분	성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부정	긍정	4점 평균
청소년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전체	0.8	4.1	34.8	60.2	4.9	95.1	3.5
	남성	1.6	4.0	40.3	54.0	5.6	94.4	3.5
	여성	0	4.2	29.2	66.7	4.2	95.8	3.6
월경 건강 보장	전체	1.6	4.5	48.8	45.1	6.1	93.9	3.4
	남성	2.4	4.0	51.6	41.9	6.4	93.6	3.3
	여성	0.8	5.0	45.8	48.3	5.8	94.2	3.4
피임법 상담 서비스	전체	0.4	1.6	39.3	58.6	2.0	98.0	3.6
	남성	0.8	2.4	41.1	55.6	3.2	96.8	3.5
	여성	0	0.8	37.5	61.7	0.8	98.2	3.6
임신 중단(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체	2.5	8.6	45.1	43.9	11.1	88.9	3.3
	남성	3.2	9.7	45.2	41.9	12.9	87.1	3.3
	여성	1.7	7.5	45.0	45.8	9.2	90.8	3.4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전체	0	4.5	34.4	61.1	4.5	95.5	3.6
	남성	0	4.0	37.9	58.1	4.0	96.0	3.5
	여성	0	5.0	30.8	64.2	5.0	95.0	3.6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	전체	0	1.6	44.7	53.7	1.6	98.4	3.5
	남성	0	1.6	50.8	47.6	1.6	98.4	3.5
	여성	0	1.7	38.3	60.0	1.7	98.3	3.6

3) 학교생활

청소년 조사의 네 번째 영역은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그림 IV-16]에 나타내었다. 1차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차 실태조사에서는 63.1%가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실태조사에서보다 2차 실태조사에서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

단위 : %



[그림 IV-17]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종류별로 교육 여부 및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 여부에서는 ‘성평등·성인지 교육’이 9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90.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68.2%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경험 여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에서 ‘성평등·성인지 교육’이 9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95.5%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양성평등 교육 여부 및 필요성 여부

단위 : %



앞선 내용에 대해 성별 분석 결과, <표 IV-34>의 필요성 여부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성인지 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좀 더 높았다.

<표 IV-34> 양성평등 교육 여부 및 필요성 여부

단위 : %

구 분	성별	교육 여부		필요성 여부	
		교육받음	교육받지 않음	필요함	불필요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남성	89.5	10.5	91.9	8.1
	여성	91.2	8.8	94.1	5.9
가정폭력 예방교육	남성	77.9	22.1	95.3	4.7
	여성	77.9	22.1	95.6	4.4
성매매 예방교육	남성	72.1	27.9	95.3	4.7
	여성	63.2	36.8	94.1	5.9
성평등·성인지 교육	남성	95.3	4.7	94.2	5.8
	여성	94.1	5.9	98.5	1.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남성	87.2	12.8	94.2	5.8
	여성	91.2	8.8	97.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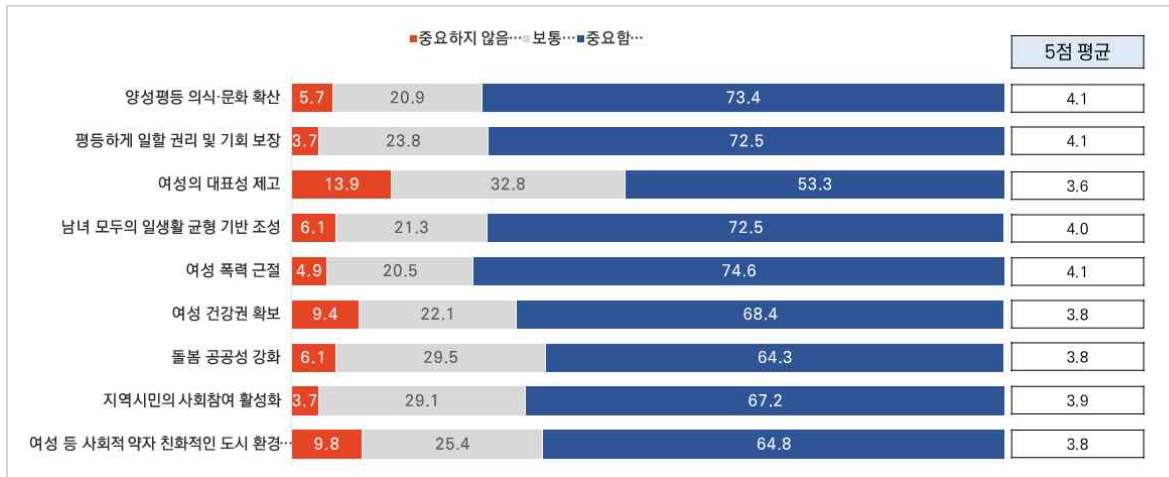
4) 양성평등 정책

성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조사의 마지막 5번째 영역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것이다. 먼저 [그림 IV-17]에는 인천시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인 설문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9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할 수 있고 1점부터 5점까지로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로는 ‘양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여성폭력 근절’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18]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중요도(청소년 응답)

단위 : %, 점



위의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 중요도에 대해 <표 IV-35>는 성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를 합하여 부정으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합하여 긍정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항목에서 남성 응답자의 10%가 넘는 비율이 부정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성 응답자의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35>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중요도

단위 : %

구 분	성 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5점 평균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전체	1.6	4.1	20.9	29.1	44.3	5.7	73.4	4.1
	남성	2.4	3.2	21.8	30.6	41.9	5.6	72.5	4.1
	여성	0.8	5.0	20.0	27.5	46.7	5.8	74.2	4.1
평등한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전체	1.6	2.0	23.8	30.3	42.2	3.6	72.5	4.1
	남성	2.4	1.6	26.6	30.6	38.7	4.0	69.3	4.0

구 분	성 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정	긍정	5점 평균
	여성	0.8	2.5	20.8	30.0	45.8	3.3	75.8	4.2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체	4.1	9.8	32.8	29.1	24.2	13.9	53.3	3.6
	남성	5.6	12.9	34.7	27.4	19.4	18.5	46.8	3.4
	여성	2.5	6.7	30.8	30.8	29.2	9.2	60.0	3.8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전체	1.6	4.5	21.3	34.0	38.5	6.1	72.5	4.0
	남성	2.4	4.8	23.4	29.0	40.4	7.2	69.4	4.0
	여성	0.8	4.2	19.2	39.2	36.7	5.0	75.9	4.1
여성 폭력 근절	전체	1.6	3.3	20.5	36.1	38.5	4.9	74.6	4.0
	남성	2.4	3.2	21.8	39.5	33.1	5.6	72.6	4.0
	여성	0.8	3.3	19.2	32.5	44.2	4.1	76.7	4.2
여성 건강권 확보	전체	2.5	7.0	22.1	43.4	25.0	9.5	68.4	3.8
	남성	3.2	8.9	25.0	43.5	19.4	12.1	62.9	3.7
	여성	1.7	5.0	19.2	43.3	30.8	6.7	74.1	4.0
돌봄 공공성 강화	전체	1.6	4.5	29.5	37.3	27.0	6.1	64.3	3.8
	남성	2.4	4.8	32.3	35.5	25.0	7.2	60.5	3.8
	여성	0.8	4.2	26.7	39.2	29.2	5.0	68.4	3.9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전체	1.6	2.0	29.1	41.8	25.4	3.6	67.2	3.9
	남성	2.4	2.4	29.8	43.5	21.8	4.8	65.3	3.8
	여성	0.8	1.7	28.3	40.0	29.2	2.5	69.2	4.0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전체	1.6	8.2	25.4	39.8	25.0	9.8	64.8	3.8
	남성	2.4	12.1	25.0	40.3	20.2	14.5	60.5	3.6
	여성	0.8	4.2	25.8	39.2	30.0	5.0	69.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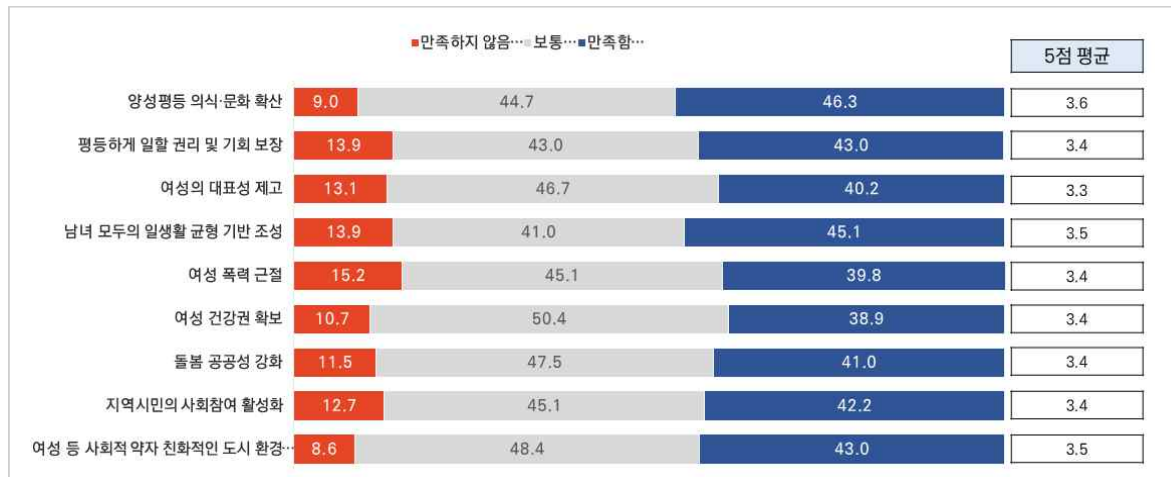
다음 [그림 IV-19]는 청소년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9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할 수 있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 또는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역시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이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녀 모

두의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3.5로 뒤를 이었다. 중요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항목이 3.3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의 항목은 모두 3.4로 나타났다.

[그림 IV-19]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단위 : %, 점



<표 IV-36>은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조사에 대해 성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과 ‘만족하지 않음’을 합하여 부정으로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을 합하여 긍정으로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결과 역시 성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그림 IV-1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통 또는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 분석결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돌봄 공공성 강화’,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항목은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성인조사 결과 해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의해 보통 또는 긍정의 응답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조사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이상의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표 IV-3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만족도

단위 : %

구 분	성 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부정	긍정	5점 평균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전체	2.9	6.1	44.7	24.2	22.1	9.0	46.3	3.6
	남성	3.2	5.6	41.9	25.0	24.2	8.8	49.2	3.6
	여성	2.5	6.7	47.5	23.3	20.0	9.2	43.3	3.5
평등한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전체	4.9	9.0	43.0	24.6	18.4	13.9	43.0	3.4
	남성	6.5	8.9	40.3	24.2	20.2	15.4	44.4	3.4
	여성	3.3	9.2	45.8	25.0	16.7	12.5	41.7	3.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체	5.7	7.4	46.7	26.6	13.5	13.1	40.1	3.3
	남성	5.6	6.5	50.8	22.6	14.5	12.1	37.1	3.3
	여성	5.8	8.3	42.5	30.8	12.5	14.1	43.3	3.4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전체	4.1	9.8	41.0	23.8	21.3	13.9	45.1	3.5
	남성	5.6	6.5	41.1	23.4	23.4	12.1	46.8	3.5
	여성	2.5	13.3	40.8	24.2	19.2	15.8	43.4	3.4
여성 폭력 근절	전체	3.7	11.5	45.1	22.5	17.2	15.2	39.7	3.4
	남성	4.0	8.9	46.0	23.4	17.7	12.9	41.1	3.4
	여성	3.3	14.2	44.2	21.7	16.7	17.5	38.4	3.3
여성 건강권 확보	전체	3.7	7.0	50.4	20.5	18.4	10.7	38.9	3.4
	남성	4.8	7.3	47.6	21.8	18.5	12.1	40.3	3.4
	여성	2.5	6.7	53.3	19.2	18.3	9.2	37.5	3.4
돌봄 공공성 강화	전체	4.5	7.0	47.5	25.8	15.2	11.5	41.0	3.4
	남성	4.8	4.0	52.4	23.4	15.3	8.8	38.7	3.4
	여성	4.2	10.0	42.5	28.3	15.0	14.2	43.3	3.4
지역시민 사회참여 활성화	전체	5.7	7.0	45.1	24.6	17.6	12.7	42.2	3.4
	남성	7.3	4.8	47.6	23.4	16.9	12.1	40.3	3.4
	여성	4.2	9.2	42.5	25.8	18.3	13.4	44.1	3.5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전체	2.9	5.7	48.4	27.0	16.0	8.6	43.0	3.5
	남성	3.2	3.2	47.6	29.0	16.9	6.4	45.9	3.5
	여성	2.5	8.3	49.2	25.0	15.0	10.8	40.0	3.4

2. 면접조사

가. 조사 개요

- 조사명 :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조사일정 : 2022년 8월 17일(수) ~ 8월 19일(금)
- 면접참여자 : 인천시의 시의원 및 공무원, 여성단체 대표, 일자리·젠더폭력·돌봄 관련 기관 담당자 등

<표 IV-37>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면접참여자

영역	사례	소속 및 직위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성주류화	1	(前)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2	(前)인천시의회 의원
	3	(現)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 / (前)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
	4	인천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5	인천여성회 회장
	6	인천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팀장
성평등 노동/ 일자리	7	인천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8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9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
	10	인천시 여성정책과 성주류화팀 주무관
	11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원팀장
일-생활 균형/ 돌봄	12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3	계양구가족센터 센터장
	1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 꿈터장
	15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단장
	16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젠더폭력/ 안전/건강	17	인천시의회 의원
	18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장
	1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행정관
	21	인천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 조사내용 : 반구조적 면접으로 진행하였고, 각 영역별로 우선 인천시의 전반적인 양성평등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고,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성과와 애로사항 관련 질문을 하였으며, 참여자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기본 질문 이외에 영역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38>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주요 질문내용

영역	질문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성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상, 행사, 캠페인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군구의회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 여성인재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인천시 성평등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에 젠더전문관이 배치되고 성주류화팀이 신설되는 등 성주류화 정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 노동/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여성노동권익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돌봄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여성 집중 직종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권익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컨설팅 사업 분야는 어느 기관이나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세일센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생활 균형/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인천형 특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천의 일-생활 균형, 돌봄 관련 기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의 가사 및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봄교사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젠더폭력/ 안전/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예방교육 관련 사업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은 어떻게 구성 및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폭력피해지원서비스의 절차 및 협업 체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성과지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젠더폭력·안전·건강 분야에서 타 시도와 비교되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 조사 및 분석 방법 : 면접참여자에게 면접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면접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면접은 대부분 2시간 내외로 재단 내부의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녹음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문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진술을 동일한 그룹으로 유목화하여 영역(분석틀)의 구조 안에 배치하고 유의미한 주제로 도출하였다.

나. 분석 결과

<표 IV-39> 「양성평등정책계획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의미 분석

주제군	주제	평가 및 요구사항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상 성평등 수준향상 추세이나 여성혐오 범죄 지속적 발생 마계인천 등 부정적 측면이 언론에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
	생활 속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시민 대상별 맞춤 홍보 전략 개발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지역 여성사 연구 확산 방안 마련 인천여성영화제 예산 확대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축소 및 집중
여성 대표성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의회 변화를 위한 외부의 노력 필요 의정모니터링은 외부 민간의 견인 필요 여성단체가 의장단 연석회의를 요구하여 성인지교육 유도
	공공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제고 필요 부서별 성별 분리 및 여성 과소대표 현황 점검 필요
	젠더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방안 다각화 여성인재 DB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권한 부여 및 조례 개정 양성평등위원회 분과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선 엄선 행정통계의 성별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 성별통계 확산 방안 마련 필요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여성가족국 위상 강화 양성평등기금 확대 조성 주민참여예산의 여성가족분과 예산 확대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군구와의 긴밀한 소통 필요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서 국제교류협력 강화

주제군	주제	평가 및 요구사항
	민관협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등 풀뿌리 단계의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주민교육사업 필요 • 가족센터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마을활동 지원 •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 시민단체 육성
성평등 노동/ 일자리	취약노동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및 관리감독 실시 • 돌봄노동의 표준화된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노동 실태조사 필요 •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성별 회복탄력성 차이 관련 조사 필요
	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관련 사업 강화 • 경력이음사업 확대 • 성평등 노동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기업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사업 추진 • 새일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 새일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국 산하 일·생애·미래과 신설 방안 마련 필요 • 여성노동권의 관련 민관시설을 연결하는 허브 지정 필요
일-생활 균형	대상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도록 균형성 진단 •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사업 추진 • 재혼가정 대상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발굴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가족친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 완화 및 혜택 확대 • 공공기관의 우선적 선도 필요
돌봄	대상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환경에서의 보육 공공성 확대에 관한 재진단 필요 • 돌봄의 질 제고 방안 마련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 대상별 부서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 부모 간 언어 소통 지원 필요 •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등 돌봄 지원 확대 •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첫 부모 교육 실시 • 시설 이용 부모 대상 에티켓 교육 필요
	남성 육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활성화
젠더폭력/ 안전/건강	피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호시설 다양화 • 가족 단위 거주 보호시설 확충 • 보호시설 만기 퇴소 시 주거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및 일대일 멘토 매칭 • 피해자 초기 사정을 진행하는 관의 컨트롤타워 및 공간구축 • 기관의 보호조치 관철 권한 강화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제도화 • 종사자 책임보험 추진 • 피해지원의 기관별·종사자별 편차 감소 방안 마련

주제군	주제	평가 및 요구사항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교육 강사단 처우 개선 • 장기적 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 필요 •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폭력피해 이주여성 통역사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 의무화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개선 캠페인의 청년 참여 확대 •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컨퍼런스 등 기관 간 소통 정례화 •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권 지원 • 강화군·옹진군 건강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 병원선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 노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버존 지정
기타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이행 중간평가 필요 • 사업 평가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변경 • 인천의 정책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1) 성평등 문화 확산

가) 성평등 수준

면접참여자는 인천의 성평등 수준이 정량적 지표상으로는 점수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중매체에서 부각되는 인천의 모습을 고려하면, 시민이 체감할 만큼으로 성평등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성혐오 사건들이 인천에서 발생하면서, ‘마계인천’ 등 부정적 측면이 언론에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생활 속 문화 확산

이에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면접참여자는 양성평등 관련 행사에 행정가·연구자·활동가 중심으로 계속 참여하는 사람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구성하고 홍보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훨씬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1인 창작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연령·성별·직업 등 시민 특성을 반

영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고 SNS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더불어 성차별 모니터링을 공공기관 홍보물 이외에 대중매체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여성사 연구 확산과 관련하여, 인천공단 및 민주화운동 관련 여성세대와 현재 2030 여성세대를 연결하는 사업, 평생교육기관의 구술사 관련 강좌 개설 및 운영이 제안되었다. 인천여성영화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여성상, 평등부부상, 다양한 가족상 시상’의 질적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시상의 수를 줄이고, 양성평등에 기여한 남성이 수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2) 여성 대표성

가) 정치분야

시군구위원의 변화를 위한 정당 외부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관련 사업의 추진부서를 의회사무처가 아닌 인천시 여성정책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상호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군구위원의 성평등 연구모임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진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의원, 낮은 의원을 드러내는 것도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단체가 의장단 연석회의를 요구하여 성인지 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나) 공공행정 분야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제고를 위해 우선 부서별 성별 분리 및 여성 과소대표 현황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면접참여자도 성과지표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없으며, 활동평가 등과 같이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 젠더리더십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재 DB가 목록 작성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지역에서 어떤 대표성이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방안을 다각화하고, 여성인재 DB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3) 성주류화

가) 추진기반 강화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연 2회 개최에 불과하며 자문의견 제시 이상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권고, 의결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책무성 및 위상을 제고해야 위원회가 내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 30명이 전부 모여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선을 엄선하고 소규모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집중적·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역시 운영 횟수뿐 아니라 역할 강화 관련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과 협업하여 군구별 성별분리통계 입력 및 취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성별통계를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여성가족국의 위상을 높이며, 현재의 젠더전문관을 젠더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금 및 주민참여예산의 여성가족분과 예산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나) 연계협력 강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선출직인 단체장의 의지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와 사업 추진 군구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시와 군구 간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시의 의도와 다르게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기본 개념 및 방향에 대한 군구 담당공무원과의 논의 및 합의가 요구되었다.

이외에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서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민관협력 구축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밑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족센터보다 더욱 작은 단위의 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풀뿌리 단계의 마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기존의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이 공동으로 인천의 성평등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며 추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4) 성평등 노동/일자리

가) 취약노동계층

면접참여자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개소하여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처우 문제는 여론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영역 직고용, 표준화된 임금가이드라

인 마련, 노무 및 심리상담, 대체인력사업, 실업수당 지급 지원 등이 정기적·체계적 관리 감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노동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환경에서 나타나는 노동 분야 성별 회복탄력성 차이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나) 새일센터

새일센터에서 노동시장 진입부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청년여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경력이음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성평등 노동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업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면접참여자지는 새일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새일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새일센터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새일센터의 성과를 정량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수료 이후 6개월 내에 취업실적을 내야 센터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1년 과정을 요구하는 취업처 연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 추진체계

여성가족국 산하 성평등노동팀 신설을 시작으로, 새일센터 업무를 확장하면서 성평등 노동정책 및 1인가구 정책을 통합하여 새로운 과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일·생애·미래과’를 신설하여 입직부터 퇴직까지 여성노동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권익 관련 민관시설을 연결하는 허브를 지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때 새로운 센터 설립은 예산이 분산되고 전문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미 지역에 축

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계 및 협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기존의 새일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나, 그러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5) 일·생활 균형

가) 대상 및 서비스

면접참여자 1차 기본계획의 경우 수혜 계층이 한정적이므로, 전체 사업 수혜자의 균형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부모의 구체적 일·생활 균형 수요가 다르므로, 여러 맞춤형 대안을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구’의 범위에 재혼가정을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나) 가족친화기업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강화해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비용을 낮추고 지표를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혜택 확대를 통해 신청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우선적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6) 돌봄

가) 대상 및 서비스

면접참여자는 저출생 환경에서 보육 공공성 확대에 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존 시설 운영지원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만으로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교직원 고충 관리, 일·생활 균형 지원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담당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천형 영유아 비율 조절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대상별 부서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은 중복 지원뿐 아니라 돌봄의 측면에서도 문제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 가정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돌봄에 대한 관점이 충돌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 부모 간 언어 소통 지원,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초등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이 제안되었다.

나) 부모교육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생애 첫 부모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대상 에티켓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다) 남성 육아참여

면접참여자는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는 부부 및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남성의 양육 참여 장려 방안으로서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적극적 홍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되었다.

7) 젠더폭력/안전/건강

가) 피해지원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다양화하고,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

활을 회복할 때까지 쉼터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고, 쉼터 만기 퇴소 시 주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폭력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및 일대일 멘토 매칭도 제안되었다.

기관이 최선의 보호조치를 제시하더라도 내담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거부 의사를 표명할 때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의 보호조치 관철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초기 심리적·의료적·사회적 사정을 진행하는 관의 컨트롤 타워 및 일시적 분리보호 공간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나) 종사자

1-2회성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회복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근무시간 중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피해지원의 기관별·종사자별 편차 감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사자의 이직 및 인사이동 등 변화에 따라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처우와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피해 여성 및 아동 중심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고 교육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기관별·개인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협업하는 종사자 대상 합동교육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관해 이해하고, 차이를 줄이도록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 동일한 매뉴얼 및 평가지표에 관한 기관별 해석 차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민감성의 공통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 교육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강사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단기교육이 아니라 장기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이 필요하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통역사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라) 캠페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공익광고 사업은 성평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여러 방식으로 게시하고, 카드뉴스와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마) 네트워크

민관 사례컨퍼런스 등 기관 간 소통이 형식적인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사례 자체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각 기관의 업무 및 종사자의 인식, 협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바) 건강권

면접참여자지는 여성건강권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옹진군의 경우, 무엇보다 건강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병원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버존 지정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8) 기타

가) 종합계획 수립

면접참여자 1은 연 1회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반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며, 정량지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정성평가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인천시 1차 계획의 보완 및 개선이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의 가짓수가 적더라도 현재 인천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V. 종합계획의 구조

1.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2.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종합계획의 구조 및 정책과제

V

종합계획의 구조

1.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 향후 5년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2027)』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첫째,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추진기관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정책적 범위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에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과제를 반영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가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인천시의 지역성평등지수(2020년 기준)는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8개 분야 중 특히 ‘경제활동’(75.4점/8순위), ‘의사결정’(41.4점/8순위), ‘복지’(85.9점/13순위), ‘안전’(76점/8순위), ‘가족’(62.4점/13순위) 등의 분야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셋째,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일자리, 여성폭력예방 및 대응, 가족친화, 아동청소년 돌봄, 공무원 교육, 성주류화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여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에 포함한다.

- 넷째, 15세 이상 인천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양성평등정책인 ‘여성폭력 근절’, ‘평등하게 일할 권리’,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한다.
- 다섯째, 영역별 자문회의, 초점집단면접, 현장전문가 자문단회의, 시민토론회,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인천시민, 시민단체 회원,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
- 여섯째, 인천광역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검토하여 포함한다.

[그림 V-1]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방향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시민들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평등 의식 확산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정치 및 공공·행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그리고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여성의 일할 권리와 관련하여, 취약노동 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여러 부모지원 서비스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노력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요구를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V-1>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민의 요구사항

정책요구	대과제	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 시민 대상별 맞춤 홍보 전략 개발 •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지역 여성사 연구 확산 방안 마련 • 인천여성영화제 예산 확대 •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축소 및 집중 • 시군구의회 변화를 위한 외부의 노력 필요 • 의정모니터링은 외부 민간의 견인 필요 • 여성단체가 의장단 연석회의를 요구하여 성인지교육 유도 •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제고 필요 • 부서별 성별분리 및 여성과소대표 현황 점검 필요 •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방안 다각화 • 여성인재 DB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권한 부여 및 조례 개정 • 양성평등위원회 분과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선 엄선 • 행정통계의 성별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 • 성별통계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부서간 업무 협의를 위한 여성가족국 위상 강화 • 양성평등기금 확대 조성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정책 추진환경 정비

정책요구	대과제	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의 여성가족분과 예산 확대 • 종합계획 이행 중간평가 필요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군구와의 긴밀한 소통 필요 •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서 국제교류협력 강화 • 주민자치회 등 풀뿌리 단계의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주민교육사업 필요 • 가족센터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공간을 활용한 마을활동 지원 •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적 시민단체 육성 		여성의 역량강화 및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및 관리감독 실시 • 돌봄노동의 표준화된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노동 실태조사 필요 •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성별 회복탄력성 차이 관련 조사 필요 • 청년여성 관련 사업 강화 •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사업 확대 • 성평등 노동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기업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사업 추진 • 새일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 새일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필요 • 여성가족국 산하 일·생애·미래과 신설 방안 마련 필요 • 여성노동권의 관련 민관시설을 연결하는 허브 지정 필요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조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도록 균형성 진단 •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사업 추진 • 재혼가정 대상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발굴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 완화 및 혜택 확대 • 공공기관의 우선적 선도 필요 • 저출생 환경에서의 보육 공공성 확대에 관한 재진단 필요 • 돌봄의 질 제고 방안 마련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 대상별 부서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 부모 간 언어 소통 지원 필요 •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등 돌봄 지원 확대 •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 • 생애 첫 부모 교육 실시 • 시설 이용 부모 대상 에티켓 교육 필요 •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활성화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모·부성권 보장 및 제도 지원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지원
		일-생활 균형 제도정착 및 추진체계 마련
		자녀양육 부·모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화
		돌봄종사자 지원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호시설 다양화 • 가족 단위 거주 보호시설 확충 • 보호시설 만기 퇴소 시 주거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및 일대일 멘토 매칭 • 피해자 초기 사정을 진행하는 관의 컨트롤타워 및 공간구축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기반 및 환경 조성

정책요구	대과제	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보호조치 관철 권한 강화 • 종사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제도화 • 종사자 책임보험 추진 • 피해지원의 기관별·종사자별 편차 감소 방안 마련 • 폭력예방교육 강사단 처우 개선 • 장기적 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 필요 •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폭력피해 이주여성 통역사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 의무화 • 인식 개선 캠페인의 청년 참여 확대 •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 • 사례 컨퍼런스 등 기관 간 소통 정례화 •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권 지원 • 강화군·옹진군 건강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 병원선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 노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버존 지정 		신종 여성폭력 대응 및 폭력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여성폭력피해 지원체계 강화
		성인지적 건강정책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2.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함께 만드는 미래, 성평등한 인천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성평등한 인천’이다. 민선 8기 시정방향인 ‘대한민국의 꿈, 인천의 미래’를 반영하여 ‘미래’라는 키워드를 공유하였고, 제1차 종합계획의 비전이었던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성평등’을 유지하였다. 성평등한 인천의 미래는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향점이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한 인천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임을 강조하였다.

나. 목표 : 양성평등 기반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 성평등 정책의 목표는 ‘양성평등 기반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이다.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 이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양성평등기본법)”을 말한다.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목표는 첫째, ‘양성평등 기반 강화’이다. 인천에서 성평등 정책을 법정 계획하에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제1차 인천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부터이다. 이후 5차례에 걸친 계획수립과 정책 시행을 거듭하면서, 전담부서 설치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건실해졌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정 전반에 대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은 제한적이며, 인천시민의 성평등 의식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 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의 고정관념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로 드러나는 인천의 성평등 수준은 안전과 가족, 복지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설정하였고 정책과제에서도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를 1영역으로 배치하였다.
- 둘째,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이다. 코로나19 이후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65.6%(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적인 상향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하락하고 있으며, 2,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육아와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공적 돌봄의 체계와

기능이 약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민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뽑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공감복지정책의 추진은 민선 8기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한 일과 돌봄의 분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과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을 각각 2영역과 3영역의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 셋째, ‘안전과 건강권 증진’이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천시민이 지목한 것이 ‘여성폭력근절’이다. 시민 대다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 19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천은 전국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범죄발생 건수를 보이며,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은 88%(2020년)이다. 한편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건강할 권리에 대한 공공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길지만, 사회적 측면의 건강수명은 여성이 더 짧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건강 이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성·재생산과 관련된 건강권의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4영역의 정책과제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에 담았다.

3. 종합계획의 구조 및 정책과제

가. 종합계획의 구조

-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의 3대 목표 아래, 4개 대과제, 15개 중과제 및 42개 소과제로 구성된다.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기관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이다.

[그림 V-2]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표 V-2>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1.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1-1. 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1-1-1. 아동·청소년 기관종사자 성평등 교육	① 보육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신규
			②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신규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1-2. 성평등 문화확산	1-2-1.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기존
			②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신규
			③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지원	기존
		1-2-2.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① 성차별 모니터링단(시민/청소년)의 교육과 활동 지원 강화	기존
			② 지역 대중매체 성차별 실태점검 및 확산	신규
		1-2-3. 디지털 시민성 함양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존
			② 시민 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존
		1-2-4. 지역여성 문화유산 발굴 및 확산	① 지역여성 역사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기존
			② 지역여성사, 여성 인물 발간 및 확산, 아카이빙 구축	기존
			③ 지역여성사 교육/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신규
	1-3. 성평등정책 추진환경 정비	1-3-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양성평등위원회 책무성 제고	기존
			②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기존
			③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기존
			④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구 연계 강화	기존
		1-3-2. 양성평등 기금 운용 활성화	①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 확대	기존
			②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	기존
			③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	신규
		1-3-3.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	①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	기존
			②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기존
			③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기존
			④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기존
	1-4.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1-4-1.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①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평등 교육	기존
			②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신규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1-4-2. 공공 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③ 성인지적 의정 모니터링 활동 지원	기존
			①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30%)	신규
			② 인천시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기존
			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기존
			②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기존
		1-4-3. 여성시민 역량강화	① 여성 인재 발굴 및 운영 내실화	확대
			②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2.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2-1.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조성	2-1-1. 고용기회의 성평등 제고	① 성평등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신규
			② 성별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신규
		2-1-2. 성평등노동정 책 추진체계 강화	① 인천 여성노동권의 지원기능 강화	신규
			② 여성일자리와 성평등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 신설	신규
		2-1-3. 성별임금격차 해소	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신규
		2-1-4.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①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확대
			②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신규
			③ 소규모 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신규
	2-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2-2-1.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응	① 과학기술 분야 여성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 지원	기존
			② 여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존
			③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기존
			④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2-2-2.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① 인력 및 기술 수요 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기존
			②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존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2-2-3. 취약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및 특수고용여성노동자 실태조사	신규
			② 생애주기별 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신규
		2-2-4.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활성화 지원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전문 역량제고 지원	기존
			② 경력단절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확대
			③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신규
3.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3-1. 모·부성권 보장 및 제도지원	3-1-1. 제도 홍보 및 활성화	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 및 홍보	기존
			② 난임치료 휴가 인식개선 및 제도이용률 제고	신규
		3-1-2. 남성의 육아 참여 권리 확대	① 인천아빠의 자조모임 활성화	기존
			② 남성육아참여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신규
	3-2.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지원	3-2-1. 인천시 중소기업 제도지원	① 중소기업 일·생활 제도 활용 지원	신규
		3-2-2.가족돌 봄 및 여가·재충전 지원	① 인천시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조사 및 인식개선	신규
			② 근로자의 여가 및 재충전(역량강화 등)을 위한 휴가활용 지원	신규
	3-3.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및 추진체계 마련	3-3-1. 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①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 확대	확대
			② 인천시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발굴	기존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확대
		3-3-2.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①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 전담부서 설치	신규
			②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지원 기관 운영	신규
			③ 인천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확대
	3-4. 자녀양육 부·모 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화	3-4-1.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확대
			② 인천형 어린이집의 내실화	기존
		3-4-2.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① 초등생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② 인천시 지역돌봄공동체 기반 마련	기존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3-4-3. 가구 특성별 맞춤형 돌봄 강화		① 인천맘센터 설립	신규
			② 다양한 양육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기존
			③ 영유아 돌봄공간 활용의 다각화	확대
	3-5. 돌봄종사자 지원 기반 마련	3-5-1 돌봄종사자 지원기반 제공	① 돌봄노동 통계 및 현황자료 생산 및 관리(직업유형별)	확대
			②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확대
			③ 돌봄 종사자 지원 거점기관 마련	신규
			④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 및 서비스 지원	신규
4.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기반 및 환경 조성	4-1-1.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①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공모 및 활동	확대
			②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추방주간 행사 추진	확대
		4-1-2.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확대
			②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기존
		4-1-3. 안전 환경 조성	① 여성폭력 대응기관 시설안전 평가	확대
			② 인천형 안심지킴이 확대	확대
			③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및 운영 점검	확대
			④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의 안전 환경 구축	신규
	4-2. 신종 여성폭력 대응 및 폭력 취약계층 지원 강화	4-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확대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정기 점검 강화	신규
			③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확대	신규
			④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지속	확대
		4-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①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신규
			②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기존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4-2. 신중 여성폭력 대응 및 폭력 취약계층 지원 강화	4-2-3. 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신규
			①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기존
			②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확대
			③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신규
		4-2-4.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①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②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기존
			③ 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기존
		4-2-5.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대응 지원	①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 지원	기존
			② 이주여성 폭력예방 전문강사 및 통역사 양성 및 파견	기존
			③ 이주여성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기존
			④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기존
	4-3. 여성폭력피해 지원 체계 강화	4-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지원	확대
			②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확대
			③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확대
			④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4-3-2.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① 여성폭력 대응 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폭력 대응 교육	기존
			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확대
			③ 기관 종사자 트라우마 및 소진 방지 상담 지원	신규
			④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보험 지원	신규
	4-4. 성인지적 건강정책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4-4-1. 제도적 기반 및 공공성 강화	①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신규
			②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신규
		4-4-2. 청소년의	①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 및 캠페인	신규

정책과제(대)	정책과제(중)	정책과제(소)	세부과제	사업유형
		건강 증진	②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및 안전한 피임정보 제공	확대
			③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대
		4-4-3. 모·부성 보호의 다각화	①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확대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확대
			③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나. 주요 핵심과제

<표 V-3>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점검 및 확산 ▶ 지역여성사 자료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양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제고 ▶ 양성평등기금 확대 및 운용 활성화 ▶ 성인지 예결산 제도 내실화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동권의 지원기능 강화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발굴 ▶ 초등생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 개선 ▶ 여성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 난임부부 및 다양한 계층의 산전 후 건강관리 지원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VI. 정책과제

1.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2.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3.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4.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1.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1영역 현황 및 수요

- 인천이 성불평등하다는 시민의 의식 지속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22)에 응한 인천시민의 27.2%만이 인천시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천 남성의 37.3%, 인천 여성의 67.4%가 여성이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대답하였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았다.
-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 필요 :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모두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SNS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응답 청소년의 79.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여성 83.0%, 남성 76.2%),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차별 표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73.1%로 나타났다(『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22)).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 큼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는 중장년보다는 청년층이 더 성별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적 부양책임’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고(20대 49.4%, 30대 53.5%, 40대 61.3%, 50대 69.7%, 60대 이상 75.1%)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부정하는 것으로(여성 44%, 남성 31.4%)나타났다.
- 성평등 교육 못 받았으나 필요성 느낌 : 인천시민의 50%(여성 55.9%, 남성 44.2%)가 성평등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그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20대 37.1%, 30대 44.2%, 40대 49.7%, 50대 53.9%, 60대 이상 63.7%). 50대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민의 90% 이상이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 시민이 뽑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24.8%)’, ‘고용상 성차별(17.6%)’, ‘가사 및 육아, 돌봄에서의 남성의 낮은 참여(12.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방안과 임금, 승진 등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추진 중인 양성평등정책의 중요도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순서는 ‘여성폭력 근절(70.8%)’, ‘평등하게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68.2%)’, ‘남녀 모두 일·생활 균형 기반조성(67.8%)’, ‘돌봄 공공성 강화(67.8%)’ 이다.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으나 만족도는 보통 :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인천 성인 남성(59.4%)보다 성인 여성(70.4%)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청소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모두 절반 정도만이 관심을 보였다. 한편 기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에서 추진되는 양성평등 문화행사와 지역 정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양성평등기금 확대 및 운용 활성화 : 인천의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는 2021년 기준 48억 원이다.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업비의 규모는 2020년까지 1억 원, 2021년 2억 원으로 매우 협소하다. 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과 민간 주도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기금 조성 및 사용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10억 원 내외의 집행액을 운용하고 있다.
- 지방자치활동에 참여의향 증가 :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22) 결과에 의하면, 지방의회, 시군구 주최 위원회, 공청회, 모니터링 활동 등 정책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8.3%(2018년)→26.2%(2022년)). 참여 욕구가 있는 시민 대상의 정책 모니터링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통해 젠더 리더십 함양, 여성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VI-1> 지방자치(의회, 위원회, 공청회 등) 참여 활동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

구 분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차(2018년도)	6.6	93.5	18.3	80.4
2차(2022년도)	12.1	87.9	26.2	73.8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 성인 대상 응답비율임. 사례수 2018년(2000명), 2022년(2256명).

- **성평등 도시조성을 위한 시·군구 간 연계 강화** : 2022년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 중 5개 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생활단위인 군구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서 (미)지정 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발굴 및 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
- **행정 및 공공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 필요** : 인천시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시 위원회 위촉직 여성의원 비율은 증가추세이나 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매우 낮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주요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표 VI-2> 인천 여성 공무원 및 시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계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천 2020	전체	13,478	2	1	6	28	207	1,098	3,712	3,775	1,754	2,327
	여성 (49.4%)	6,662				2	25	275	1,670	1,955	1,089	1,403
인천 2021	전체	13,994	2		7	23	215	1,101	3,870	3,785	2,455	1,940
	여성 (51.3%)	7,175				1	34	342	1,832	2,025	1,517	1,163
전국(2021)		301,930 (145,379)		0	5	29	370	4,079	34,158	39,133	28,257	23,167
서울		46,651 (24,089)			3	5	85	669	4,971	7,167	5,040	3,522
부산		17,007 (9,158)				1	39	442	2,328	2,614	1,879	1,079
대구		11,218 (5,389)			1	1	17	183	1,208	1,532	1,093	816
광주		7,688 (3,681)				5	20	180	834	1,012	778	632
대전		6,949 (3,367)				1	10	133	847	966	597	422
울산		5,846 (2,923)				3	13	164	660	874	552	333
세종		1,840 (861)					6	61	171	217	170	136

출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1.12.31.기준)

주1 : 4급 이상 여성 비율은 각 연도 전체 현원 중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주2 : 각 급 현원은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포함 인원, 전국(2021) 수치 중 괄호는 여성공무원 인원임

- **정치적 대표성 개선 필요** : 인천광역시의회 여성 의원은 전체 40명 중 7명 (17.5%)이며 선출직의 경우 36명 중 5명(13.9%)에 불과하다.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은 전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 여성 비율은 2018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VI-3>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대표성(6~8회/인천, 전국 비교)

단위: %

	6회 지방선거(2014)		7회 지방선거(2018)		8회 지방선거(2022)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시도지사	0.0	0.0	0.0	0.0	0.0	0.0
구시군의 장	10.0	4.0	0.0	3.5	0.0	3.1
시도의원	3.2	8.2	0.0	13.3	13.9	14.8
구시군의원	25.9	25.3	39.8	30.8	32.4	25.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선거 당해 선출직 기준

1영역 정책과제

1.1. 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1.1.1.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성평등 교육

□ 목적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성평등 교육의 대상 확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차별 언어 및 성고정관념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보육 및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제고 및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및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보육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 보육교사 및 교직원(관리자 포함) 보수교육에 성평등 교육 포함
 - 성평등 교육 교재 및 매뉴얼 배포, 교육 이수 지표 개발
 - 양성평등 교육 이수 지표를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 검토
-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 기관 종사자 성평등 교육과정 운영
 - 기관 종사자 간 사례공유 등 교류협력을 통한 감수성 고양 기회 제공
 - 종사자, 교육자(기관 관리자 포함)를 위한 성평등 교육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보육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성인지 교육),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1.2. 성평등 문화확산

1.2.1.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 목적

-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에 대한 관심 제고
- 다양한 양성평등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 내용

■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 양성평등 기념행사 기획, 전시, 공모전 등 프로그램 지원
- 여성단체 공모전 작품 전시, 공연 등 시민참여 행사 다양화
- 평등상, 다양한 가족상 등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시상 지속
- 양성평등 기념행사의 시민 체감적 홍보 강화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기념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 국내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1898.9.1.)로서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여성의 직업권, 교육권 등 여성인권 관심 제고
 - * 「양성평등기본법」(2019.10.31) 개정 이후 법정기념일로 지정
-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 기획 및 홍보 필요

■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 매년 3월 8일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의 행사 지원
- 매년 시행되는 국제적인 행사내용을 공유하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 확인
-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 기획 및 홍보 필요

■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지원

- 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 선정 및 상영, 관객과의 대화
- 영화제를 찾는 시민 관객 참여 프로그램 홍보
- 군구 및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 등 운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제57조(인천광역시 여성상)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2조(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1.2.2.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 목적

- 미디어의 성폭력, 성차별적 표현, 외모차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비판의식 함양
- 지역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 광고 등 대중매체와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하고 유통되는 성차별 및 성폭력의 내용을 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 조성
- 시민의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성평등 감수성과 의식 고양

□ 사업 내용

- 시민 성차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강화
 - 지역신문, 방송, 지하철 및 버스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시민 모니터링단의 교육 및 활동 지원 : 일반/심화교육 및 활동비 지원
 -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성차별 모니터링단의 교육과 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 교육 지원
- 지역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점검 및 확산
 - 모니터링 결과취합,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대중매체 감시체계 운영
 - 점검결과를 시민과 공유, 홍보, 확산하는 방안 마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언론기관(방송사 및 신문사),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성차별 모니터링단(시민/청소년) 활동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지역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점검 및 확산*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 금지),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1.2.3. 디지털 시민성 함양

□ 목적

- 정보화 기술의 이용 능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해 비판의식을 지닌 시민 양성

□ 사업 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성차별, 성폭력, 성인권에 관한 ‘성평등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 실시
- 시민 대상의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성’ 등 관련 강좌 개설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인재개발원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인천사이버시민교육센터, 주민센터,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시민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차별의 금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방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1.2.4. 지역여성 문화유산 발굴 및 확산

□ 목적

-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을 발굴, 복원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정체성 구성에 기여
- 역사 속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위상 제고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여성사와 여성문화를 시민이 손쉽게 접할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 지역여성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 인천시 관련 기관, 단체와의 TFT 구성하여 공동연구 추진
- 지역여성사, 여성 인물에 대한 발간 및 확산, 아카이빙 구축
- 지역여성사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초·중·고등학생 대상 여성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성평등교육 안에서)
 - 여성사를 포함한 시민강좌 등 운영
 - 여성 인물과 유적지를 활용한 탐방로 등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여성 인물과 유적지를 활용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교육청, 인천시 군구청, 인천시 역사자료관,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 시민단체,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지역여성 역사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지역여성사 발간 및 확산, 아카이빙 구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지역여성사 교육/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1.3. 성평등정책 추진환경 정비

1.3.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목적

- 성평등정책 추진부서의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 성평등정책 결정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 책무성 제고 및 분과 활성화
-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 인천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
- 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사업 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책무성 제고
 - 양성평등위원회의 실행을 위한 행정력 강화
 - 자문과 심의기구 역할 외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고하는 등 역할 강화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부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등 방안 마련
 - 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이행점검 실시
 - 양성평등위원회 혹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년차에 지난 2년간의 시정전반 혹은 성평등정책 점검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재정비
 - 인천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및 연구 지원
 - 집중과 성과향상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 인천여성가족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2024~2028) 추진 강화
-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구 연계 강화
 - 여성친화도시 지정/미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 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
 - 군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양성평등위원회의 책무성 제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계획수립	연구/조사	시행	시행	시행
③ 인천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구 연계강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34조(기능), 제35조(구성),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1.3.2. 양성평등 기금 운용 활성화

□ 목적

- 성평등 기금 운용 활성화를 통해 정책 전반 성주류화 실행
- 기금 사용 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기금 운영 내실화

□ 사업 내용

-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 확대
-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젠더전문가 검토 의무화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에 기금 사용 확대
 -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대상 운영·교육·재정 지원 확대

-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

- 1차 종합계획 기간 중에 사용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평가
- 기금 확대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전 부서,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 확대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효율적 운영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연구/조사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 조치)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1조(기금의 관리·운용)

1.3.3.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

- 목적

- 성주류화 도구의 효율적인 운영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한 관점을 시정 전반에 반영

- 성인지 예·결산 집행 실적 비교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 점검
- 성평등 정책의 기초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 구현
-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강화

□ 사업 내용

-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과제담당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 매년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수행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 공유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와 성인지 결산 집행실적 비교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
 -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지표의 산출 평가의 적절성 검토
 - 성인지 예·결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성인지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성인지 예산 실무 지침서 마련
 - 정기적인 인천시 성인지 예·결산 분석 연구
-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 정책 분야별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 인천시 전 부서에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천시 전 부서의 성별통계 작성을 점검, 관리하는 업무담당자 지정
 - 조례에 명시하거나 전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 또는 문서의 사전검토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

■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 기관장 및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교육(해당기관 교육부서)
-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시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예산담당관실, 회계담당관실, 데이터혁신담당관실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재개발원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 강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9조(성인지 통계 등),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제13조(성인지 교육)

1.4.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1.4.1.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 목적

- 인천시 의원의 성인지 관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성주류화 실현
- 인천시 여성의원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의 장 마련

□ 사업 내용

-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평등 교육
 -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의원 성주류화 교육 교안 등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의원 성주류화 교육 실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속
-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 연 2회 개최
 -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간 네트워크 교류, 공동의제 발굴 및 대응
 -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관심 제고 및 제도 확산 방안 논의
- 성인지적 의정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 성인지 관점의 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실시
 - 모니터링단 활동보고회 실시
 - 제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의회사무처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의회 및 군구의회, 여성정책과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평등 교육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인천시의원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성인지적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연구수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참여)

1.4.2. 공공 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목적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율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차별 없는 성평등한 공직 문화 조성
-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율 제고

□ 사업 내용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30%)
 -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차년도 계획과의 유연한 연동 계획 운영
 - *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매년 초 남은 연도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인천시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의 직급별 보직 현황 조사, 부서별 임용 확대

-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계획 마련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의제의 공론화 및 목표설정(30%)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임원 및 중간관리직의 현황 조사 및 확대 계획 수립
 - 기관 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 공공기관 위원회 여성 비율 조사 및 위촉직 비율 준수(법정 40%)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인사과, 여성정책과, 재정관리담당관실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공공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4급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30%)	계획수립	목표설정 시행	목표설정 시행	목표설정 시행	목표설정 시행
② 주요부서의 여성 임용 기회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30%)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1.4.3. 여성시민 역량강화

□ 목적

- 지역의 여성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 지원
- 발굴된 여성인재의 위원 추천 등 적극적인 활용 강화
- 읍·면·동 단위 여성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사업 내용

-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 내실화
 - 여성인재 등록인원뿐 아니라 활용횟수에 대한 집계 및 관리
 - 인천시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 활성화
 - 분야별 DB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여성인재 정보 활용방안 마련 : 위원회 등 여성인재 추천
-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주민교육 사업지원
 - 소규모 공동체 마을활동에 대한 운영 및 재정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시민단체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 내실화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2.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2.1.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조성

- 2-1-1. 고용기회의 성평등 제고
- 2-1-2.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 2-1-3. 성별임금격차해소
- 2-1-4.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2.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 2-2-1.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응
- 2-2-2.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 2-2-3. 취약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 2-2-4.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활성화 지원

2영역 현황 및 수요

- 인천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는 중상위권 :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지역성평등지수는 줄곧 중하위권에 위치하다 2020년 한 단계 상승하여 중상위권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지수 점수는 75.4이고 17개 지역 중 8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2015년과 비교하여 인천광역시는 7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에 비해 개선 성과가 가시적임.

<표 VI-4> 인천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6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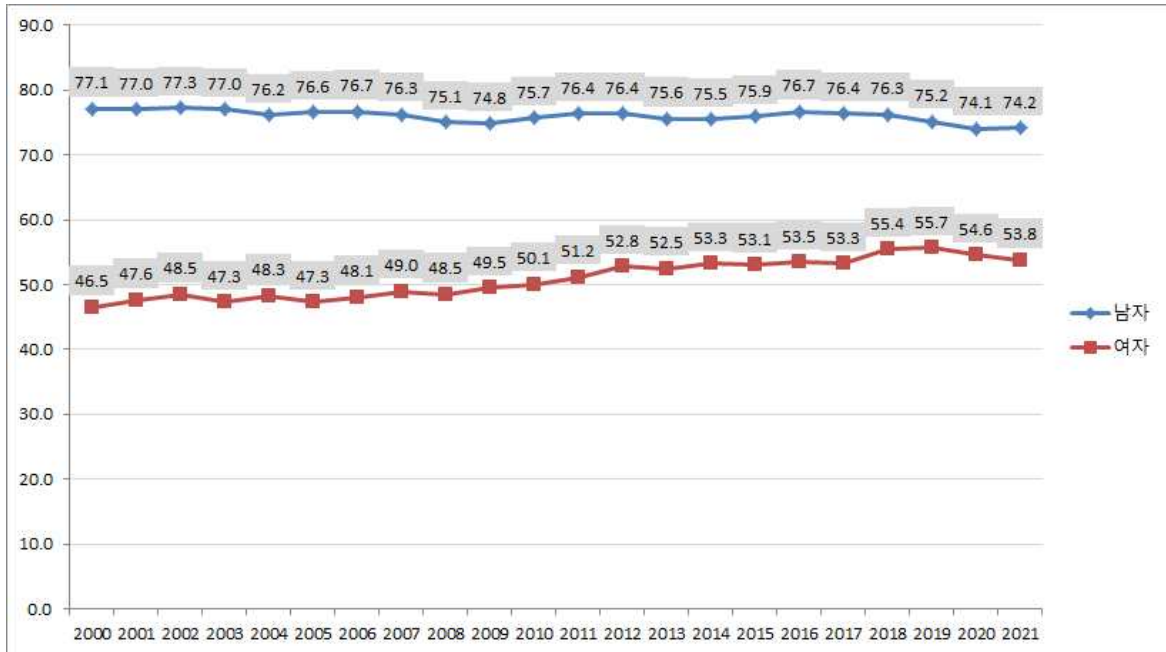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경제활동 분야 평균 점수	순위
2020	77.0	65.6	83.4	75.4	8
2019	77.0	65.0	84.3	75.4	7
2018	76.2	63.8	83.2	74.4	6
2017	74.9	61.5	80.8	72.4	7
2016	71.5	60.8	75.5	69.3	13

출처 : 주재선 외(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85쪽.

- 인천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 개선 성과 : 2016년~2020년간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6년 71.5에서 2020년 77.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개선되었음.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2016년 60.8에서 2020년 65.6으로 4.8p 상승하였음.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의 경우, 2016년 7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84.3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간 낮아진 83.4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지난 5년 동안 3개 지표 모두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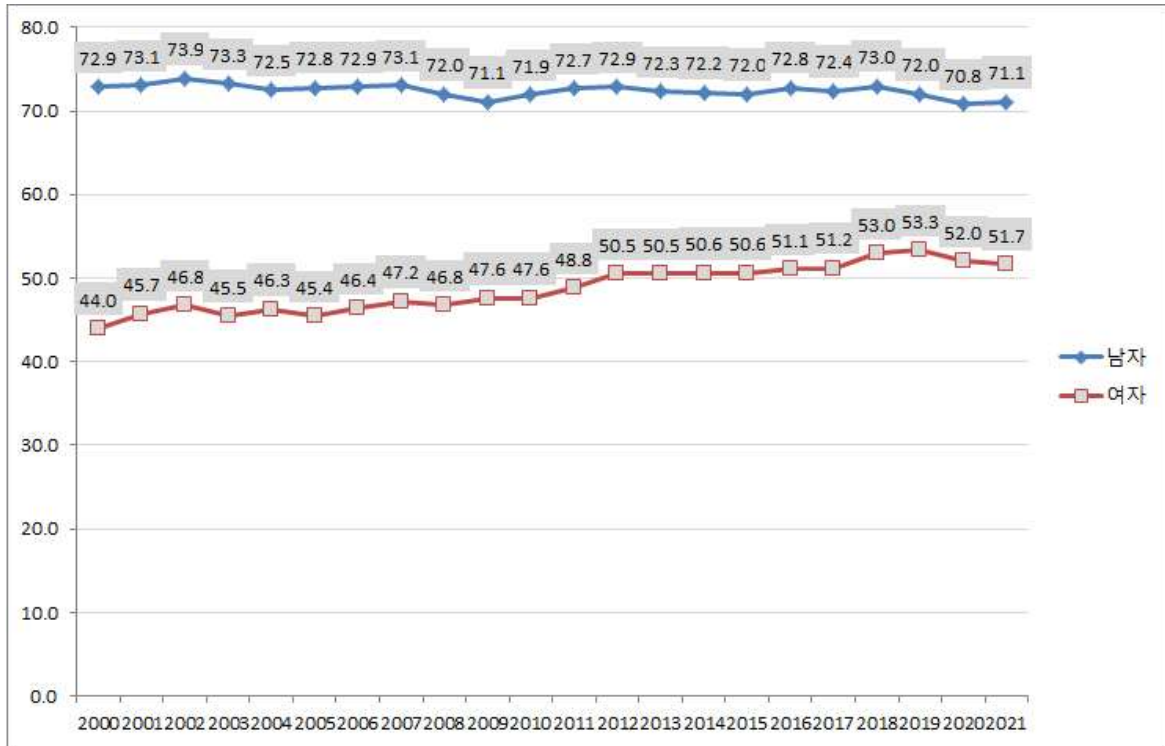
[그림 VI-1] 인천광역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0년~2021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2021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8%,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2%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하락하였고 2021년 남성의 참가율 하락은 멈췄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줄어들었음.

[그림 VI-2] 인천광역시 성별 고용률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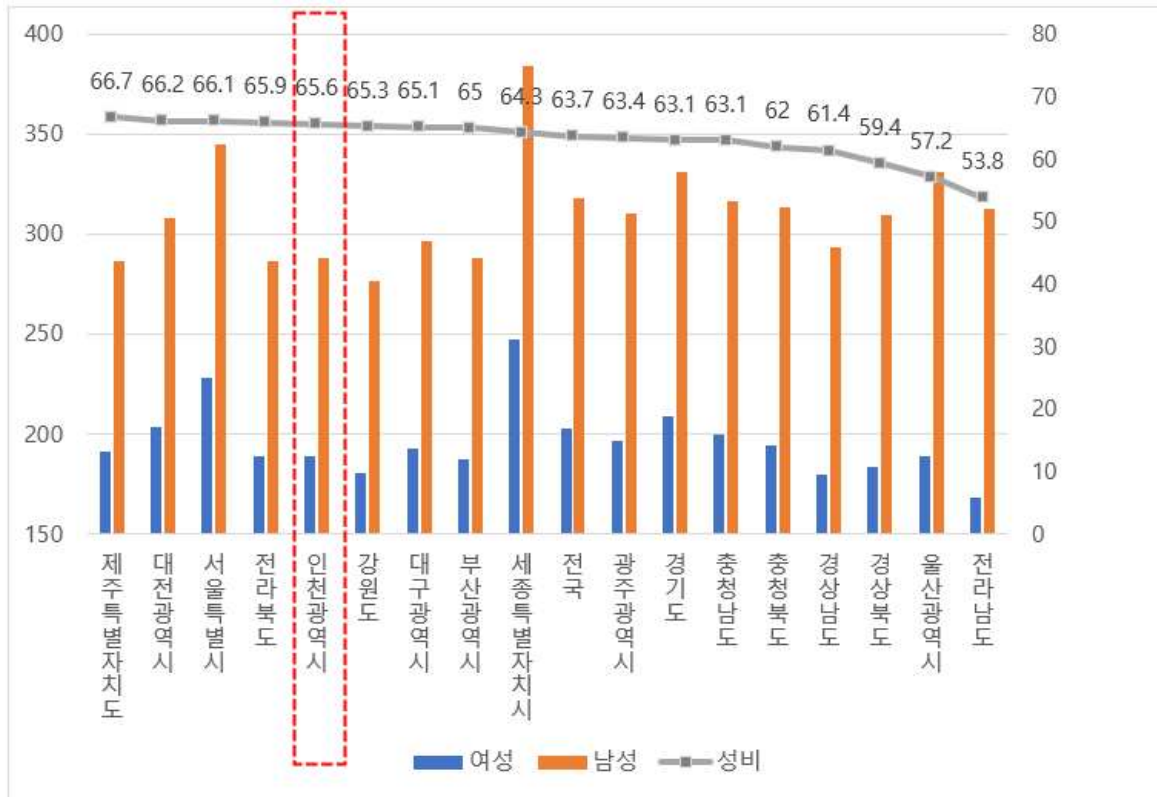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인천 고용률 성별격차 지속** : 고용률의 경우 성별 간 격차는 20여 년 동안 줄어들었지만, 최근 5년간 20%p 내외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남성 고용률이 71.1%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1.7%로 남성 고용률에 비해 약 19.4%p 낮은 수준임.

[그림 VI-3] 2020년 하반기 전국지자체 임금 성별비교

단위: 만원(좌측), %(우측)



주 : 1)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임금

2) 임금 격차=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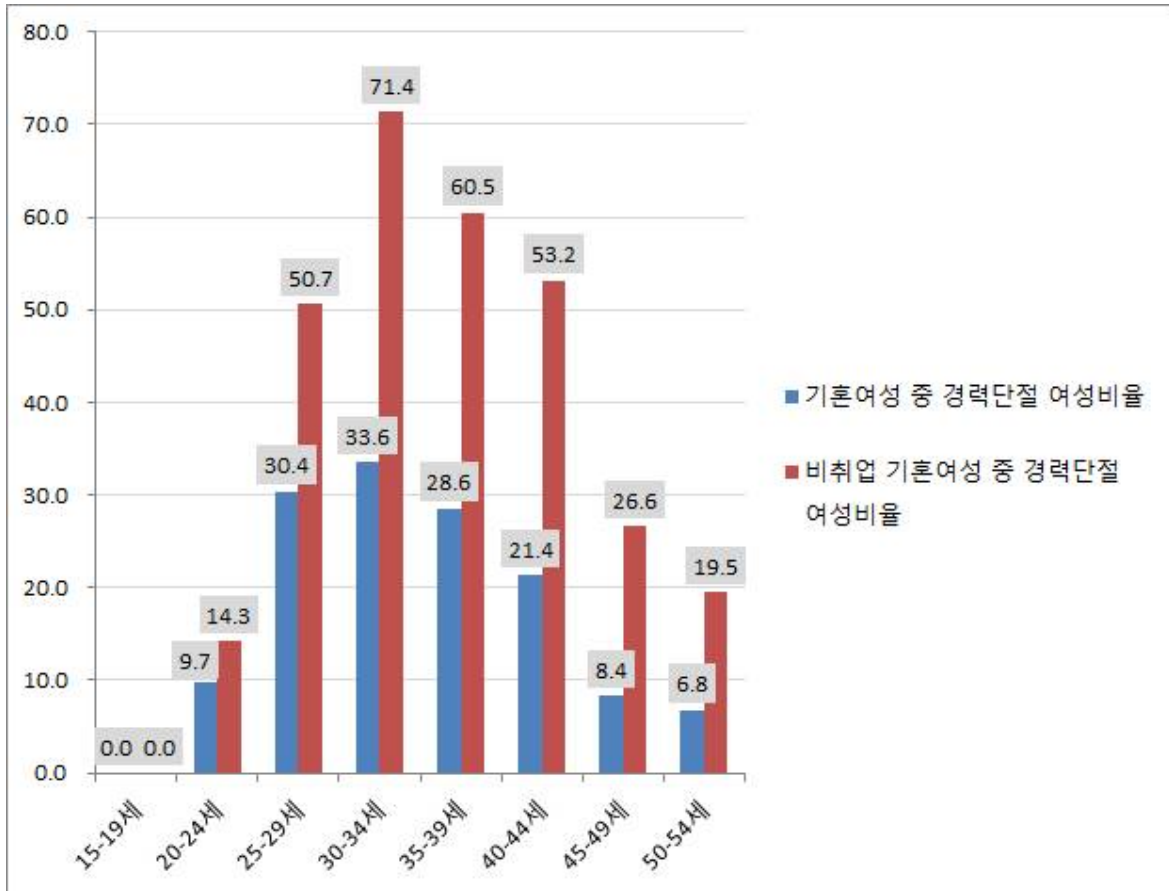
3)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인천 성별 임금격차 감소 : 인천의 성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2020년 하반기 기준 17개 시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여성 임금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인천지역 남성의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임(정승화 외, 2022: 127)

-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약 288만 원이고 여성이 약 189만 원으로, 약 100만 원 가량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낮았음
-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30대 후반부터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50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짐

[그림 VI-4] 2020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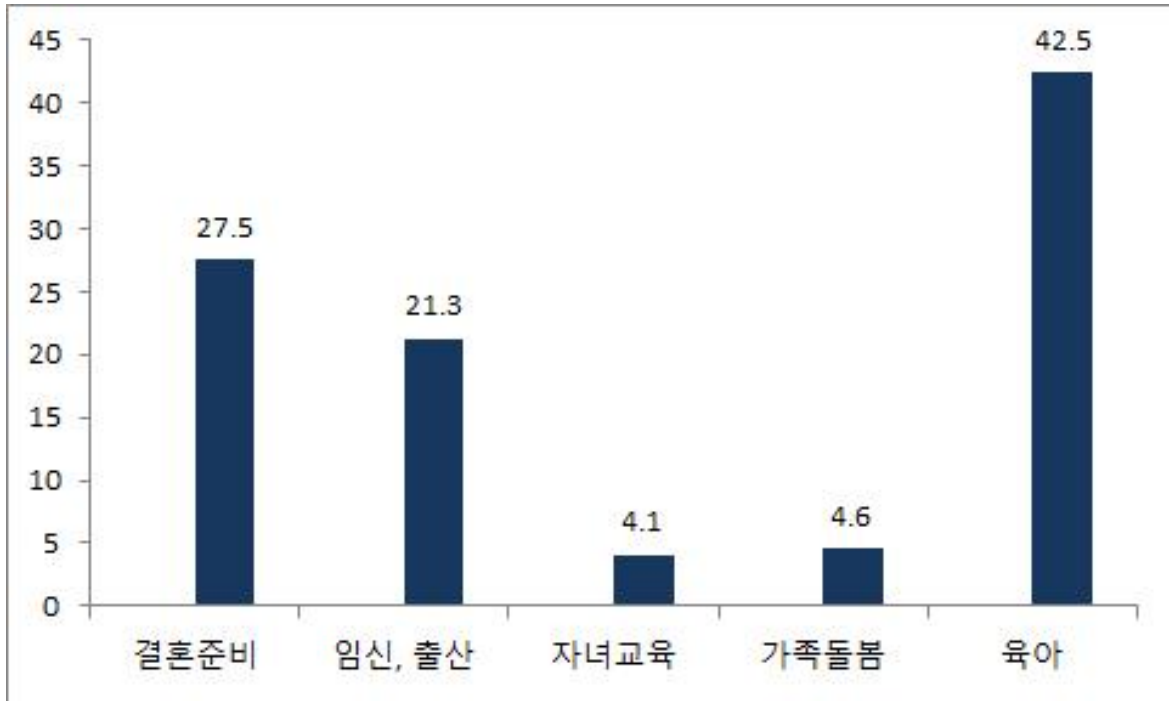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DB

주 : 경력단절여성이란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함

- **20~30대 기혼여성 삼분의 일 경력단절** : 2020년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71.4%로 가장 높았으며, 35~39세가 60.5%로 그다음으로 높았고 40~44세가 53.2%, 205~29세가 50.7%순이었음. 2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기혼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30% 내외로, 20대와 30대 기혼여성의 약 삼분의 일 정도가 경력단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가 가장 높음** : 2020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2.4%로 가장 높았고 결혼 준비가 27.5%, 임신·출산이 21.3%였음.

[그림 VI-5] 2020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DB

주 : 경력단절여성이란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함

<표 VI-5>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추이 (2016~2020)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연도	평균 교육년수 격차(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 점수	순위
2020	91.6	100.0	95.8	3
2019	91.4	100.0	95.7	3
2018	91.2	100.0	95.6	3
2017	91.0	100.0	95.5	3
2016	90.8	100.0	95.4	4

출처 : 주재선 외(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85쪽

- 인천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수 상위권 :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95.4로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100.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인천은 평균교육년수 성비가 높아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인천 여학생 대학 진학률 남성보다 높음** : 인천광역시 남학생, 여학생의 2019년도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1.3%,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6.0%로 여학생이 5.3%p 높았음. 2007년 이래 인천광역시는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VI-6> 인천광역시 대학 진학률 추이(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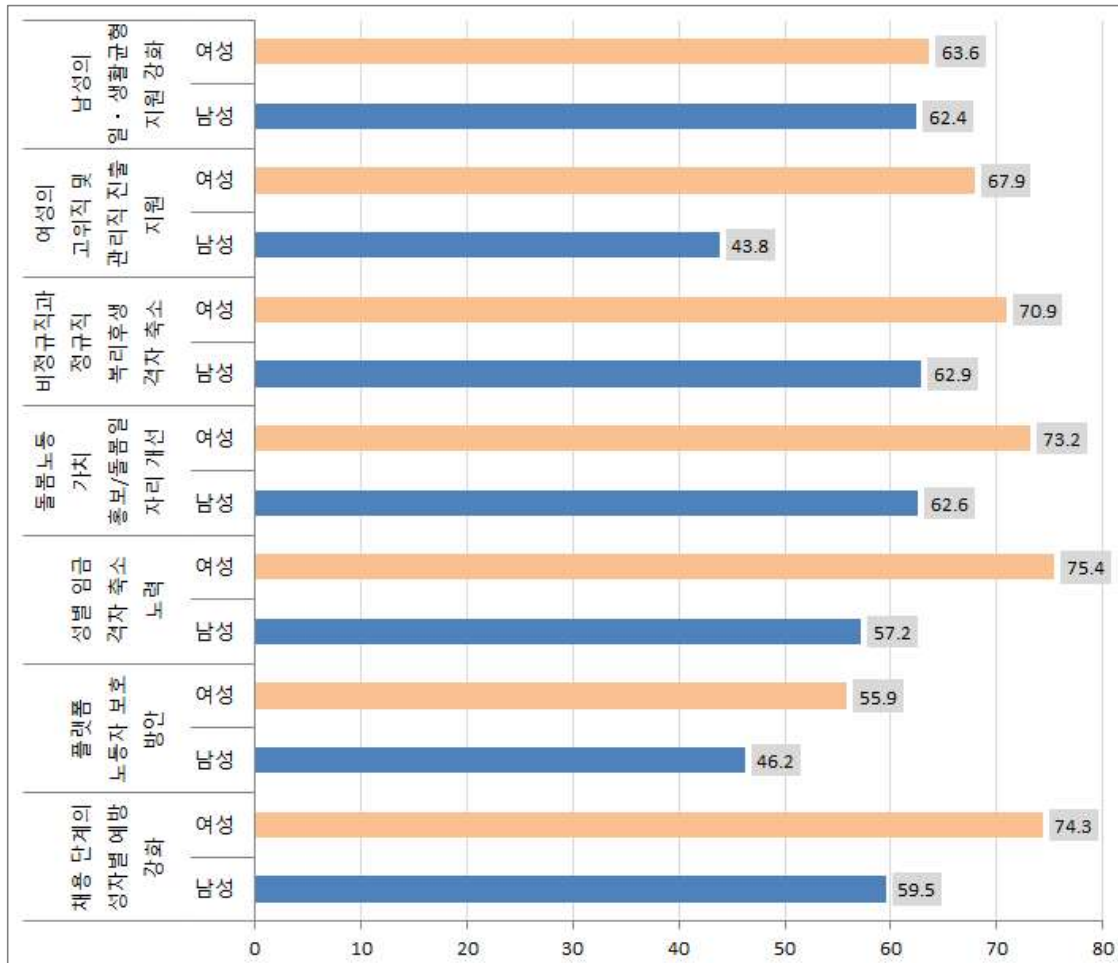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전체	여자	남자
2019	68.6	71.3	66.0
2018	67.1	68.2	66.0
2017	65.4	67.8	63.2
2016	66.0	67.8	64.2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 교육통계연보

-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필요** : 2020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으로 나타남(정승화 외, 2021: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보육교사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 관련 직종이 많고 이러한 돌봄일자리는 저임금의 여성 집중 직종이어서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별 직종 분리 개선 필요** : 성평등 노동환경조성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과 함께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성별 임금격차는 성별 직무분리와 성별직종분리,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임.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문 분야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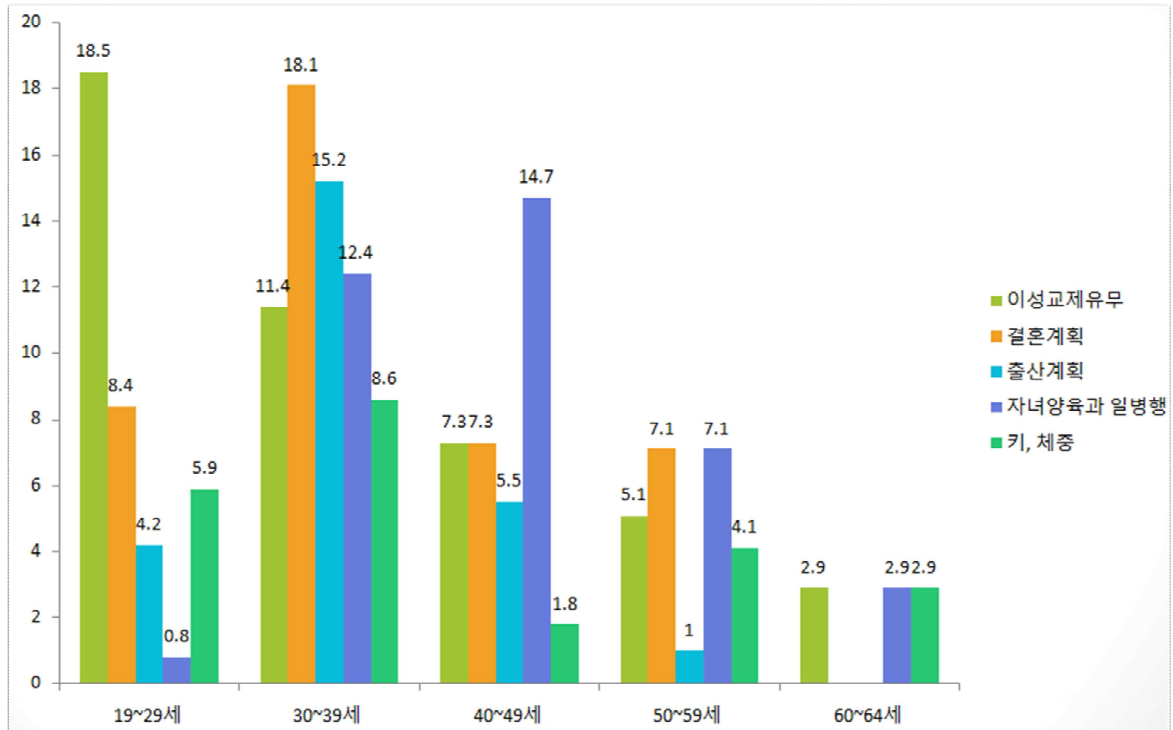
[그림 VI-6]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노동 분야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성시민의 정책 요구도 : 여성들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 축소 노력(75.4%)이 가장 높았고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예방 강화(74.2%)와 돌봄노동 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73.2%)이 70% 이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음.
- 인천광역시 노동 분야 추진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남성시민의 정책 요구도 : 남성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리후생 격차 축소(62.9%), 돌봄노동 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62.6%), 남성의 일·생활 균형 강화(62.4%)순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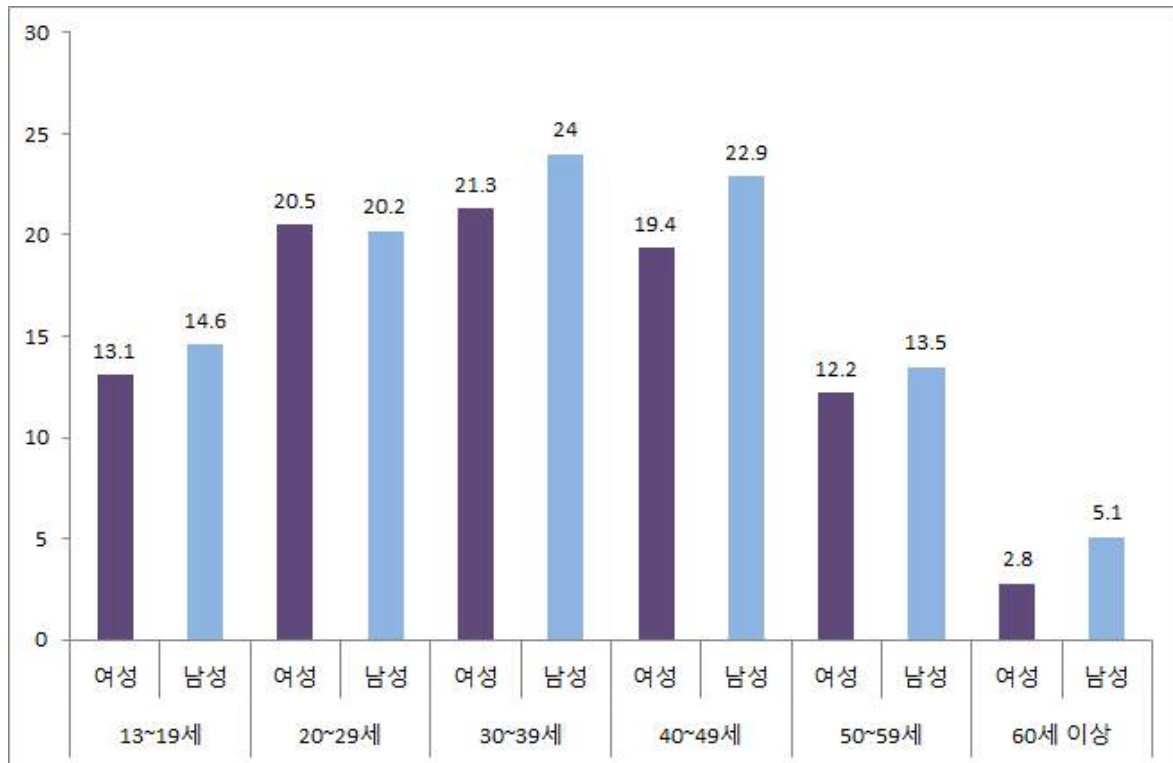
[그림 VI-7] 인천광역시 여성노동자 연령별 채용 시 경험한 차별적 질문



자료: 2021년 인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필요** : 인천광역시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 시 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 20대 여성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 질문받은 경우가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은 결혼계획이나 출산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받은 경우가 많았음. 40대 이상에서는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함(정승화 외, 2021: 11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필요** : 2021년 인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13.5%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16.5%가 타인의 피해를 보고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정승화 외, 2021: 121~122). 직장내 성희롱은 청년여성의 이직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성평등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그림 VI-8] 2019년 인천광역시 연령별 창업의사 있음 비율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창업지원 정책 활성화** : 인천사회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인천지역 여성과 남성은 창업의향은 여성은 14.0%이고 남성은 16.5%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20대의 경우에는 여성(20.5%)이 남성(20.2%)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김미선 외, 2020: 332).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직장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여성들은 창업을 선택하기도 함. 여성창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영역 정책과제

2.1.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조성

1.1.1. 고용기회의 성평등 제고

□ 목적

- 채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 대상 성평등 인식제고
- 성별 직종분리 개선을 통한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 사업 내용

- 성평등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기관 인사 관리자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별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 채용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개선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광역새일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성평등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성별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성인지 교육),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2.1.2.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 목적

-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지원
- 성인지 관점에서 성평등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일자리 및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사업 내용

- 인천 여성노동권의 지원기능 강화
 - 일·생활균형센터와 새일센터의 노동권익기능 확대

- 행정체계 개편: 여성일자리와 성평등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팀) 신설
 -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일자리·노동정책과 일·생활 균형지원의 통합적 지원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의회, 인천여성가족재단, 노동정책과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노동권의 지원기능 강화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성평등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 민간단체 위탁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3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2.1.3. 성별임금격차 해소

□ 목적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 공공부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민간분야 성별임금격차해소 견인

□ 사업 내용

-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 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점검
 -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설명 및 도입 안내
 -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방안 마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재정관리담당관, 인천시의회,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 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연구조사/ 조례제정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8조(성인지 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성인지 예산), 제11조(성인지 교육)

2.1.4.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 목적

- 직장 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 실효성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개발
 -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방안 모색
-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직장 고충처리 담당자 직무향상 교육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점검 및 피해자 지원 절차 규정 점검
 - 직장문화 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노동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시행	시행	점검	시행	시행
②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소규모 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2.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2.2.1.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응

□ 목적

-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양성을 통한 여성 고용 확대
- 여성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 친화기업 육성 및 여성 고용 증대

□ 사업내용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지원
- 여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 여성 창업 확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수요 파악
 - 여성 창업 확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전략산업과, 투자창업과, 사회적경제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 지원	계획수립	시행	점검	시행	시행
② 여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계획수립	시행	점검	시행	시행
③ 지역공동체형 여성창업 지원	계획수립	시행	점검	시행	시행
④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수립	시행	점검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10조 교육·배치등 승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3조(경제활동 지원 등)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2.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목적

-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여성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

□ 사업 내용

- 인력 및 기술 수요 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 인천지역 기업 대상 여성인력 수요 파악
 - 지역산업과 연계된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여성 기술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새로일하기센터 내 청년여성 대상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경제정책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력 및 기술 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 교육훈련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수립	연구조사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10조(교육·배치등 승진)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3조(경제활동 지원 등)

2.2.3. 취약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 목적

- 시간제 및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근로자 권익 보호
-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노인여성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 욕구를 파악하고 세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운영

□ 사업 내용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및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근무환경 조사
 -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파악
-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 고령화사회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범위 확대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및 특수고용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계획수립	연구조사	점검	계획수립	연구조사
②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2.2.4.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활성화 지원

□ 목적

-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경력단절 예방사업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전문 역량 제고 지원
 - 인천지역 새일센터 공동 사업 추진 :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공동 홍보, 유관 협회 네트워크 보강 등
 - 새일센터별 인턴연계사업장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공동 추진 : 여성고용 우수기업 연계
- 경력단절 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 여성근로자 고충 상담지원 확대

- 직장 내 고충(노무), 커리어 코칭, 심리 상담, 부모 코칭 실시
- 사업주 및 근로자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실시
 - 지역 내 청년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경제정책과, 창업지원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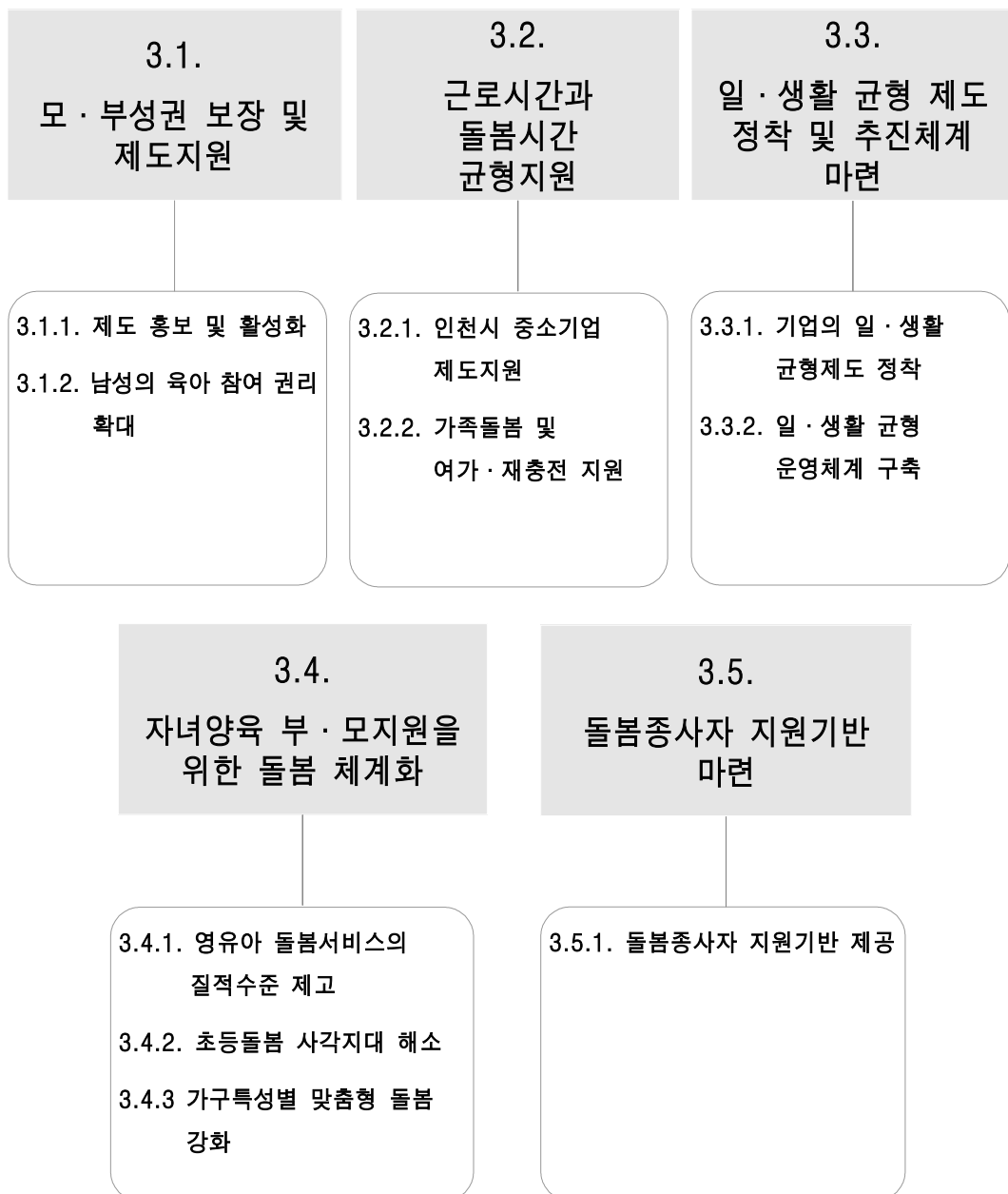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강화 및 전문 역량 제고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경력단절 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조(유망직종 선정, 지원), 제10조(직업교육훈련), 제11조(인턴취업지원), 제12조(경력단절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

3.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3영역 현황 및 수요

- 인천시의 일·생활 균형 지수 하락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와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에서 24개 지표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는데, 전국적으로 대체로 지수점수(전국평균 53.4점)가 향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지수점수는 49.7점으로 전년(50.4점) 대비 0.7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살펴볼 때, 인천시가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지표는 ‘지자체의 관심도’ 지표로서, 전국평균 8점에 비해 5.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의 필요하다.

<표 VI-7> 2020년 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수

단위 : 점

지역	계 (1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평균	53.4	13.7	15.9	15.7	8.0
시	54.5	14.4	16.0	16.6	7.5
도	52.5	13.2	15.9	14.9	8.5
인천	49.7	13.6	15.5	15.0	5.6

출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고용노동부, 2021.12 발표)

- 인천시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저조 :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를 기업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2021년 현재 기업 137개소, 공공기관 50개 총 누계수 18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확산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918개 기업(대기업 520개소, 중소기업 3,317개, 공공기관 1,081개)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홍보되고 있다(e-나라지표 참조).¹¹⁾ 2021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수는 전국(4,918개)에 비해 187개(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11)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검색일:2022.10.20.) 가족친화인증기업체 연도별 현황 자료 참조.

어 전국평균 수치(최소 5.8%/전국17개시도 평균수치)로서의 목표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8> 인천시 가족친화인증기업수 현황

단위: 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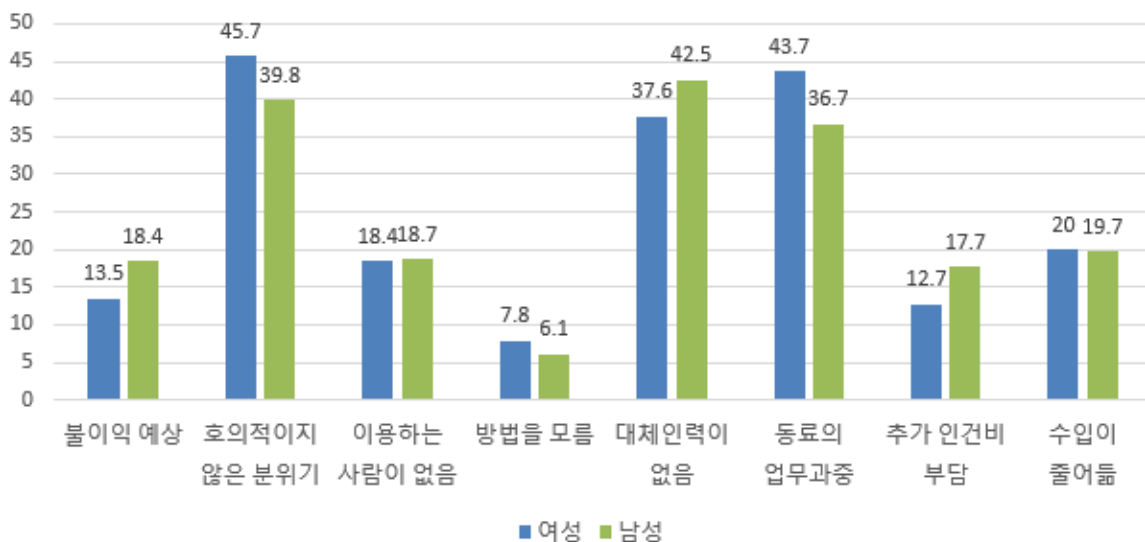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누계 187개	전 체	31	17	27	28	38
	기 업	19	17	23	26	35
	공 공	12	-	4	2	3

출처: 인천시 「2022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p.209 참조

- **제도활용의 어려움 해소의 필요성** : 인천시양성평등 실태조사(2022)에 의하면, 제도의 이용편의성과 관련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1+2순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직장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동료의 업무과중’이 43.7%, ‘대체인력없음’ 37.6%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음’을 42.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분위기’를 39.8%로 꼽았다.

[그림 VI-9]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주된 이유

해당항목 응답자 539명, 단위:%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또는 영세할수록 제도 활용의 어려움 있음 : 응답자의 직장유형별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편의성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소속 응답자의 경우,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공무원 등이 82.7%, 100인 이상 기업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가 있으나, 충분히 이용을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공무원과 100인 이상 기업보다는 100인 이하 기업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모든 제도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I-9> 응답자 직장유형별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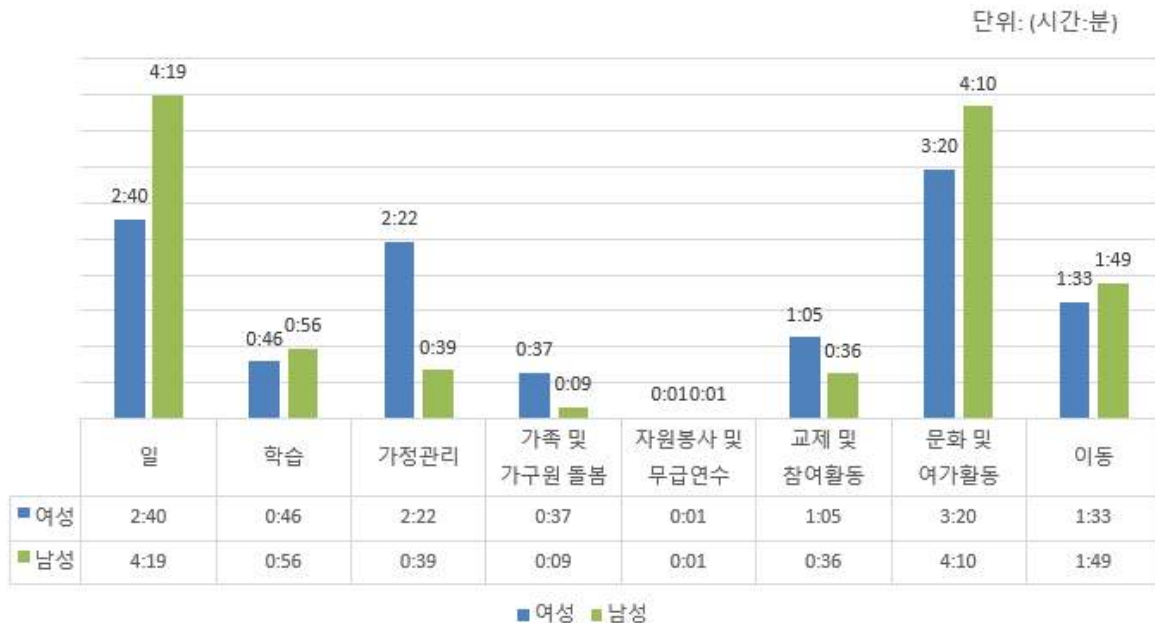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자유 로움	충분 히 이용 못함	이용 못함	자유 로움	충분 히 이용 못함	이용 못함	자유 로움	충분 히 이용 못함	이용 못함	자유 로움	충분 히 이용 못함	이용 못함	자유 로움	충분 히 이용 못함	이용 못함
공무원/공공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82.7	15.4	1.9	84.3	14.5	1.2	74.8	22.5	2.6	73.0	23.6	3.4	72.5	23.4	4.1
100인 이상 기업	65.1	32.8	2.2	63.3	34.2	2.5	61.4	36.4	2.3	62.8	35.6	1.7	64.1	32.6	3.3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38.9	58.9	2.2	39.4	54.1	6.4	40.4	55.8	3.8	43.3	50.0	6.7	34.0	58.5	7.5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55.6	42.0	2.5	62.2	36.7	1.1	68.3	31.7	0.0	62.7	32.8	4.5	73.2	26.8	0.0
5인 미만 사업체	60.4	39.6	0.0	57.1	42.9	0.0	60.8	33.3	5.9	62.8	33.3	3.8	62.7	37.3	0.0
프리랜서 및 기타	68.8	31.3	0.0	57.9	42.1	0.0	66.7	26.7	6.7	62.5	37.5	0.0	47.6	47.6	4.8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시간활용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해소의 필요성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발표된 인천광역시 성별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남성이 ‘일’과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각각 4:19시간과 4:10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여성(2:40시간과 3:20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의 경우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이 각각 2:22시간과 0:37시간인데 비해 남성은 0:39시간과 0:09시간으로 가족내 돌봄시간 사용에 있어 성별격차가 여전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0] 인천광역시 성별 시간사용(2019)*



출처 : Kosis.kr, 원자료: 2019년 생활시간조사 (2020:100)

주 : 그림에서는 개인유지에 사용되는 시간은 제외하였음. 개인유지를 위해 여성은 11:36시간, 남성은 11:2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남성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 인천시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2017년 228명(8.8%)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1,018명(전체 육아휴직자의 25.6%) 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대비 13%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24%로 증가했는데, 인천시 육아휴직자수가 전국보다 남성육아 휴직자수가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전국 육아휴직자수 대비 인천육아휴직자수 비율은 4% 수준이므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저조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는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으로서 육아휴직 이용을 보다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1차 양성평등기본 계획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대상의 모니터링사업을 성과로 잡았다면, 2차에서는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의 사각지대에 해당 되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에 보다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I-10> 육아휴직자 수 현황(전국, 인천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대비 비율('20년)
전 국	전체	90,122	99,199	105,165	112,038	
	여성	78,080	81,537	82,868	84,617	
	남성	12,042 (13%)	17,662 (18%)	22,297 (21%)	27,421 (24%)	(100%)
인천시	전체	2,563	2,954	3,498	3,982	
	여성	2,335	2,543	2,790	2,964	
	남성	228 (8.8%)	411 (13.9%)	708 (20.2%)	1,018 (25.6%)	(4%)

출처 : 원자료는 고용보험DB 인용, 한국고용정보원(2022), 고용동향 브리프 p.3 인용,
인천시 자료는 인천시 「2022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p.209 참조

- **일·생활 균형 전달체계의 필요성** : 1차 인천시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는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구축’(4.1.1)을 위해 ‘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2018년도에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과 일·생활 균형 사업지원 전달체계를 위한 설립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고, 2차계획에서 제안하는 일·생활 균형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관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을 선도해 나갈 전담부서와 기관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일·생활 균형 정책중요도** : 인천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정책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모든 정책과제에 대해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7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대체로 5점 이상이었으며, 남정보다는 여성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제도 활용 활성화’ 항목이었으며, 남성(64.5%)보다 여성이 70.5%로 긍정적 응답률(중요하다+매우중요하다)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에서 여성이 69.9%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남성은 59.8%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중요도

단위 : %, 점

정책내용	성별	부정	긍정	평균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제도활용 활성화	여성	7.5	70.8	5.3
	남성	5.2	64.5	5.1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여성	7.3	69.9	5.3
	남성	5.3	59.8	5.0
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다각화	여성	8.7	69.2	5.2
	남성	4.5	63.9	5.1
다양한 가구의 일·생활 균형지원	여성	8.3	66.1	5.1
	남성	5.2	61.9	5.0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강화	여성	7.6	69.1	5.1
	남성	5.9	65.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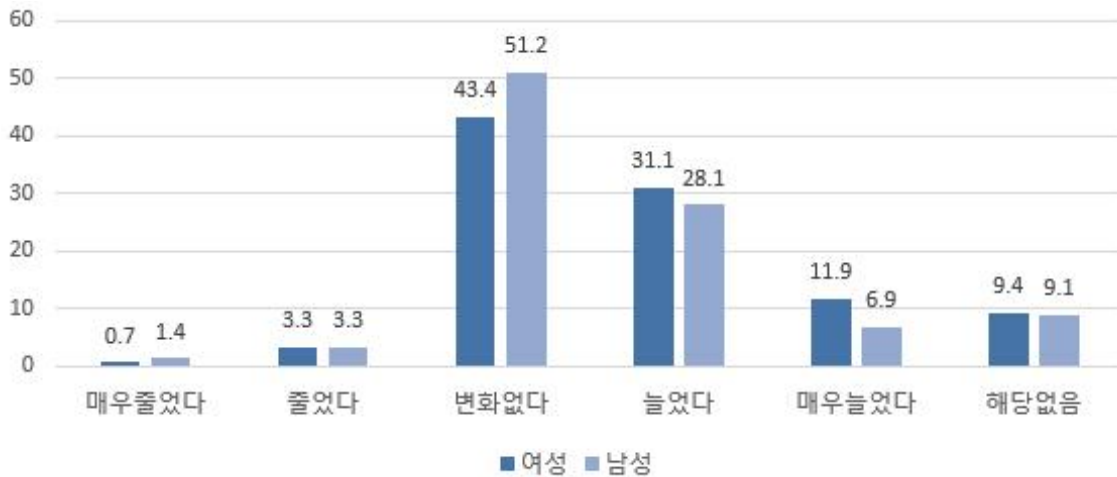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가족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 최근 코로나 위기 이후, 공적돌봄의 기능약화와 돌봄공백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돌봄부담은 돌봄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부담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43.4%로 남성보다 변화를 체감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의 부담이 늘었다(늘었다+매우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35%, 여성이 43.0%로 여성이 남성보다 8.0%p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11]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부담의 변화

단위: %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돌봄서비스 지원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 인천시 시민에게 다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누가 돌보아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아의 경우, 남녀 모두 45% 수준으로 집에서 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유아, 초등저학년은 집과 외부기관에서 함께 돌보거나, 외부기관에서 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장애아동, 장애성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외부기관에서의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집에서 전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고, 외부기관 서비스 지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노인은 외부기관에서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돌보는 주체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성별	집에서 전적으로	집에서 주로, 외부기관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주로, 집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전적으로
영아	남 성	45.7	35.7	15.4	3.2
	여 성	45.8	39.3	11.7	3.2

구 분	성별	집에서 전적으로	집에서 주로, 외부기관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주로, 집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전적으로
유아	남 성	22.4	52.4	21.7	3.4
	여 성	18.1	61.0	19.0	1.8
초등 저학년	남 성	9.3	46.4	38.1	6.2
	여 성	6.6	48.4	40.9	4.2
장애 아동	남 성	7.2	35.2	43.0	14.7
	여 성	4.2	31.9	50.9	12.9
장애 성인	남 성	6.0	24.0	47.2	22.8
	여 성	3.9	21.4	52.7	22.0
거동 불편 노인	남 성	6.2	24.5	43.7	25.6
	여 성	3.8	25.4	46.8	23.9
치매노인	남 성	6.6	20.6	35.0	37.8
	여 성	4.4	20.1	34.7	40.9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관리 필요성** : 제1차 인천시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보육인프라 확충 등 양적 성장을 지향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양적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 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17년)→340개소('22년), 공공형어린이집 50개소('17년)→170개소('22년), 인천형어린이집 124개소('17년)→210개소('22년)로 전체적으로 지난 5년 대비 두 배 이상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5차 인천시 중장기 보육 기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나아가 공급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관점의 틀에서 탈피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협력보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인천광역시, 2022 제 5차 인천시 중장기 보육계획 참조)

-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감소하여 2021.12. 기준 76.5%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내 영유아 보육기관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과 보육종사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아젠다, p.39) 이에 지역사회의 보육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13> 인천시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충족률

단위: 개소, 명, 2021.12.31 기준

구 분	시 설 수		정 원	현 원	충족률	전 년 (동월)
계	1,803	100.0%	84,910	64,961	76.5%	77.4%
국 공 립	256	14.2%	14,823	12,299	83.0%	84.0%
사회복지법인	11	0.6%	1,106	728	65.8%	71.3%
법 인 단 체 등	10	0.6%	990	733	74.0%	79.0%
민 간	637	35.3%	47,352	35,332	74.6%	75.3%
가 정	809	44.9%	15,306	12,713	83.1%	79.5%
부 모 협 동	4	0.2%	180	82	45.6%	55.0%
직 장	76	4.2%	5,120	3,776	73.8%	74.8%

출처: 인천광역시(2022.2),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p.12

-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 교육부 자료(2022학년도 1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현황자료)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초등학생 155,271명 중 학교 돌봄이용자는 12,469명,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이용자는 5,660명으로 돌봄 비율은 초등학생수 대비 11.7%로 나타났다. 「인천성평등아젠다」에 의하면, 인천의 초등자녀를 둔 양육자의 76.1%는 공적 돌봄체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인천여성가족재단, 2022:42),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돌봄의 문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14> 인천광역시 군구별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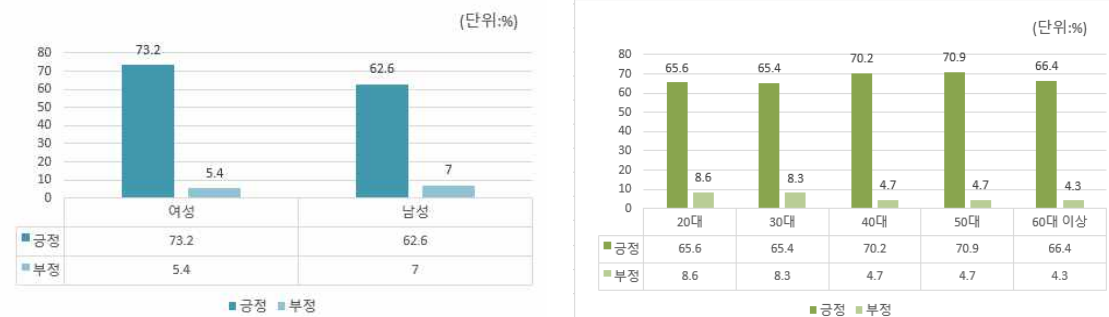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초등학생 수	155,271	8,604	3,371	17,268	25,911	28,231	22,735	13,579	32,698	2,318	556
학교 돌봄	12,469	789	312	1,303	1,849	2,163	1,791	1,029	2,535	606	92
지역사회 돌봄	5,660	123	175	511	499	1,277	966	787	990	273	59
돌봄비율	11.7	10.6	14.4	10.5	9.1	12.2	12.1	13.4	10.8	37.9	27.2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인천성평등아젠다」 p.42 표 재인용

- **돌봄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가 ‘돌봄분야’와 관련하여 ‘돌봄노동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응답이 부정적 응답(별로필요하지 않다+전혀필요하지 않다)에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긍정적 응답이 73.2%로 남성 6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대체로 65%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40대와 50대가 각각 70.2%, 70.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2] 돌봄노동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관련 추진정책의 필요성(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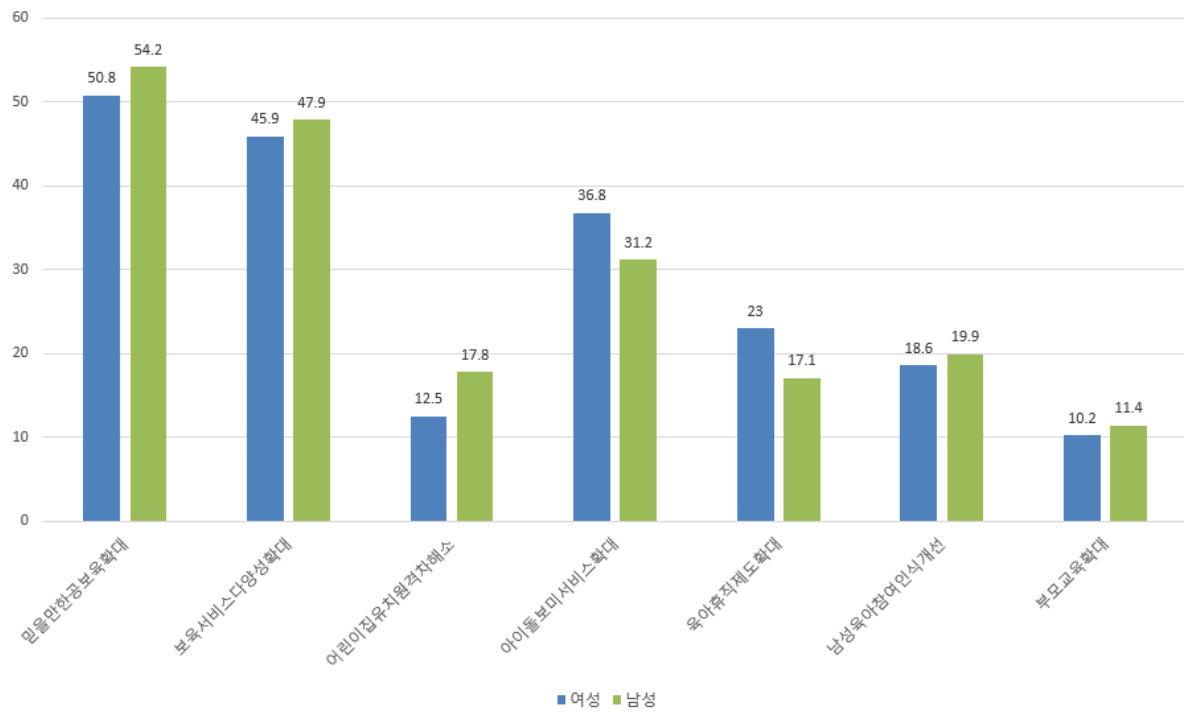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자녀돌봄지원정책 우선순위** : 인천광역시에서 향후 5년간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믿고 맡길 만한 공보육 확대’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다양성 확대’(46.9%), ‘직장인 부모 육아휴직 제도확대’(34.0%) 순으로 나타났다. ‘믿을 만한 공보육 확대’에서는 남성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에서는 여성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13]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인천광역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1+2순위)

단위: %



출처 :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3영역 정책과제

3.1. 모·부성권 보장 및 제도지원

3.1.1. 제도 홍보 및 활성화

□ 목적

-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원
- 저출생에 대응한 난임치료 근로자 휴가 활용률 제고

□ 사업내용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 및 홍보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공무원→출자출연기관→민간기업) 캠페인
 - 남성육아 휴직 근로자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난임치료휴가 인식개선 및 제도이용률 제고
 -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직장 내 난임치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인식 개선
 - 난임치료휴가 활용률 제고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업무 추진
- 협력부서 및 기관 : 여성정책과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	계획수립	전담기관 설치	시행	시행	시행
② 난임치료휴가 인식개선 및 제도이용률 제고	계획수립	전담기관 설치	시행	시행	시행

*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제정, 2024년 일·생활 균형 센터 설립 후 세부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지원), 제1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1.2. 남성의 육아참여 권리 확대

□ 목적

- 부모로서 남성의 육아참여 권리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
- 공공시설에서 남성의 실질적인 돌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간 조성 (1차 미추진사업으로 개선 추진 필요)

□ 사업내용

- 인천아빠의 자조모임 활성화
 - 남성들의 육아참여 지원 및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 육성
 - 아빠들의 육아 고민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남성 육아참여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 남자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영유아정책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아빠의 자모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다각화	운영확대	운영확대
② 남성 육아참여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가이드 마련	점검	개선조치	개선조치	개선조치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2.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지원

3.2.1. 인천시 중소기업 제도 지원

□ 목적

- 인천시 기업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확대
- 인천시 소규모사업체 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일·생활 제도 활용지원
 - 기업대상 일·생활 균형 정책 및 정보제공
 - 기업맞춤 제도 조사 및 설계/찾아가는 기업교육 및 컨설팅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색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업무 추진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중소기업 일·생활 제도 활용지원	추진기반 조례제정	추진기반 설립	계획 수립	시행	시행

*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제정, 2024년 일·생활 균형 센터 설립 후 세부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3.2.2. 가족돌봄 및 여가·재충전 지원

□ 목적

- 자녀양육부모 중심의 일·생활 균형제도의 대상 확대
- 인천시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생활 균형 지원
- 아픈 가족(부모,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있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 근로자의 재충전을 통한 역량강화 및 업무생산성 증대

□ 사업내용

- 인천시 가족돌봄 휴가사용 현황조사 및 인식개선
 - 인천시 기업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현황 조사
 - 제도활용을 위한 인식개선 및 기업지원
- 근로자의 여가 및 재충전(역량강화 등)을 위한 휴가활용 지원
 - 소규모 작업장 근로자의 여가 및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업무 추진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인천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시 가족돌봄 휴가 사용 현황조사 및 인식개선 *	추진기반 조례제정	추진기반 설립	현황 조사	인식 개선	제도 사용지원
② 근로자의 여가 및 재충전 (역량강화 등)을 위한 휴가활용 조사 및 인식개선 *	추진기반 조례제정	추진기반 설립	현황 조사	교육 지원	제도 사용지원

*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제정, 2024년 일·생활 균형 센터 설립 후 세부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3.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및 추진체계 마련

3.3.1. 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 목적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지원을 위한 인천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 확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 기관 누적수 확대 추진(2022년 기업현황: 187개사)
 - 인천시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준비 기업군 지정 및 컨설팅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발굴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 기업홍보 지원, 시장상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 인천시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정책홍보 및 정보전달
 - 인천시 기업텔레이 캠페인 추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업무 추진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산업진흥과, 인천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가족친화인증 기관 및 기업 확대	기업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인천시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발굴	기업 발굴/홍보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추진기반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제정, 2024년 일·생활 균형 센터 설립 후 세부사업 추진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3.3.2.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 목적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 인천시 기업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일·생활 균형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 사업내용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전담부서 설치
 - 일·생활 균형 정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토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추진 부서 인력배치 및 일·생활 균형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지원 기관 운영
 - 기업과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정책 및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기관 운영
 - 인천시 일·생활 균형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세부사업 수행
- 인천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관련기관 협의체운영(일·생활 균형지역추진단 사업)점검 및 운영 확대
- 기관간 협업을 통한 인천지역 일·생활 균형 지원기반마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기구 및 정원 관련 부서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일·생활 균형 업무전담부서 설치	계획수립	부서설치	부서운영	부서운영	부서운영
② 일·생활 균형 업무지원 기관 운영	계획수립	기관설치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③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기존협의체 운영진단	협의체 운영	협의체 확대추진	협의체 협력강화	협의체 협력강화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3.4. 자녀양육 부·모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화

3.4.1.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목적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대
- 안심보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사업 내용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부모 만족도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내 균형 배치
(인천 전체 어린이집 1,803개 중 국공립어린이집 281개로 15.6% 수준, 21.12월기준)
 - 민간부문의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안정적 운영지원
(21년 기준 140개소), 공공형운영비 등 지원
- 인천형 어린이집의 내실화
 - 인천형어린이집(21년 기준 204개소) 선정 및 지원기준 점검
 -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 보육교사 근무량 경감으로 근무환경 개선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영유아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역내 균형점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인천형 어린이집의 내실화	기준점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비용의 보조)

3.4.2.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목적

- 코로나19 위기 시, 사회적 돌봄의 공백 상황에서 돌봄사각지대 문제대두
- 초등돌봄 수요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초등생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2021년 기준 22개소 운영중)
 - 맞벌이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일상적 지원방안 마련(검토 및 시행)
- 인천광역시 지역돌봄공동체 기반 마련
 - 아동돌봄협의회 정기적 운영과 돌봄지원에 대한 사항 협의 및 조정
 -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 및 군구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수급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아동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초등생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확충 및 운영	확충 및 운영	확충 및 운영	운영	운영
② 인천광역시 지역돌봄공동체 기반 마련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아동복지법」 제44의 2(다함께 돌봄센터)

3.4.3. 가구 특성별 맞춤형 돌봄 강화

□ 목적

-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지원시설 확충

□ 사업내용

- 인천맘센터 설립(*인천시 여성가족국 계획안 참조)

-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정보 제공(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자리 등)
- 가족유형별 지원정책 정보 제공
- 여성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정보 제공
- 다양한 양육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맞벌이부모,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장애아가구 등 다양한 양육자 가구의 맞춤지원
- 영유아 돌봄공간 활용의 다각화
 -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 설치 확대
 -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기존사업 확대, 21년 기준 선정 및 확충 총 36개소)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영유아정책과, 가족다문화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광역거점기관: 미추홀구)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인천맘센터 설립	계획수립	설립	운영	운영	운영
② 다양한 양육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② 영유아돌봄 공간 활용의 다각화	설치운영	설치운영	설치운영	확충	확충

□ 추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3.5. 돌봄종사자 지원 기반 마련

3.5.1. 돌봄종사자 지원기반 제공

□ 목적

- 돌봄종사자의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돌봄노동의 가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인식확산
- 돌봄종사자의 근로권 보장 및 서비스 지원

□ 사업 내용

- 돌봄노동 통계 및 현황자료 생산 및 관리(직업유형별)
 - 인천시의 돌봄종사자, 관련업종, 서비스내용 등 조사
 - 돌봄노동 현황자료 지속적 생산 및 관리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인식개선사업
 - 홍보자료 작성 및 다각도로 인식개선사업 추진
- 돌봄 종사자 지원 거점기관 마련
 - 상담서비스, 보수교육 지원
 - 건강관리, 쉼과 휴식을 지원하는 공간제공
-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 및 서비스 지원

- 남성 요양보호사 중장기 확대 방안 마련
- 돌봄수혜자의 성별을 고려한 서비스 인력 배치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복지서비스과, 노인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돌봄노동통계 및 현황자료생산	계획수립	현황조사 (직종선택)	현황조사 (직종선택)	현황조사 (직종선택)	통계자료 지속관리
②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수립 인식개선	인식개선	인식개선	홍보 다각화	홍보 다각화
③ 돌봄종사자 지원 거점기관 마련	검토	계획수립	공간마련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④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 및 서비스 지원	중장기 방안수립	인력양성	인력양성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4.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영역 현황 및 수요

- **높은 범죄발생 건수** : 2020년 전국 시도별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 전국 평균은 29.76건이며 인천시는 29.9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범죄발생 건수가 보고되었다.
- **여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인천에서의 성매매 검거 수는 2020년 199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는 소폭의 증감만 관찰되고 있다. 여성폭력의 특성상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의 일부만 검거되는 상황에서 실제 범죄의 발생 건수는 검거 건수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15> 전국·인천의 여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

구분	가정폭력 범죄 검거		성폭력 범죄 검거		성매매 범죄 검거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2017년	38,583건	2,513건	31,041건	2,430건	10,782건	1,278건
2018년	41,905건	2,531건	30,045건	2,109건	6,900건	843건
2019년	50,277건	3,297건	29,971건	2,070건	—	481건
2020년	44,459건	2,835건	28,137건	1,895건	—	199건

출처: 경찰청(2021)

- **신종 성범죄 발생의 증가** : 2018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32,104건으로 2009년에 비해 두 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신종 폭력범죄의 발생으로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디지털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방식이 정교해지고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인터넷·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 온라인 그루밍, 악의적 합성영상 유포 등의 신종범죄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표 VI-16>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범죄 유형	발생	2009	2012	2018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834	2,462	6,085
	비율	4.8%	10.5%	19.0%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	761	917	1,378
	비율	4.4%	4.0%	4.3%
성폭력범죄(전체)	발생건수	17,377	23,365	32,104

출처: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며 범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청소년 자신이 디지털성범죄의 가·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10대의 12.7%, 20대의 11.6%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오랜 시간 머물며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 VI-17> 온라인 그루밍 피해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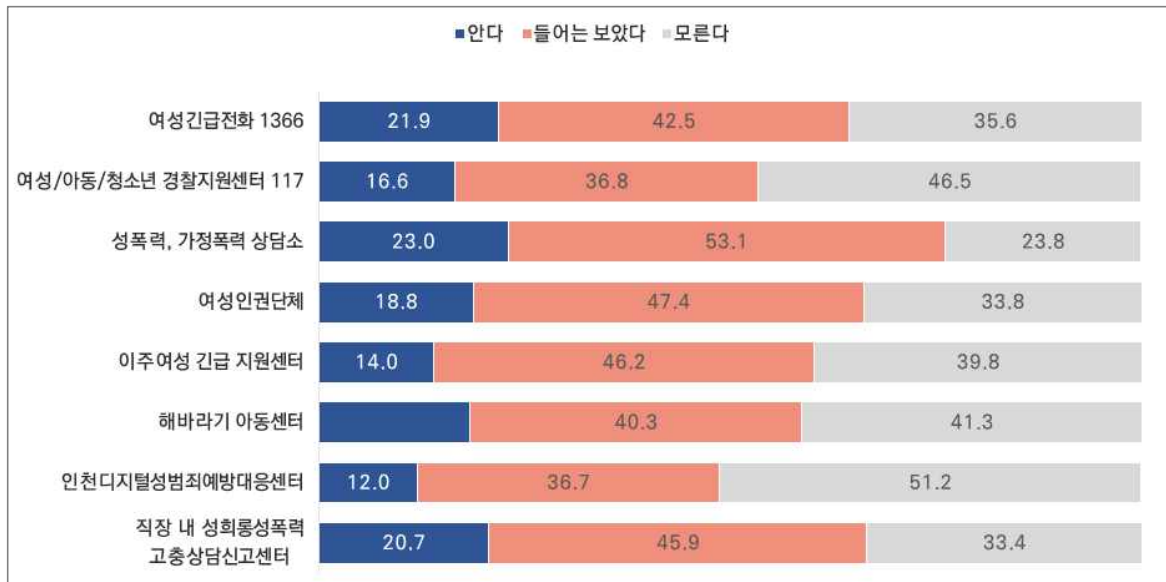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있다	12.7	11.6	10.0	7.8	6.1	1.5
없다	87.3	88.4	90.0	92.2	93.9	98.5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 스톱킹 범죄의 특성상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톱킹이 폭행·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으로 스톱킹이 범죄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다.

[그림 VI-14] 여성폭력 대응 기관 인지도

단위: %



- **여성폭력 대응기관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지도**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기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기관별로 12~23%에 머물고 있어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을 나타나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야기되는 성별 건강불평등** :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길지만,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건강수명’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은 86.3세지만 건강수명은 74.7세로 여성은 11년 이상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유지하며, 이 기간은 남성보다 길었다. 노인여성 1인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건강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의 성별 건강 격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 성별 건강격차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2014년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단에서는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여성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을 통해 성별 건강권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건강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건강 관련 정책의 필요성 :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청소년의 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강화(3.4점)를, 남성은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3.3점)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표 VI-18> 건강 관련 정책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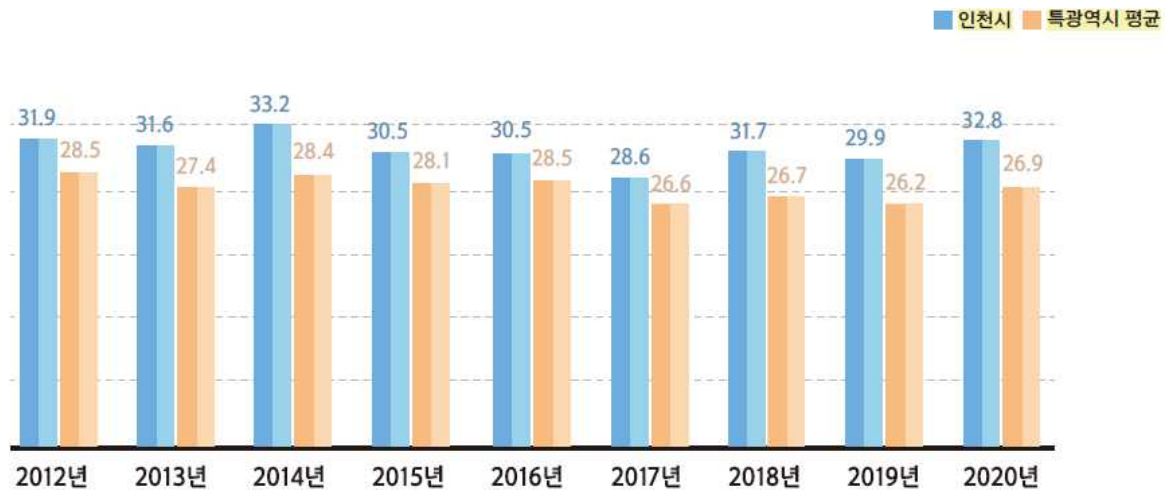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성별	부정	긍정
청소년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남성	11.3	88.7
	여성	7.1	92.9
월경 건강 보장	남성	19.7	80.3
	여성	16.9	83.1
피임법 상담 서비스	남성	10.5	89.5
	여성	7.5	92.5
임신 중단(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	남성	20.5	79.5
	여성	13.9	86.1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남성	9.7	90.3
	여성	8.6	91.4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	남성	9.9	90.1
	여성	8.4	91.6

출처: 인천여성가족재단(2022). 인천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은 빈번하게 호소된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인식 수준에도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2021년 「한 눈에 보는 인천생활, 인천사람」에서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지난 9년간 대체로 30% 이상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2.3%로 남성의 2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여성(30.4%)은 남성(37.3%)보다 6.9%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에게서 흔히 보고되는 만성질환 및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성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15] 연도별 인천시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한 눈에 보는 인천사람, 인천생활(2021)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권 보장**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권 보장 확대가 필요하므로 성별뿐만 아니라 여성 내 세대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 대한 건강보장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함.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천시는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20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동시에 성별 건강형평성 달성 및 성인지적 건강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모성 건강 보호에서 확장되어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

- **청소년 임신부 지원** :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건강권 지원 또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의 의학적 위험도가 높은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생애 빈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10대 산모의 영아사망률은 상대적으로 16.2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군인 25~29세(2.2명)와 비교하였을 때 약 8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로 사용이 가능하다.

- **의료 사각지대 점검** : 지역과 대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동형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여성, 이주여성, 저소득 여성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4영역 정책과제

4.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기반 및 환경 조성

4.1.1.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 목적

- 피해자 비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여성 차별적인 사회문화와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폭력을 예방함.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 운영
- ‘여성폭력 OUT! 인천’ 캠페인을 통해 성범죄 없는 인천 조성
- TV 공익광고, 온라인 게시판,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사업내용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공모 및 활동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공모함. 캠페인 공모 및 운영의 과정에서 시민과 지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캠페인 활동
 -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 근절 및 정책 홍보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의 기관, 서비스 및 정책을 함께 홍보하여 시민의 인식 및 이용률을 향상
- 시민과 함께 하는 폭력추방주간 행사 추진
 - 관 중심의 일방적 사업 운영이 아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 근절 활동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대변인, 여성폭력 대응 유관기관, 인천시 언론기관 (방송사 및 신문사), 인천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공모 및 활동	계획재설정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②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추방주간 행사 추진	계획재설정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홍보)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4.1.2.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 목적

- 폭력예방교육의 질 개선 및 폭력예방 강사와 폭력예방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 수요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폭력예방교육 개발
- 폭력예방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

□ 사업내용

-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1차 사업에서 선정된 폭력예방 거점기관에 대한 평가 및 기능 제고
 - 폭력예방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폭력예방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사항과 교육추진실적 등을 관리·점검
-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수요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방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관련기관, 여성권익시설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계획재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계획재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성인지 교육),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4.1.3. 안전 환경 조성

□ 목적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시민들의 일상에서 불안감 감소
- 여성폭력 대응기관들의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강화

□ 사업내용

- 여성폭력 대응기관 시설안전 평가
 - 2020년 인천시 안전관리계획에 「가정·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구축」 지표가 선정되어 있음.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을 하기 위한 안전환경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평가 실시
 - 안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 인천형 안심지킴이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지역환경 개선사업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안심지킴이집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의식 고양, 안전마을 네트워크 구성
-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및 운영 점검
 -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을 중심으로 설치 확충. 택배기사 사칭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 제공
 - 무인안심택배함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기존의 택배함 운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의 안전 환경 구축
 - 1인 가구 네트워크 형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가구유형의 다양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안전지도(CCTV, 안전비상벨, 안심지킴이집 위치 및 이용법 설명)를 제작 및 배포, 범죄예방 안전물품(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및 안전방법창 지원, 주민센터 불법 촬영 카메라 자가 점검 장비 대여 서비스 등을 지원함.
 - 여성범죄 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여성 1인 점포의 안전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안심키트 제작·배포
 - 1인 점포를 운영하며 폭력예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여성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안전정책과, 인천경찰청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폭력 대응기관 시설안전 평가	계획재수립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② 인천형 안심지킴이 확대	계획재수립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③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및 운영 점검	계획재수립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④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의 안전 환경 구축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4.2. 신종 여성폭력 대응 및 폭력 취약계층 지원 강화

4.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목적

- 불법촬영장비 방법 강화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디지털 성범죄 전담센터 설치·운영으로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구조 강화 및 피해자 인권 보호

□ 사업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갈수록 심각해지는 변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대처교육 강화
 - 일반시민, 아동·청소년, 공무원 등 대상에 따른 가·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함. 단체 채팅방에서의 장난, 사적 사진 공유 등이 의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경고문을 부착하여 시민의 경각심 고취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정기 점검 강화
 -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을 정기적으로 반복. (2018년 시군구 총 381대의 탐지장비를 구입)
 - 민관경 합동점검 및 군구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과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점검을 통합 관리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확대
 - 불법영상물 삭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지원
 - 디지털성범죄의 적극적 예방 및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여성폭력피해 관련 통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지속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으로 그 파급력이 매우 강력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범죄여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정기 점검 강화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③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확대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지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 계획의 수립)

4.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 목적

-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성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여성폭력 예방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 2021년 중앙정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근거하여 인천시 「스토킹범죄 처벌 기본 조례(가칭)」 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처벌 기본 조례(가칭)」에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지원 절차 방안을 제시
-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로 보다 엄중하게 다루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범죄행위로서의 스토킹과 처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
 - 데이트폭력 또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 제공(친밀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전달)
 - 폭력피해 상황에서의 대처방안과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 적극적 홍보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상담 및 회복 지원
 -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젠더폭력 법률 상담 지원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스토킹 피해자가 포함되었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필요함.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폭력발생 초기에 효과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폭력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함.
- 데이트폭력 또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정다툼으로 여겨지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뭇. 데이트폭력의 축소 및 왜곡, 피해자 낙인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경찰청, 여성권익시설, 교육청, 여성폭력 OUT! 서포터즈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조례제정 안 작성	조례 공포·시행	시행	시행
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등)

4.2.3.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 목적

- 성차별적이고 젠더 폭력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
- 왜곡된 성문화 및 디지털 성범죄 확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청소년 성매매 근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이 의도와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장난처럼 성범죄가 발생함.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교육을 통해 가·피해를 방지
 - 성문화 체험관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역전담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사업(드롭인 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 온라인 그루밍,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유입 예방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경찰청, 청소년 상담기관, 여성폭력 대응 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계획수립/프로그램 개발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2.4.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목적

-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확대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강화로 숨겨진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제공

□ 사업내용

-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교육의 내실화
- 교육대상을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 및 돌봄제공자,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기업 등으로 확대함.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또한 확대하여 장애인 학대를 미연에 예방, 초기에 발굴 및 신고의 중요성을 교육함.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여성폭력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상설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함. 학대발생 장소로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및 거주시설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협업하여 학대 의심 사례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재가 장애인의 적극적으로 잠재적 폭력피해자를 발굴함.
- 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 비장애인 대상의 피해자 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함.
 - 2021년에 개소한 인천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시 교육청, 인천경찰청,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 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②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4.2.5.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대응 지원

□ 목적

- 이주여성 지원 및 폭력예방교육 강사로의 양성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로 폭력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개입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긴급·장·단기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비 및 생계비, 법률지원과 출국지원 등 긴급 지원
- 이주여성 폭력예방 전문강사 및 통역사 양성 및 파견
 - 이주여성이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폭력과 문화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양성, 이주여성 간의 공감대 확산 및 일자리 확충
 -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지원, 상담지원 및 위기상황 개입 지원(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와의 협력)

■ 이주여성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폭력예방교육을 이주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가족 및 상담통역사로 확대
-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 확장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 이주여성 자조모임 형성을 적극 지원, 정보 교류 및 폭력위기가정 발굴·지원 네트워크 형성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경찰청,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이주여성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 및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이주여성 폭력예방 전문강사 및 통역사 양성 및 파견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이주여성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4.3. 여성폭력피해 지원 체계 강화

4.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목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협업 강화로 대응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 확장
- 민-관-경 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지원 제공
- 상담 대상 및 지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지원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정기적 합동사례회의 운영 등 지원
-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행정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대응 민-관-경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 상담·치료서비스의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인천시 35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의 ‘찾아가는 가정·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해 상담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방문, 적극적으로 취약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한 실질적 지원 제공함.
 - 지역의 보건소·면사무소 등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면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함.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 성·가정·성매매·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자 및 시설 지원 확대
-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조모임 지원 및 자립·자활 지원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법무담당관, 인천경찰청, 여성권익시설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업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충 계획 및 시행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4.3.2.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목적

-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여성폭력 대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보험 지원으로 종사자 보호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여성폭력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폭력 대응 교육
 -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 사회복지사, 법률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협업이 필요함.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 부재로 피해자의 인권 침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및 여성폭력 대응에 관한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기관에 따라 여성폭력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종사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야간상담에 따른 안전귀가 교통비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
- 기관 종사자 트라우마 및 소진 방지 상담 지원
 -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업무에 관한 근로 상담 제공
 - 여성폭력 대응기관 종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보험 지원
 - 여성폭력 가·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민원 및 소송에 대해 기관의 책임보험을 지원하여 종사자를 보호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인천경찰청, 여성권익시설,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폭력피해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폭력대응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기관 종사자 트라우마 및 소진 방지 상담 지원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④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보험 지원	검토 및 수요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비의 보조)

4.4. 성인지적 건강정책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4.4.1. 제도적 기반 및 공공성 강화

□ 목적

-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성인지적 건강정책의 기반 마련
- 인천시 여성건강 현황 분석 및 통합 자료 구축

□ 사업내용

-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별 건강 형평성 개선
- 현행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보건정책 추진 근거 마련 필요
-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실태조사 및 연구 분석을 통해 건강 현황 및 추이 파악
-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별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연령대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임신·출산, 환경 등 신체변화 및 연령대별 여성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 제공
 -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독거노인, 거동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선 안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1~ 5.(생략)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신 설>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1. ~ 5.(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때 <u>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선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u>성별 실태 조사</u> 및 분석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u>건강생활실천 사업</u>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u>성별 건강생활실천 사업</u>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여성정책과,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검토	조례제정 안 작성	조례 공포·시행	조례 시행	조례 시행
②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살실태 조사의 실시 등), 제12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4.2. 청소년의 건강 증진

□ 목적

- 성차별적 인식 개선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로 건강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 및 캠페인
 - 정형화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외모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비판
 -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캠페인 운영 및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지원
-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및 안전한 피임정보 제공
 -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인지적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지원. 성적 자기결정권, 건강한 성생활과 안전한 피임, 임신·출산·양육, 데이트 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지적 교육 제공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체험형·활동형 성교육 확대, 청소년의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저소득가구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
 - 브랜드, 모델, 크기 등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토록 바우처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증진과, 여성정책과,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 및 캠페인	검토 및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및 안전한 피임정보 제공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 기관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4.4.3. 모·부성 보호의 다각화

□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치료비 지원 확대로 출산을 향상 도모
- 다차원적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 증진
-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비용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출산권 보장

□ 사업내용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인공수정 건수 및 비용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한의약 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무자녀 부부의 정관·난관 복원시술 비용 보조
-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산모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이를 위한 상담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 산전·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신생아)의 건강 증진 도모
 - 미혼부모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 및 육아·가사활동 지원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영유아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협력부서 및 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미혼모 보호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 연도별 추진 계획

사 업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①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③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비용 지원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VII. 정책과제 목록



VII

정책과제 목록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1.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1-1. 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1-1-1. 아동·청소년 기관종사자 성평등 교육	① 보육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영유아정책과	교육횟수	신규
	②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아동정책과	교육횟수	신규
1-2. 성평등 문화확산				
1-2-1.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여성정책과	프로그램내용	기존
	②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여성정책과	프로그램내용	신규
	③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지원	여성정책과	상영횟수	기존
1-2-2.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① 성차별 모니터링단(시민/청소년)의 교육과 활동 지원 강화	여성정책과	활동횟수	기존
	② 지역 대중매체 성차별 실태점검 및 확산	여성정책과	실시	신규
1-2-3. 디지털 시민성 함양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육청	수강인원	기존
	② 시민 대상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육협력 담당관	수강인원	기존
1-2-4. 지역여성 문화유산 발굴 및 확산	① 지역여성 역사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여성정책과	확산횟수 예산액	기존
	② 지역여성사, 여성 인물 발간 및 확산, 아카이빙 구축	여성정책과	확산횟수 예산액	기존
	③ 지역여성사 교육/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교육청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개발여부 참여인원	신규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1-3. 성평등정책 추진환경 정비				
1-3-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양성평등위원회 책무성 제고	여성정책과	운영횟수	기존
	②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정책과	시행여부	기존
	③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 강화	여성정책과	시행여부	기존
	④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구 연계강화	여성정책과	시행여부/ 개최실적	기존
1-3-2. 양성평등 기금 운용 활성화	①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 확대	여성정책과	사업비 증가	기존
	②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	여성정책과	시행여부	기존
	③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	여성정책과	평가보고서	신규
1-3-3.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	①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	여성정책과	정책개선율	기존
	②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	예산담당관실 회계담당관실 여성정책과	반영 사업수	기존
	③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	분리통계 실시	기존
	④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강화	여성정책과	교육횟수	기존
1-4.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1-4-1.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① 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성평등 교육	여성정책과 의회사무처	교육횟수/ 교육인원	기존
	② 인천시 및 군구 여성의원 연석회의 개최	여성정책과 의회사무처	운영횟수	신규
	③ 성 인지적 의정모니터링 활동 지원	여성정책과 의회사무처	활동횟수	기존
1-4-2. 공공 행정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①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30%)	인사과	4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신규
	② 인천시 주요부서의 여성임용 기회 확대	인사과	부서별 임용확대	기존
	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재정관리 담당관실	여성관리자 비율	기존
	② 공공기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재정관리 담당관실	여성참여율	기존
1-4-3. 여성시민 역량강화	① 여성인재 발굴 및 운영 내실화	여성정책과	등록인원	확대
	②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정책과	/활용횟수 교육만족도	확대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2.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2-1.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조성				
2-1-1. 고용기회의 성평등 제고	① 성평등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여성정책과	실시회수	신규
	② 성별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	여성정책과	실시회수	신규
2-1-2. 성평등노동 정책 추진체계 강화	① 인천 여성노동권익 지원기능 강화	여성정책과	설치여부	신규
	② 여성일자리와 성평등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 신설	여성정책과	설치여부	신규
2-1-3. 성별임금격차 해소	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완화기반 조성	여성정책과	제도 도입 여부	신규
2-1-4.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①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여성정책과	선정기업수	확대
	②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여성정책과	교육지원회수	신규
	③ 소규모 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여성정책과	참여기업수	신규
2-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2-2-1.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응	①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학생 역량강화지원	여성정책과 전략산업과	교육 과정수	기존
	② 여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	여성정책과 투자창업과	지원건수	기존
	③ 지역공동체형 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지원건수	기존
	④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지원건수	신규
2-2-2.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① 인력 및 기술 수요파악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여성정책과 경제정책과	과정 개발건수	기존
	②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정책과	참여인원	기존
2-2-3. 취약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및 특수고용여성노동자 실태조사	여성정책과	과제건수	신규
	② 생애주기별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여성정책과	이용자수	신규
2-2-4.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활성화 지원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및 전문 역량제고 지원	여성정책과	개최횟수	기존
	② 경력단절위기 여성근로자 상담서비스 확대	여성정책과	상담실적	확대
	③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정책과	지원건수	신규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3.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3-1. 모·부성권 보장 및 제도지원				
3-1-1. 제도 홍보 및 활성화	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 및 홍보	검토중	이용자수	기존
	② 난임치료휴가 인식개선 및 제도이용률 제고	검토중	홍보건수 이용자수	신규
3-1-2. 남성의 육아 참여 권리 확대	① 인천아빠의 자조모임 활성화	영유아정책과	운영건수	기존
	② 남성육아참가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영유아정책과	설치건수	신규
3-2.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지원				
3-2-1. 인천시 중소기업 제도지원	① 중소기업 일·생활 제도 활용 지원	가족다문화과	서비스지원건수	신규
3-2-2.가족돌 봄 및 여가·재충전 지원	① 인천시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조사 및 인식개선	가족다문화과	조사, 홍보건수	신규
	② 근로자의 여가 및 재충전(역량강화 등)을 위한 휴가활용 지원	가족다문화과	조사, 홍보건수	신규
3-3.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및 추진체계 마련				
3-3-1. 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①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확대	가족다문화과	컨설팅건수 인증기관수	확대
	② 인천시 일·생활 균형 선도기업 발굴	가족다문화과	발굴건수	기존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가족다문화과	캠페인, 홍보건수	확대
3-3-2. 일·생활 균형 운영체계 구축	①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 전담부서 설치	가족다문화과	전담부서 설치	신규
	② 인천시 일·생활 균형 업무지원 기관 운영	가족다문화과	지원기관 운영	신규
	③ 인천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가족다문화과	협력 건수	확대
3-4. 자녀양육 부·모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화				
3-4-1.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영유아정책과	부모만족도	확대
	② 인천형 어린이집의 내실화	영유아정책과	부모만족도	기존
3-4-2.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① 초등생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정책과	개소수, 부모만족도	확대
	② 인천시 지역돌봄공동체 기반 마련	아동정책과	운영건수	기존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3-4-3. 가구 특성별 맞춤형 돌봄 강화	① 인천맘센터 설립		아동정책과	설치, 서비스지원	신규
	② 다양한 양육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영유아정책과	이용 가구수	기존
	③ 영유아 돌봄공간 활용의 다각화		영유아정책과	이용자 만족도	확대
3-5. 돌봄종사자 지원 기반 마련					
3-5-1 돌봄종사자 지원기반 제공	① 돌봄노동 통계 및 현황자료 생산 및 관리(직업유형별)		복지서비스과	현황조사	확대
	②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복지서비스과	포럼개최, 홍보건수	확대
	③ 돌봄 종사자 지원 거점기관 마련		복지서비스과	시설설치, 서비스 지원건수	신규
	④ 남성요양보호사 양성 및 서비스 지원		노인정책과	현황조사, 인력양성	신규
4.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기반 및 환경 조성					
4-1-1.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①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공모 및 활동		여성정책과	개최건수	확대
	② 시민과 함께 하는 폭력추방주간 행사 추진		여성정책과	개최건수	확대
4-1-2. 수요자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여성정책과	운영횟수	확대
	②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성정책과	교육횟수	기존
4-1-3. 안전 환경 조성	① 여성폭력 대응기관 시설안전 평가		여성정책과	지원실적	확대
	② 인천형 안심지킴이 확대		여성정책과	설치 개소수	확대
	③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 및 운영 점검		여성정책과	설치건수, 이용률	확대
	④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의 안전 환경 구축		여성정책과	지원건수	신규
4-2. 신종 여성폭력 대응 및 폭력 취약계층 지원 강화					
4-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과	개최건수	확대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정기 점검 강화		여성정책과	점검건수	신규
	③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확대		여성정책과	지원실적	신규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4-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④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지속	여성정책과	연구물실적	확대
4-2-2.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① 스톱킹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여성정책과	조례 제정	신규
	② 스톱킹,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과	캠페인건수	기존
	③ 스톱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상담 및 회복 지원	여성정책과	상담건수	신규
4-2-3. 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성매매 근절활동 추진	①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청소년정책과	참여인원, 건수	기존
	②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여성정책과	상담실적, 이용자수, 캠페인 운영횟수	확대
	③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여성정책과	지원건수	신규
4-2-4.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① 장애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장애인복지과	교육횟수 지원실적	확대
	②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복지과	대상인원	기존
	③ 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과	개소수	기존
4-2-5.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대응 지원	①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 지원	여성정책과	지원실적	기존
	② 이주여성 폭력예방 전문강사 및 통역사 양성 및 파견	여성정책과	파견인원	기존
	③ 이주여성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가족 다문화과	참여인원	기존
	④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가족 다문화과	지원팀	기존
4-3. 여성폭력피해 지원 체계 강화				
4-3-1.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지원	여성정책과	개최건수	확대
	②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여성정책과	개최건수	확대
	③ 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여성정책과	상담 및 교육횟수	확대
	④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여성정책과	참여인원	확대

정 책 과 제		추진부서	성과지표	사업유형
4-3-2.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① 여성폭력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인권 및 폭력 대응 교육	여성정책과	참여인원	기존
	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여성정책과	참여인원, 예산증감	확대
	③ 기관 종사자 트라우마 및 소진 방지 상담 지원	여성정책과	참여인원	신규
	④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보험 지원	여성정책과	지원건수	신규
4-4. 성인지적 건강정책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4-4-1. 제도적 기반 및 공공성 강화	① 여성건강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건강증진과	조례제정	신규
	②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 접근성 강화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인원,건수	신규
4-4-2. 청소년의 건강 증진	①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정책과	참여인원,건수	신규
	②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및 안전한 피임정보 제공	청소년정책과	참여인원,건수	확대
	③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정책과	지원건수	확대
4-4-3. 모·부성 보호의 다각화	① 난임부부 지원 확대	영유아정책과	지원건수	확대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정책과	지원인원	확대
	③ 청소년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	청소년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지원인원	확대

참고 문헌

- 광주여성가족재단(2022).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실적 분석”, Gender Brief 제56호.
- 고용노동부(202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2020년 기준)
- 고용노동부(2017~2020).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대검찰청(2014~2019). 『범죄분석』
- 김미선 외(2020). 『2020 인천 성인지 통계』 .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정란 외.(2022) 『2022 인천 성평등 아젠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 민무숙 외(2011).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국가성평등보고서, 지역성평등보고서 (전년도 통계 기준), 각 년도.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202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인천광역시. 『제2차, 3차, 4차 여성정책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2018~2022)』 . 각 년도.
-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보육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 정승화 외(2021). 『인천광역시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I: 인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인천여성가족재단.
- 정승화 외(2022). 『인천광역시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II: 성평등 노동정책 기반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 인천여성가족재단.
- 정혜원 외(2017).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유정미 외(2018).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충북여성재단.
- 최정호 외 (2021). 『인천시 남성육아휴직의 보편적 사용 활성화 방안』 . 인천시여성가족재단.
- 통계청(2019). 『생활시간조사』 (제5회조사)
- 통계청(2013~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3~2020). 『사회조사』
- 통계청(2013~2019). 『인구동향조사』
- 한경현 외(2018).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 .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광역시.

황영주. (2014). 『젠더주류화 정책의 지방화: 부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한계』. 여성학연구, 24(1), 127-154.

제61회 인천통계연보(인천광역시, 20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D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DB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검색일:2022.10.20.)

부록

부 록

※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지

□ 1 성인용

ID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인천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및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7.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구책임: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 정 란 ☎ 032-517-1977)
- 조사기관: (주)메가리서치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하여 응답내용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연월	()년 ()월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_____ 구/군

I. 양성평등 의식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결혼한 남성은 본가보다 처가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0)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12)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14)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다	①	②	③	④
15)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작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6)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 남녀평등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 매우 불평등			
한국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7년에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 남녀평등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 매우 불평등			
한국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다음은 인천에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를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 ② 임신,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 ③ 가사 및 육아,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 ④ 국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기회
- ⑤ 여성에 대한 폭력
- ⑥ 인터넷 개인방송, 뮤직비디오, 인공지능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 ⑦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 ⑧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교육, 활동에서 성별고정관념
- ⑨ 기타

5. 귀하는 다음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5-1)

그리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5-2)

항 목	[5-1] 교육 여부		[5-2] 필요성 여부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성희롱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2) 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3) 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4) 성매매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5) 성평등·성인지 교육	①	②	①	②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남성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성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성의 성 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해소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들만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경제활동

1. 귀하는 현재 직장이나 자기 사업체(점포나 가게) 등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① 예 (☞ 2번 취업자 질문으로)

② 아니오 (☞ 9번 비취업자 질문으로)

[취업자 및 근로활동자의 경우]

2.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귀하의 “종사상의 지위” 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종사자
⑦ 기타 종사자

[설명]

- 상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일단위인 자
- 무급근로자: 가족이나 친인척 중 무급으로 정규근로시간의 1/3 이상 근무하는 자

3.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귀하의 “고용형태” 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4. 현재 귀하가 일하고 계시는 “직장 유형” 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공무원 (국·공립 교사 및 교수, 군인 포함) ②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사 및 교수, 공기업 포함)
③ 정부투자 출연기관 ④ 100인 이상 기업
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⑥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⑦ 5인 미만 사업체 ⑧ 프리랜서
⑨ 기타 ()

5. 현재 귀하가 일하고 계시는 직장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인천광역시 ② 서울특별시 ③ 경기도 ④ 기타 ()

6. 귀하는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1)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2) 근무시간 (장시간 근로)	①	②	③	④
3) 직장내 가정생활의 병행	①	②	③	④
4) 고용 불안정 (계약기간 등)	①	②	③	④
5) 승진 등 장애 직업전망	①	②	③	④
6) 성희롱 등 성차별적 관행	①	②	③	④
7) 출퇴근의 용이함 (교통, 거리 등)	①	②	③	④
8) 기타 (적어주십시오)				

7.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회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직급이 같더라도 남자 직원의 급여가 여자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 및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직원이 다과를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6)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회사는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비취업자 및 비근로활동자의 경우]

9. 귀하가 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자리가 없어서 | ② 나이가 많아서 |
| ③ 건강상의 이유로 | ④ 가사, 육아 때문에 |
| ⑤ 노부모 부양 때문에 | ⑥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 때문에 |
| ⑦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서 | ⑧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어서 |
| ⑨ 일하고 싶지 않아서 | ⑩ 일할 필요가 없어서 |
| ⑪ 학업 등 아직 일할 때가 아니어서 | ⑫ 기타 () |

10. 귀하는 어떠한 “근로형태” 를 선호하십니까?

- | | |
|-----------------|-------------------------------|
| ① 전일제 근로 | ② 시간제 근로 (☐ 10-1번으로) |
| ③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 | ④ 기타 () |

10-1. “시간제 근로” 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① 아이를 돌보려고 | ② 가사일 때문에 |
| ③ 학업을 위해서 | ④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
| ⑤ 여가를 즐기려고 | ⑥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 ⑦ 기타 () | |

[모든 응답자]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로 인해 다니던 직장(하던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① 결혼 | ② 자녀 출생 |
| ③ 미취학 아동 돌봄 | ④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및 교육 |
| ⑤ 가족 간병 | ⑥ 성희롱이나 성추행 |
| ⑦ 회사의 고용조정 | ⑧ 회사의 폐업, 파산, 도산 |
| ⑨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위치등)악화 | ⑩ 계약 기간 만료 |
| ⑪ 건강 악화 | ⑫ 더 나은 장래 비전 때문에 |
| ⑬ 기타 () | ⑭ 직장 그만 둔 적 없음 |

12. 귀하는 인천광역시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채용 단계의 성차별 예방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등) 보호 방안	①	②	③	④	⑤
3)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4) 돌봄노동의 가치 홍보 및 돌봄일자리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리후생 격차 축소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의 고위직, 관리직 진출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남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Ⅲ. 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

[1~3] 귀하는 다음의 가구 구성원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돌보는 사람]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 중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이 주로 돌보고 가족 이외의 사람이 조금	가족 이외의 사람이 주로 돌보고 가족은 조금	가족 이외의 사람이 전적으로
1) 영아 (만 0~2세)	①	②	③	④
2) 유아 (만 3~5세)	①	②	③	④
3) 초등 저학년(1~3학년) 방과 후	①	②	③	④
4) 장애 아동(만 18세 이하)	①	②	③	④
5) 장애가 있는 성인	①	②	③	④
6)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65세 이상)	①	②	③	④
7) 치매 노인	①	②	③	④

※ 가족이외의 사람이란 베이비시터,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2. [돌봄비용] 가족과 정부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이 주로 부담, 정부가 일부 보조	정부가 주로 부담, 가족이 일부 부담	정부가 전적으로
1) 영아 (만 0~2세)	①	②	③	④
2) 유아 (만 3~5세)	①	②	③	④
3) 초등 저학년(1~3학년) 방과 후	①	②	③	④
4) 장애 아동(만 18세 이하)	①	②	③	④
5) 장애가 있는 성인	①	②	③	④
6)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65세 이상)	①	②	③	④
7) 치매 노인	①	②	③	④

3. [돌보는 장소] 집과 외부기관 중 어디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집에서 전적으로	집에서 주로 돌보고 외부기관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주로 돌보고 집에서 조금	외부기관에서 전적으로
1) 영아 (만 0~2세)	①	②	③	④
2) 유아 (만 3~5세)	①	②	③	④
3) 초등 저학년(1~3학년) 방과 후	①	②	③	④
4) 장애 아동(만 18세 이하)	①	②	③	④
5) 장애가 있는 성인	①	②	③	④
6)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65세 이상)	①	②	③	④
7) 치매 노인	①	②	③	④

※ 외부기관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요양보호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9] 현재 만18세미만(고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자녀돌봄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항목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한다	해당 없음
1)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①	②	③	④	⑤
3) 등하교(등하원) 동행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학교 등 부모참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학원 등 학업일정 관리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놀아주기(실내 및 야외활동)	①	②	③	④	⑤

Ⅳ. 안전 및 건강

1.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	①	②	③	④
2)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별과 관련된 혐오, 비하, 공격	①	②	③	④
3) 온라인 방송 등에서 성적 농담, 성차별적 표현 등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모습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는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1) 부부폭력	①	②	③
2) 데이트폭력	①	②	③
3) 직장 내 성희롱	①	②	③
4) 스토킹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위)	①	②	③
5)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①	②	③
6) 성매매	①	②	③

3. 귀하는 평소에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골목이나 공원 등을 혼자서 이용할 때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4. 귀하는 배우자, 애인,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력을 당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 귀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관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 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2)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6. 귀하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응답)

- ①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다 ②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다
- ③ 관련 전문상담원과 상담한다. ④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⑤ 참고 넘어간다 ⑥ 기타 ()

7. (온라인 그루밍 경험 여부) 귀하는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서 낯선 사람이 대화를 시도한 후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응답)

- ① 가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 ②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다.
- ③ 관련 전문상담원과 상담한다.
- ④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⑤ 참고 넘어간다.
-

⑥ 기타 ()

9.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기 관 명	관여하지 않는다	주위에 알린다	직접 나서서 말린다	관계기관 (경찰 등) 에 알린다
1)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2)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3)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4)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청소년의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①	②	③	④
2) 월경 건강 보장	①	②	③	④
3) 피임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①	②	③	④
4)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5)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6)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 생식기 질환의 예방 과 치료	①	②	③	④

14.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현재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귀하는 다른 조건(성격, 능력, 재력 등)에 비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남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여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Ⅴ. 양성평등 정책

1. 귀하는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없다 ② 별로 관심없다 ③ 약간 관심있다 ④ 매우 관심있다

[2~3]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 분야입니다. 해당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2. 항목에 제시된 분야에 대해 얼마나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3. 항목에 제시된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만족하 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1)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여성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여성 건강권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돌봄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의 특성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 20년 미만 | ⑥ 20년 이상 |

2. 귀하의 “학력” 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2·3년제) 졸업 |
| ④ 4년대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 |

3. 귀하의 “혼인상태” 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미혼/비혼 | ② 기혼(배우자 있음) | ③ 동거(사실혼 포함) |
| ④ 이혼 | ⑤ 사별 | ⑥ 별거 |

4. 귀하의 “가구형태” 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1인 가구 | ② 부부(사실혼 포함) | ③ 한부모 가족 |
| ④ 부모+미혼자녀 | ⑤ 부모+기혼자녀 | ⑥ 3세대 이상 |
| ⑦ 기타() | | |

5. 귀하의 “주거 형태” 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아파트, 주상복합 | ②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 ③ 단독주택 |
| ④ 오피스텔, 원룸 | ⑤ 기타 () | |

6. 귀하의 “장애여부” 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장애있음(등록장애인) | ② 장애있음(미등록장애인) | ③ 장애없음 |
|---------------|----------------|--------|

7. 귀하의 “현재직업” 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무직/퇴직 ⑭ 기타()

8. 귀 닥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세전소득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인천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및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7.

 인천여성가족재단

- 연구책임: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 정 란(☎ 032-517-1977)
- 조사기관: (주)메가리서치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하여 응답내용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연월	()년 ()월
응답자 학년	① 중학교 2학년 이하 (☞ 조사중단) ② 중학교 3학년 ③ 고등학교 1학년 ④ 고등학교 2학년 ⑤ 고등학교 3학년 ⑥ 학교에 다니지 않음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_____ 구/군

I. 양성평등 의식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남편(아버지)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가족부양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엄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7) 남성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직원을 줄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남성의 업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10) 남녀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여성의 욕설, 음담패설, 술 취한 모습은 보기에 더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12) 요즘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남녀평등				매우 불평등
한국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7년에 한국 사회와 인천광역시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매우 불평등				남녀평등				매우 불평등
한국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다음은 인천에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를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 상 성차별
- ②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 ③ 가사 및 육아,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 ④ 국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기회
- ⑤ 여성에 대한 폭력
- ⑥ 인터넷 개인방송, 뮤직비디오, 인공지능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 ⑦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 ⑧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교육, 활동에서 성별고정관념
- ⑨ 기타

5.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 항목들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남성에게 더 어울린다	여성에게 더 어울린다	남녀 간 차이가 없다
1) 공구, 기계를 다루는 일 (ex. 엔지니어 등)	①	②	③
2) 분석적인 사고, 활용을 요하는 일 (ex.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①	②	③
3) 예술·문학·음악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 (ex. 예술가, 화가 등)	①	②	③
4)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ex.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①	②	③
5) 학생을 지도하는 일 (ex. 교사, 강사 등)	①	②	③
6)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지도하는 일 (ex. 정치인, 국회의원 등)	①	②	③
7) 가사 일과 관련된 일 (ex. 요리사 등)	①	②	③
8) 치안을 담당하는 일 (ex. 직업군인, 경찰 등)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남성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성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성의 성 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해소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들만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가족생활 및 가치관

1.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한번 이상 한 집안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상차리거나 치우기 | ② 설거지 |
| ③ 요리하기 | ④ 청소 |
| ⑤ 빨래하기 (널리, 걸기, 개기 포함) | ⑥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음식물 등) |
| ⑦ 집안 수리 (전등 교체 등) | ⑧ 동생돌보기 |
| ⑨ 가족돌보기 (조부모, 환자, 장애가족) | ⑩ 기타 () |
| ⑪ 어떤 집안일도 한 적 없음 | |

2. 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 3번으로 이동 |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 2-1번으로 이동 |
| ③ 잘 모르겠다 / 결정하지 못했다 | → 2-1번으로 이동 |

2-1.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세요.

III. 안전 및 건강

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	①	②	③	④
2)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 별과 관련된 혐오, 비하, 공격	①	②	③	④
3) 온라인 방송 등에서 성적 농담, 성차별적 표 현 등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모습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는 없으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1) 부부폭력	①	②	③
2) 데이트폭력	①	②	③
3) 직장 내 성희롱	①	②	③
4) 스토킹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위)	①	②	③
5)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①	②	③
6) 성매매	①	②	③

3. 귀하는 평소에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골목이나 공원 등을 혼자서 이용할 때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9.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기 관 명	관여하지 않는다	주위에 알린다	직접 나서서 말한다	관계기관 (경찰 등)에 알린다
1)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2)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3)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4)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10.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젠더폭력 발생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력유형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큰 변화 없다
1) 가정폭력	①	②	③
2) 성폭력	①	②	③
3) 디지털 성범죄	①	②	③
4) 스토킹	①	②	③
5) 성매매	①	②	③

11. 귀하는 젠더폭력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음의 기관들을 알고 있습니까?

기 관 명	안다	들어는 보았다	모른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③
2)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117	①	②	③
3)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①	②	③
4) 여성인권단체(여성의전화, 민우회 등)	①	②	③
5)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①	②	③
6) 해바라기 아동센터	①	②	③
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①	②	③
8) 학교 내 성폭력 고충상담센터(ex. 위클래스 등)	①	②	③
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①	②	③

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청소년의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①	②	③	④
2) 월경 건강 보장	①	②	③	④
3) 피임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①	②	③	④
4)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5)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6)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 생식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	①	②	③	④

13. 귀하는 다른 조건(성격, 능력, 재력 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외모가 비교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남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여성에게 외모는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취업	①	②	③	④
	4)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14. 귀하는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15. 귀하는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 ② 마른 편 ③ 보통 ④ 뚱뚱한 편 ⑤ 매우 뚱뚱한 편

16. 귀하는 현재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까?

- ① 다이어트 중임
- ②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않음
- ③ 필요 없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음

IV. 학교생활

1. 귀하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남자가... 여자가...”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자주하는 편이다 ④ 매우 자주한다

2.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교사가 체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절대 반대한다

3. 귀하는 지난 1년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4번 문항으로)

3-1.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어떤 시간에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교과과정(보건, 체육, 사회과 등) ② 창의적 체험활동
- ③ 기타 ()

3-2.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누가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보건선생님 ② 일반교과목 선생님
- ③ 담임선생님 ④ 기타 ()

3-3.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 유용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4. 귀하는 학교에서의 성 교육 필요성 및 확대(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확대 (감소)		
	필요하다	필요없다	확대	감소	현상유지
성 교육	①	②	①	②	③

4. 귀하는 지난 1년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5번 문항으로)

41. 어떤 유형의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습니까?

항 목	교육 여부	
	받았다	받지 않았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2) 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②
3) 성매매 예방교육	①	②
4) 성평등·성인지 교육	①	②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①	②

42.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 교육은 어떤 시간에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① 교과과정 (보건, 체육, 사회과 등) ② 창의적 체험활동
③ 기타 ()

43.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 교육은 유용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4. 귀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특강 형태 ② 가정통신문, 유인물
③ 참여 형태 (ex. 캠페인, 글짓기) ④ 시청각 교재 활용
⑤ 생활체험형 불평등 사례 조사 ⑥ 토론헌기
⑦ 기타 ()

45. 귀하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교육 여부	
	받았다	받지 않았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2) 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②
3) 성매매 예방교육	①	②
4) 성평등·성인지 교육	①	②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①	②

5. 귀하의 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① 그렇다 (☞ 5-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V. 양성평등 정책]으로 이동)

5-1. 귀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복장 지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여학생에게 더 엄격하다

② 남학생에게 더 엄격하다

③ 성별 차이가 없다

5-2. 귀하는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실력 차이가 나서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 체육선생님은 선생님과 성별이 다른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성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신경쓰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V. 양성평등 정책

1. 귀하는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없다

② 별로 관심없다

③ 약간 관심있다

④ 매우 관심있다

[2~3]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 분야입니다. 해당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2. 항목에 제시된 분야에 대해 얼마나 <u>중요</u> 하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3. 항목에 제시된 분야에 대해 얼마나 <u>만족</u> 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만족하 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1)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여성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여성 건강권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돌봄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항목설명]

- 3)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 CEO, 여성 정치인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
 6) 여성 건강권 확보 : 생리대 지급 등 건강 관리 지원
 7) 돌봄 공공성 강화 : 공공형 키즈카페, 보육시설 등 확보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2027)

발 행 인 인천광역시장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TEL. 032-440-2692, FAX. 032-440-8656)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http://www.incheon.go.kr>

54-6280000-000589-13

본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으며 무단 도용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